

민주통일의 길 ③

국토통일에 관한 논문집

국 토 통 일 원

발 간 사

국토통일원 장관 김 영 선



당원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지식인,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대화의 광장을 넓히기 위하여 70년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논문을 현상모집하고 있다.

금년에 응모된 작품은 작년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활용, 진지한 연구태도는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지금 국제정세는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동서의 접근, 미, 중공의 접근등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곧 한국의 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깊은 연관성을 띄고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정세의 정확한 분석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분단이 타의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었다고 해서 통일문제도 타에 의한 인위적일 수는 없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주체적인 노력과 주도역량 배양을 우선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역량의 기반 위에서만이 우리가 목표하는 승공민주통일도 가능할 것이다.

「남, 북이산가족 찾기운동」은 인도적 견지에서 출발한 단일민족으로서의 정당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도 우리의 제안이고 보면 어떻게 하던지 목적인바를 달성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추진력도 국민의 총화가 뒷받침이 되는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통일에 관한 논문들이 대개가 국제정세의 변동을 절대적인 함수 관계로

보는 견지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통일의 대비자세에 있어서도 북피의 태도가 전적으로 중공과 소련의 영향력 지배로만 볼것이 아니라 북피자체의 노선도 독립적인 변수로 보아야 함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란다.

해마다 계속될 작품모집에 있어서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여 마지 않으며, 그동안 작품을 심사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포함한다.

1971년 9월 일

차 례

국토통일을 위한 정치역량 배양방안.....(장 명 봉).....5
② 국토통일에 대비한 지도세력의 육성방안.....(나 석 권) ...66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 발전을 위한 장기정책방향(노 화 준)...120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전문가 훈련방안(송 일 빈)...154

국토통일을 위한 정치역량 배양방안

장 명 봉

목	차
1. 서 론	5. 한국통일문제와 국제환경
2. 국제정치와 한국통일문제의 성격	6. 민주통일을 위한 정치역량 배양책
3. 한국통일문제의 좌표의식	7. 통일정책의 방향
4. 북괴평화통일론의 허구성과 통일전략	8. 통일문제의 전망
	9. 결 론

1. 서 론

8·15해방의 벅찬 감격과 더불어 자유와 독립을 환호하던 조국은 그로부터 4반세기동안 국토분단으로 말미암은 투쟁과 시련의 연속적인 역사의 비운을 겪어아만 했다. 그동안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동족상잔의 싸움터로 만들어 버린 몸서리치는 전쟁을 치뤄야 했고, 쉬지 않고 몰아치는 시련의 물결은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를 태세기고 다가올 미래를 설계할만한 여유를 허락치 않았다. 게다가 이런 비극의 전형으로 시달려온 조국은 이제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칠줄 모르는 불꽃튀기는 남북대립속에 분단현실은 한결 차갑기만 하다. 냉혹한 국제권력정치의 제물로 희생됨으로써 세계사에 또 하나의 실패작을 기록한 한국의 분단은 6·25동란을 비롯한 무수한 유형무형의 비극으로 점철되어 오는 가운데 일층 고정화되어가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간 두동강난 혈맥을 이으려는 민족의 의지는 비정한 국제권력정치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끊임없이 표현돼 왔으나 그것은 세계속의 분단의 한단면이라는 비극적 사실앞에 무참히 좌절되어 왔다. 더욱이 분단 25년의 세월은 어느새 북괴를 목가적 통일론이나 UN의 만장일치만으로는 지워버릴 수도 없는 만만찮은 「힘의 괴물」로 키워놓았고 군사분계선이었던 휴전선

은 이제 「민족분계선」으로 변모할 우려마저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분단 4반세기 역사의 문턱을 넘어선 오늘날 통일에의 강열한 염원이 우리들 마음속에 일기 시작하고 있다. 기실 우리는 오랜 옛날부터 같은 언어와 문화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이며, 이미 1300년전에 이곳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를 세운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다. 따라서 국토를 갈라놓은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들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열해지고 있다. 『강대국간의 적대관계는 그들 주위에 위치한 약소국들간에 심각한 비극을 가져다 주었으며, 모든 분단된 민족은 자연히 국가통일을 희원하게 마련』이라는 「페어뱅크」교수의 말을 원용할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차원에서 「민족국가건설」은 국토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절박한 것으로 제기시켜 주고 있다. 이는 필경 통일국가의 성취가 바로 국가 최대이익인 동시에 국가목표이고 이것이 곧 민족적 최대과업이 되기 때문인 것이며, 한편 이 이상 더 우리는 시련과 도전만을 감수할 수 없고 후퇴와 분열에서만 신음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적 요청 때문인 것이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군사과학의 섭리속에 냉전논리가 수정될 수 밖에 없는 객관적 환경을 스스로 긍정한다면 한국이 분단된 채로 한민족의 생존발전을 이 이상더 저지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 역사적 시점에 처해 지난 4반세기간의 공간속에 비극만을 주연해온 우리는 세계사의 발전에 부응하여 잃어버린 자기좌표를 찾기위한 참된 주체적 역량과 자세를 갖추면서 나아가 「민족국가건설」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서의 통일과업달성을 위한 집요한 접근노력을 집중해야할 시기에 바야흐로 직면했음을 통감한다.

즉 70년대에 접어들어 분류처럼 전개되는 국제조류속에서 우리는 「세계속의 Asia」, 「Asia 속의 한국」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속에서 민족진로의 향방을 모색해야할 운명적인 사명감을 느낀다. 이제 격변의 시대상황속에서 우리는 적화통일에 광분하는 복피에 맞서 한편으로는 자체존립에 직결되는 국가안보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조국의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해야할 이중고적인 사명과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히 저간의 국내의정세는 이러한 사명과 시련의 70년대를 맞은 한국민에게 민족의 통일이란 명제를 더욱 절박하고 생생한 문제로 던져주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인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족 지상과업인 통일문제가 「명분상의 문제」가 아닌 「실천적인 명제」로 민족앞에 부각되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문제는 단순한 상념의 범주에서가 아니라 상념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힘으로써 기필코 달성해야

할 민족의 필연적 과제인만큼, 우리는 통일문제를 우리 문제로 진지하게 다뤄야 하며 우리의 주체적 노력과 정책에 기반을 둬으로써 열강의 권력정치에 의존하는 피동성을 탈피, 육된 민족사의 반복이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이는 『세계사는 민족의 심판』이라고 한 Hegel의 말처럼 한국민족의 심판없이 세계사만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며 한국의 장래를 이 이상 더 국제권력정치의 제단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된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상 통일문제처럼 국제적으로 delicate한 문제는 없다는 점을 통찰하여 우리의 주체적 역량 즉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군사적 제역량 확보와 자세정립 다시 말해 국가체제 재정비가 통일접근에의 일차적 단계임을 감안, 이의 역량배양에 우리의 온갖 노력이 총경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통일문제의 좌표의식, 북괴의 통일전략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한 현금의 국제정세등을 개관하고 다음에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의 민족적·주체적 제역량 확보문제에 있어 그중 정치적 역량배양에 중점을 두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국제정치와 한국통일문제의 성격

① 흔히 권력정치(Power Politics)라고 불리는 국제정치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며¹⁾ 이는 국제권력 관계를 현상대로 지속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는 정책 즉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으로 나타난다²⁾. 이러한 정책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가간의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임은 물론이다. 그런 정책은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유리한 지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자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유지정책에는 융화정책(Appeasement Policy), 국제협조정책(Policy of Concert) 그리고 시위정책(Policy of Demonstration) 등이 있는 바³⁾, 전후 국제질서는 바로 미소양대국이 이러한 정책을 적시적소에 구사하면서 국제관계를 양극화(bipolarization)시켰고, 국제긴장의 격화와 완화의 파동을 상호교착시켜온 연속적 과정이었다. 이른바 「Yalta 체제」에 의한 「미소 2원체제」가 세계정책의 기축을 이뤄왔고, 더욱이 Khrushchev 이라는 미·소평화공존노선인 Pax Russo-Ame-

1. 조재관, 국제정치학, 법문사, 1968, p. 124

2.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3rd, 1961, p. 40

3. 조재관, Ibid. pp. 89~97

ricana가 그 바탕을 이뤄왔다.

이같은 국제정치의 일반적 논리에 따라 한반도분단을 살펴보면 그 역사의 기복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제정 Russia에 제안했던 한반도분할안이나 또 Russia가 일본에 제안했던 한반도 분할안이나 미소 전략가들이 판단하는 한반도분할안이나 일본이 패망후, 38선 이남까지 내려왔던 소군이 스스로 38선 이북까지 철퇴한 사실 그리고 6. 25동란때 압록강까지 진격한 한·미연합군이 다시 38선부근까지 후퇴한 지점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모두 세력균형이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정학상 「한국은 극동의 균형추」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한반도가 극동세력균형의 중심지대에 위치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지정학상 Spykman이 말하는 변연지역(Rimland)에 해당하는 곳이며⁴⁾ 오늘날 「한국은 중동분규 다음가는 국제적 위험지대」라는 Reischauer 교수의 표현⁵⁾ 역시 고정변수로서의 지리적 여건이 가져다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국제관계라는 함수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속에 한반도는 극동의 국제정치속에서 미·소양극체제와 그 세력균형은 단순한 군사적 분계선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을 정치적 분단으로 질서화시켜 버렸다. 그래서 6·25와 같은 한반도 양극질서의 변화기도는 양극화의 국제정치에 의해 저지되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양분은 극동국제정치의 양극체제의 상징이며, 동시에 극동의 양극체제에 매어 있는 약소국의 운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극동의 양극체제가 변하지 않는한 여하한 세계정세의 변화도 한국통일에의 호조건 형성을 가능케 하지 않을 것이며, 이같은 한반도분단과 극동의 국제정치와의 관계는 한국의 통일을 위한 approach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② 이상과 같이 볼때 오늘날 한반도 현상타파의 시도는 본질적으로 전후처리로서 미·소간에 합의된 세계적 규모에서의 세력분할선을 내용으로 하는 미·소양대국간 현상유지에 대한 정면도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전후질서유지의 바탕으로 미·소간에 합의된 Yalta 체제는 26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도 독일과 한국등 분단국의 통일을 서로 용인하지 못하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견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미·소관계의 국제정치적 실태와 성격의 변천은 독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거니와 한반도의 분단현상을 한층 더 동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점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해 이처럼

4. 정경연구, 69년 5월호 pp. 50~58, 8월호 pp. 162~168, 차운교수논문참조

5. 국회보, 국회사무처, 1970년1·2월호 p. 72 참조

미·소양국이 서로의 체제나 이해에 상반되는 한국통일을 원치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앞으로도 미·소간의 화해 「무드」는 높아 갈 것이며 Pax Russo-Americana는 차후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볼때, Yalta 체제에 의해 경직되어 온 한반도분단 현상은 더욱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미·소협조체제(U.S.-U.S.S.R. Détente)에 의한 화해 mood를 냉전의 종식이라 해석하여 따라서 통일을 위해 좋은 상황전개라고 말하기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Ideology와 National Interest를 그 바탕으로 한 냉전체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만큼 이런 상황은 우리의 통일에 Plus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더욱이 70년대에 들어 신흥강국으로서 일본과 중공의 등장으로 인한 동북아의 세력개편 방향은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세력균형의 구조적 내용을 더욱 복잡하게 전개시킴으로써 통일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국제적 환경을 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UN내에 팽팽한 Universalism과 더불어 미·일등 강국에 의해 검토, 추진중인 분단국 동시UN 가입론등 「분단현실화」방향으로 전개되는 국제추세를 볼때, 우리의 통일의 길은 참으로 험난함을 절감케 된다. 이는 결국 분단국의 현재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양성화하여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분단현상을 고정화·안정화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따라서 냉전적 중국문제, 한국문제등의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그 새로운 접근 방향도 강대국의 새 정책자세로 보아 세계정치의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냉전체제 해소방법에 의한 「현상유지」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한반도 냉전체제 해소노력도 조만간에 강대국사이에서 구체화 될 가능성이 짙고, 주한미군 감축은 이러한 노력을 급진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때 다양화속에 모색되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균형체제가 오늘의 동·서관계를 중화시키고 있는 현실과 또한 정경분리의 원칙까지를 명분으로 Ideology 보다 National Interest를 요구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분망하는 객관적 환경속에서 과연 어느 국가를 맹방으로 믿고 국토통일에 필요한 원칙을 견지하며, 또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 반문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3. 한국통일문제의 좌표의식

(1) 위에서 본것처럼 한국의 분단은 민족자체 분열현상이 아닌 타의에 의해 강요당한 분단이라는데 그 비극적 특징이 있다. 때문에 분단 4반세기를 관류해온 통

일에의 민족적 발돋움도 이 타율의 장벽안을 어쩔 수 없이 댄돌아야 하는 발돋움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분단상은 세계의 분단상의 한 단면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면, 이 세계의 분단현상이 타파되지 않는한 한국재통합의 단서도 쉽사리 찾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통일에의 민족적 집념도 한낱 의지의 반복이라는 저회만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 숙명적 민족적과업은 부단히 계기, 지속되어왔으며, 그간 정부는 북괴의 「선무장·후 통일론」에 맞서 「선건설·후 통일론」 또는 「70년대 후반기론」에 입각한 승공역량 배양을 바탕으로 한 통일론을 전개해 오면서 국토통일원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워왔거니와 특히 작년에는 박대통령의 「8.15 선언」에 의한 평화통일 구상을 천명하기에 이르렀고, 이 「8.15 선언」에 의해 오랫동안 내연돼왔던 통일에의 국민적 열망과 관심은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 세웠던 통일론은 대체로 ① 한국동란 직전 40년대 말기의 UN 결의에 따른 남북한총선거론, ② 한국동란 이후 50년대 말기의 무력통일론, ③ 60년대의 UN 결의에 따른 남북한총선거론, ④ 70년대의 평화통일론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그중 「8.15 선언」에 의한 평화통일구상은 통일에의 새로운 포석이라할 수 있고 이는 지금까지 사실상 taboo나 다름없던 통일논의를 양성화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8.15 선언」은, 국토통일은 그것이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는 반드시 긴장상태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먼저 북괴의 전쟁도발 행위 중지라는 대선행조건을 제시, 그 조건위에 ① 남북한 인위적 장벽제거 용의 ② UN권능을 북괴가 인정할 경우 동시초청 무방, ③ 민주, 공산체제의 우열을 가름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적인 선의의 경쟁」의 축구로 집약시킬 수 있고, 이러한 「8.15 선언」은 대결로부터 공존으로 변전해가는 국내외정세의 흐름을 총괄, 융화시킨 장기포석으로서 민족통일의 지상목표를 향한 주요한 접근 내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통일론은 어디까지나 한국정부를 탄생시킨 UN을 통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의 통일노력은 대 UN 외교로 구상화가 시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47년 11월 14일 제2차 UN 총회에 처음 상정된 한국문제를 그뒤 연례행사처럼 매년 토의되어 왔으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방해공작으로 UN을 통한 통일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통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상황 또한 국제정세의 변천등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68년(23차총회)에 자동상정방식을 지양, 이른바 재량상정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점에서 볼때, 대 UN외교의 커다란 전환이기도 했지만 공산측이 끈덕진 선제공세로 재량상정·역시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어 온 통일론은 이 「8·15선언」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으로써 일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2) 이러한 「8·15 선언」에 의한 통일기반의 구상이 역대정부가 UN을 통하여 제시했던 통일안과 근본적으로 상치한다든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국민앞에 구체적으로 평화적 통일방법의 원칙을 명시한 것은 매우 의의깊다 할 것이며, 여기서 가장 중시할 것은 남북간의 긴장상태의 완화없이 평화통일이 불가능함을 뚜렷이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8·15선언」의 의의로서, 첫째는 국제정치적인 조류에 호응하는 알맞은 통일자세이며 구상이란 점, 둘째는 국내발전에 토대를 두고 국력배양에 의한 자신을 얻어 민족국가 건설의 계속적인 연장으로로서의 통일과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 셋째는 남북간 긴장완화에의 주요한 시도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겠다.

요컨대 8·15구상은 한국의 대외정책이 변동하는 국제정세에 탄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신축성을 갖고 차원높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한국의 대외정책이 긴장완화라는 국제정세의 대조류를 타고 적응함으로써 대공전략과 통일전략이 오히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선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의 제의로서 말하자면 이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잘사는 체제경쟁」을 뜻하는 바, 해석 여하에 따라서 「남북의 공존」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8·15선언」은 새로운 정치철학적인 방향의 제시로서 7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복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에 근거한 것이며, 특히 70년대 후반기에서의 통일의 선제공세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0년대 후반은 「국민소득이 300\$ 돌파, 공업입국과 조국군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아래 이렇게 될 경우 복귀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위의 힘을 확보, 서독의 대동독정책처럼 통일에의 initiative를 우리가 잡고 「우리경제, 우리자유, 우리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 흐를」(67년 대통령연두교서)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8·15선언」에 의한 정부의 새 복귀정책은 한편으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통한정책의 탄력성이 국민일반의 반공의식과 어떻게 조화되느냐가 일차적인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적어도 우리 국민에게 있어 복귀는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전투집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기본인식이 뿌

리박혀 있는만큼 새정책에 따른 갈등과 상충, 그리고 가치판단의 혼동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입장으로선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엄연히 있는만큼 통일의교동에 약간의 신축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안으로 반공체제의 강화가 불가피한 것이므로 앞으로 통일정책등에서의 국민설득과 국민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아롱든 공존·다원화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속에 새로운 대북외 정책은 이른바 「외교의 자기확장적 전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방안에 못지 않게 여건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면 Asia에서의 Nixon Doctrine추진과 일본, 중공의 등장이라는 구세력관계의 재현에 유의하면서 자립경제, 자주국방 및 민족적 주체역량을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초미의 우선적 목표로 등장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아 긴장완화의 선행없이는 진일보한 통일접근노력의 본격화가 불가능한 것이라 본다면, 앞으로 우리의 평화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제역량확보가 제일의 과제임을 명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선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즉 민주주의체제가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제내의 제 불합리를 극복하고 민주역량강화를 통한 정치적 발전을 경제건설과 병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신장, 이와 아울러 경제적 발전으로 이룩된 부의 편중지양,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등 이른바 근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제부조리현상과 모순점등의 시정은 시급한 내적 선행조건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통일의 국민적 염원이라면 정치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그 조화에서 이룩된 국가적 합의 위에서 전진적 통일접근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통일기반조성에 관한한, 안으로는 국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밖으로는 객관적 국제정세를 통일에 기여케 하는 승공통일의 기운성숙을 위한 노력의 집중이 각진한것이다. 즉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이상 긴장완화축구가 대전제로 돼야할 것임이 분명한만큼, 그 환경속에서 통일을 위한 주체적 조건(자체역량준비)과 객관적 조건(국제정세의 유리한 배합)의 형성을 기하면서 단계적인 재통합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현 단계의 우리의 통일논의는 아직껏 모색적인 문제정리과정에 처해 있다고 봄이 과연이 아님을 우리가 수긍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통일논의의 taboo시키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지속될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 어차피 정부로서는 통일논의를 단계적으로 푼다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끈다는 측면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우리의 통일문제에의 접근태도는 한국통일문제의 성격파악에서 결정되어야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오늘의 국제정치상황 아래서는 아무리 과

략하며 불법적인 집단이라(한국헌법 3조의 영토규정에 의하면) 할지라도 북괴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존재가 되어있는만큼 무력으로써 한반도에서 축출하거나 쇠퇴시키는 어려운 형편에 있고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국내정치 문제로서의 성격이 더욱 중요한 문제점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통일문제접근을 위한 우리의 주체적 역량확보의 긴요성이 절실한 소이가 있다고 하겠다.

4. 북괴 평화통일론의 허구성과 통일전략

(1) 반면 북괴는 「8.15선언」에 의한 「평화통일구상」제의를 작년 8월 21일자 노동신문사설을 통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종래의 무력남침 및 폭력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정책을 재천명했다⁶⁾. 동 사설에서 북괴는 통일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이를 위해 북한을 소위 「혁명기지」로서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또 여기서 북괴는 UN의 한국문제에 대한 권위·권능을 계속 부인함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는 그간 북괴가 말로만 평화통일을 선전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무력·폭력적화통일을 기도해왔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며 종래의 북괴 태도에 하등의 변화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북괴는 8·15 평화선언에 대해 극히 부조리한 이유를 들어 것처럼 거부하면서 8·15 선언의 「이미지」가 북괴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역선전공세를 펴기에 광분하고 있다. 북괴는 8·15 평화통일구상을 구체적 방안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힐뜩고 있으나 폭력혁명과 무력도발포기 천명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도리어 남한 인민의 투쟁이라 하여 정당한 것으로 분장하고 남침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오직 평화적 통일만만을 시종일관 주장해왔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2일~13일)에 열린 북괴노동당 5차 대회에서도 김일성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대남투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호언하였다⁷⁾. 여기서 「전북괴인민은 모두 무장되고 북괴전체가 요새화되었다」, 「전체인민이 총을 쏠줄 안다」는 등의 김일성의 장담속에 북괴는 과거 당노선을 그대로 내세울 것이며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간 북괴가 전개해온 위장 평화통일 공세란 바로 무력적화통일의 가장임을 알 수 있고, 말하자면 북괴가 계속 주장해온 소위 평화적통일은

6. 중앙일보, 70년 8월 25일자 참조

7. 동아일보 70년 11월 6일자, 정경연구 70년 12월 pp. 64~66, 중앙 70년 1월 pp. 320~329

독력혁명에 의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나서 수립되는 용공정권과 북괴정권과의 협상에 의한 적화통일실현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괴는 언제나 그들의 선전공세의 주요한 도구로서 「평화통일」이라는 issue를 이용하고 있거니와 금년에 들어와서도 북괴는 다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년 4월 12일에 개최된 북괴의 소위 최고인민회의 제 4기 5차회의에서 북괴 외상 허담은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킴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에서⁸⁾ 평화통일방안으로서 ①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② 남북한병력의 상호 10만명선으로의 감축, ③ 통일 중앙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자유선거의 실시 ④ 남한에서의 정치범석방 ⑤ 한국의 대외조약폐기 ⑥ 스포츠·서신·예술인·언론인 등의 남북교류 ⑦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협상을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갖자는 것 등을 제의하였다. 이같은 제의는 물론 한국의 선거기에 편승한 새로운 대남교란공작을 획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바, 이번 북괴가 제시한 소위 「평화통일방안」 중에는 구적체으로 한국의 대외조약폐기와 남북협상의 장소문제를 언급한 점에서 약간 새로운 점이 없지 않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적화통일의 야망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북괴는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한국」을 주장하는데서 진일보하여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와같은 북괴의 오만불손한 태도 변경은 정치적인 허장성세로 북한동포들을 현혹, 기만하려는 수법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할 것이며, 남북간대립에 있어서의 힘의 balance와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북괴에 점차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 북괴가 엉뚱하게도 「하나의 조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한낱 백일몽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재언하거니와 북괴의 소위 「평화통일」이란 먼저 한국의 자체방위능력을 내외적으로 약화시키고 다음에 한국정부를 전복한 후 좌익정권을 수립하고 이들과 야합하여 남북협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위장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최근의 통일에 관한 북괴측주장 역시 그의 표면적인 명분과는 판이하게 평화통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또 하나의 위장공세라는 점을 우리는 간취해 둘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북괴의 평화통일공세는 그동안 남북동향과 관련, 전개되어 왔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간추려 보면 제일단계는 해방후부터 6.25 동란전까지로 남북정치협상론이 주장되었고, 제 2단계는 전쟁기간중으로 무력통일정책이 옹호되었으며,

8. 71년 4월 15일자 자 일간지 참조.

제 3단계는 53년 휴전협정으로부터 4.19 전까지로 중립국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을 주장하였다. 제 4단계는 60년 4.19이후로서 평화통일공세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여 남북연방안을 강력히 주장하여 남북한 군대를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과 문화·과학·체육등의 남북교류를 내세웠고, 그리고 5단계는 66년 자주노선을 천명한 이후로서 무력통일론을 공공연히 내세워 이른바 「선무장·후통일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즉 북괴는 66년 8월 12일 노동신문에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사설을 발표⁹⁾, 자주노선을 걸어갈 것을 표명할 때 이어 동년 10월 5일에 열린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종래의 평화적 통일론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력통일」전략으로 바꾸면서 「선무장·후통일론」을 표방하였고 그후부터 대규모 공비를 남파시켰다.

동회의에서 김일성은 70년대를 적화의 「결정적 시기」로 공언하면서 전쟁에 대비하여 「전인민 무장화」·「전국토요새화」·「전인민군대 간부화」·「장비현대화」등 소위 4대군사노선을 지지하였고 또 결정적 시기를 능동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투쟁방안으로 ① 북한혁명기지 강화 ② 남한혁명역량 강화 ③ 국제공산주의 유대강화라는 삼대 slogan을 내세우고 김일성독재체제의 확립아래 경제·사회구조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쟁준비에 광분해 왔다. 이처럼 북괴는 자주노선 즉 자주(정치)·자립(경제)·자위(국방)의 노선이 추구됨에 따라 통일문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 테두리안에서 합리화돼 왔고 따라서 군사력강화·전쟁준비노선을 걸어오면서 70년대의 적화통일 목표달성을 위해 광분해 왔다. 실상 자주노선 선언후 북괴는 대거 군벌등장으로 전시체제로 개편되었고 이와함께 대남적화공작도 더욱 적극화되었다. 그간의 1·21무장공비 서울침입사건을 비롯하여 울진·삼척공비침투사건, Pueblo호 피납사건, EC-121 기격추사건, 해군방송선납치사건 등은 이를 명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때 북괴의 소행이 어느 하나도 「평화통일」과 정반대의 그것이라는 불증이 아닌 것이 없다. 더욱이 최근에 북괴는 공산 guerrilla를 훈련, 외국에 침투시켜 폭력혁명을 기도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업역할까지 감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본다. 즉 북괴에서 훈련받은 guerrilla들이 Mexico 정부 전복음모를 꾸미다가 금년 3월 15일 일망타진된 사건은 북괴의 국제폭력집단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북괴는 지난 66년부터 민보성정찰국에 외국인 guerrilla 훈련 정치지도센터를 두고 10개의 훈련기지에서 중남미·Asia·Africa 25개국의 약 2천명에게 guerrilla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바¹⁰⁾,

9. 통일원, 국토통일, 70년 9월(제3호), pp. 50~51 참조.

10. 71년 3월 31일자 대한일보 참조.

김일성은 중간지대론에 입각한 국제공산주의혁명을 촉진하고 반제투쟁의 기수로써 국제공산혁명의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며 국제적 반미운동과 대남적화투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러한 guerrilla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이른바 「폭력혁명수출」은 Mexico에 이어 ceylon에도 상륙, 반정부폭동 지원에 가담하다 끝내 실패하고 금년 4월 15일 북괴대사관은 폐쇄조치까지 당해 북괴 대사관원은 추방당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와같이 국제공산주의 폭력혁명을 부채질하는 북괴는 어차피 외형상 허울좋은 평화공세의 자세확립으로 유동하는 70년대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Asia 제국 및 중립제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한편 평화공세와 guerrilla전법을 위주로 하는 폭력혁명공세의 동시적 구사으로써 한국인의 소위 반미·반정부 활동을 부각시켜 통일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장악, 공산화에 유리한 지보를 확보하려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또한 중공의 영향력증대, 특히 중공의 핵개발진전이 북괴에 유리한 전략적 배경을 제공해준은 물론, 대남적화정책을 고무하는 효과를 줄 것이며 중공은 소련의 Asia 집단 안보체제에 대처 그의 남진정책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대북괴접근이 긴요하다 볼 수 있는 만큼 중공·북괴의 밀착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우리의 안보와 통일문제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즉 이는 작년 4월 9일 평양에서의 주은래·김일성 공동성명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듯이¹¹⁾, 북괴·중공은 더욱 단결하여 전쟁준비를 강화하여 공동노력으로 적 미·일에 대처할 것과 북괴가 통일을 쟁취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¹²⁾.

5. 한국 통일문제와 국제환경

(1) 한마디로 국토통일이라는 우리의 정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자체의 내적 요인과 국제환경이라는 외적 요인은 꼭같이 중시되어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주체적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국제적 성격을 띤 문제임에 의심이 없다면 그것에 얽혀 있는 국제관계를 도외시하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고립시켜 본다는 것은 분명히 비현실적인 접근태도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경험에서와 같이 통일에 대한 허다한 노력이 수포화하게 된 주된 원인이 한반도에 작용하고 있는 외부세력의 제약조건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국토통일문

11. 통일원, Ibid p. 36.

12. 북괴의 평화통일공세와 통일전략등에 대해선, 통일원, 국토통일, 70년 9월·11월 및 북한총감(68년, 공산권문제연구소), pp. 827~849 참조.

제는 변천되어 가는 한반도의 주변정세속에서 성숙되어지는 기회를 포착하여 달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존·다원화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속에서 한국이 설 좌표를 정립한 후, 우리는 현실적 여건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적합한 대체방안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현금의 국제정세는 동서화해와 정치적 다원화의 물결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이는 H.A. Kissinger의 말대로 군사적 양극화는 정치적 다원화를 결과적으로 촉진시켜 그야말로 국제정치의 다원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¹³⁾. 전후의 대립적 미·소체제가 다양한 도전속에 협조적 미·소체제로 발전된 시대가 60년대의 국제정치의 특징이라면, 현금의 70년대는 이 제 2의 독점적 미·소체제가 Europe에서 서독, Asia에서 중공과 일본이란 신흥강국들의 등장으로 보다 심하게 도전을 받는 다원화시대로서의 특징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다원화현상은 공산진영내에서도 일고 있어 이른바 「제한주권론」이라 불리는 Brezhnev Doctrine도 그 한계점에 도달한 듯한 인상이고¹⁴⁾, 자유진영내에서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 Nixon Doctrine에 의한 비미국화정책등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2차전 후에 발족한 신생국들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다주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공의 등장은 국제적 환경에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즉 세력균형의 구조적 재편현상은 전통적 세력관계의 재현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오늘의 사태가 반세기전의 국제정세와 흡사한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어두운 역사의 도전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Asia의 세력구조는 미·소에 일·중공이 추가되어 4극 구조로 개편, 정착케 되었고 오히려 앞으로는 미·소가 후견역이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후자가 일선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져 가고 있다.

(2) 이러한 다원화현상과 함께 현금의 국제정세는 동서간의 화해라는 새로운 국면의 전개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대결보다는 협상과 화해의 기운이 과거 어느때 보다는도 교조되고 있다.

먼저 Europe에서는 저간의 Helsinki와 Wien에서의 미·소전략무기 제한회담(SALT) 교섭, Warsaw 조약국에 의한 전구주안보회의 제창과 그에 대한 NATO 제국에 의한 호의적 반응, 영국의 가맹에 문호를 개방한 EEC 회의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것은 서독의 소련과의 불가침조약과 Poland와의 관계정상화 조약등으로

13. 중앙, 중앙일보사, 70년 1월호, p. 71

14. 극동문제연구소, 국제문제, 70년 12월호, pp. 30~38.

Brandt 사민당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지난 25년간 개편을 거듭해온 Europe의 전후질서는 동서화해의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동서 Europe의 화해와 Europe 정치의 재편성, 그 전제로서의 Europe 냉전구조의 발본적인 해체를 지향하는 것이라 하겠거니와 지난 4반세기간의 냉전구조에는 여러가지 모순이 내포되어 있고 또 냉전의 해체에도 허다한 모순과 문제점이 개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표면화한 역사적 변혁의 대조류는 역행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편 Asia에서도, 전후 급속도로 진행됐던 세계적 규모의 냉전이 Europe에서 수습 조절되어 감에 따라 국제긴장완화의 물결이 서서히나마 밀려들고 있다. 우선 Ideology 논쟁에서 굽기야는 무력대결로 까지 치달던 소련과 중공이 정면충돌만은 피해야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국가관계 유지라는 냉전의 「물」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고 상호 대사교환과 국경회담등을 갖게 되었다. 일·소 관계는 Siberia 공동개발에 합의의 불만큼 접근하였으며 양국간의 무역액은 증가일로에 있고, 그리고 그 저의는 어떻든간에 소련은 Asia제국에 대해서 집단안보체제의 수립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동북아시아에서 미·소관계는 악화할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공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호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니와 이러한 점에서 핵전력에 바탕을 둔 미·소간의 세력균형 범위는 동북아시아까지 확대되었으며 더욱이 중공의 위협을 절실한 것으로 느끼고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는 소련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미·소협력체제를 더욱 굳혀 갈 것이다.

특히 소련은 금년 3월 30일부터 열린 「제24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의 Brezhnev의 기초정치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¹⁵⁾, 그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로서 ① 공산주의 건설에 유리한 국제정세마련 ② 사회주의국가간의 단합 및 협력 ③ 민족해방운동의 지원 및 개발도상국지원 ④ 사회체제가 다른 국가들과의 평화공존 ⑤ 제국주의의 침략군분쇄 및 3차대전 유발방지등을 들었고, 또 여기서 중공을 포함한 세계군축회의개최, NATO와 Warsaw조약기구의 상호해체를 주장하고 Europe의 긴장완화를 위해 구주안보회의를 조기 개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는 결국 대미관계에서는 SALT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미·소의 평화공존을 기반으로 갈면서 Europe의 현상고정화의 토대위에서 모든 지역에서의 안정을 통한 소련이 진출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중공과는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재수립코자하는 그 일환으로 중공을 5대 핵국으로 인정하여 핵군축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게

15. 71년 3월 31일자 자일간지 참조.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 미·중공관계는 오늘날 미중유의 해빙 Mood가 점고하는 가운데 상호접근 시도가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대중공 긴장완화의 일환으로 69년에 대중공금수 해제조치를 취한 것을 비롯, 70년초부터 Warsaw에서 미·중공 대사급회담을 재개시켜 왔으며, 더욱이 금년 2월 25일 발표된 제 2차 외교교서(1970년대의 미국외교정책—평화의 구축)에서의 대중공관계에 있어 Nixon 대통령은 처음으로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 호칭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공정책의 변천을 시사했고¹⁶⁾, 그에 따라 대중공정책 전환문제에의 검토해 왔던 미정부당국은 우선 지난 3월 15일자로 미국시민의 중공여행제한을 전면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대중공관계 개선을 위한 방책이 활발히 모색되어 왔다. 특기할 것은 지난 4월중순 미국의 탁구선수단과 기자들이 초청을 받고 중공을 방문함으로써 단절 23년만에 교류의 첫 신호를 올림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4월 14일에 Nixon 대통령은 중공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로서 ① 일부 비전략물자의 직접수송허용 ② 입국사증발급의 신속간소화 ③ Dollar통제완화 ④ 중공출입 선박·항공기에 대한 급유금지해제 ⑤ 중공화물 수송허용등 5개 항목의 대중공 직접 교역조치를 발표했다. 뿐만아니라 UN 중국대표권문제에 관한 종합검토가 진행중에 있고 특히 Nixon 대통령 스스로가 중공방문을 피력하는 등 미·중공관계는 급속도로 전환, 화해의 급「피치」를 올리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결국 미국도 ① Partnership ② Strength(힘), ③ Willingness to Negotiate(협상에의 열의)를 외교정책의 3대기조로 천명한 작년 2월 18일의 외교교서(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A New Strategy for Peace)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결에서 협상」으로라는 평화전략의 기치를 높이 들며 대중공접근에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미국도 대중공정책에 있어 ① 중공정권은 50년대 미국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붕괴되지 않을만큼 정착했다는 사실, ② 중공을 핵국가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 ③ 중·소분규에서 입증되었듯이 중공은 소련을 축으로 한 공산지도체제를 탈퇴, 공산권다원화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 ④ 미국은 인지전쟁을 군사적 승리로 매듭짓기 어려우며 인지문제의 해결은 중공의 현재 및 장래의 역할과 의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주요한 변화의 토대를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 역시 중공접근을 위해 정계·재계·산업계·일반여론등 비등한 상태에 있다. 50년대 중공이 이른바 ①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② 상호불침

16. 동아일보 71년 2월 27일자 및 신동아 71년 4월호 pp.154~156.

략 ③ 상호내정불간섭 ④ 호혜평등 ⑤ 평화공존등의 「평화 5원칙」을 표방하면서 일본에 접근했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은 오히려 일본이 관계개선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간 이러한 「평화5원칙」에서 「대일본정치 3원칙」 즉 ① 중공을 적대하지 않는다. ② 두 개의 중공을 지지하지 않는다. ③ 일본과 중공간의 국교정상화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칙을 「정경불가분의 원칙」과 함께 견지해오던 중공은 작년 4월에 들어와선 무역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새로 「주 4원칙」을¹⁷⁾ 일본에 강압적으로 제시했다함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금년 3월초 일·중각서무역 1년연장교섭 때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공은 일본의 군국주의대두를 힐난하면서 「사또」정권을 작년보다 더한층 매도하였다¹⁸⁾. 그럼에도 금년 1월 22일 열린 통상국회의에서 「사또」수상은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행한 발언에서 수상으로선 처음으로 중공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였고 종래의 대사급회담을 한걸음 전진시킬 용의를 밝힘으로써 전보다 강력한 교류증대를 희망했다. 뿐만아니라 일본 역시 중공 UN가입문제등을 신중히 검토, UN에서의 대중공정책에 일대 전환을 시도중에 있으며 특히 지금 일본정계에서는 중공의 UN 가입문제에 대해 중공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국제적인 흐름이며 이것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관련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의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한편 중공수상 주은래는 금년 3월 1일 일본과 자유중국의 강화조약을 무효화하고 대신 중공과 우호조약을 체결하자고 일본에 제의하는 등¹⁹⁾ 대일본 접근정책을 서서히 전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아무튼 일·중공관계는 앞으로 국제정세에 따라 신속성있게 변화의 진폭을 확대하면서 접근방향으로 추진돼 갈 것이다.

(3) 이와같이 변전을 거듭하는 국제정세의 전개상황속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으로 양독의 동방정책에 의한 분단현실화 현상과 서방국가의 중공승인을 비롯한 중공문제대두의 국제정치상 의의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같은 분단국으로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먼저 그간 서독은 외교정책에 있어 Hallstein 원칙을 폐기, 동독과의 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함과 아울러 동독과도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 양독관계정상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에 독·소불가침조약, 독·파관계 정상화조약, Hungary와의 통상협정등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체코」와의

17. 주은래 4원칙이란, ① 중공·북파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는 업체, ② 한국·대만에 고액투자한 업체, ③ 인지전쟁에서 강국에 무기탄약을 제공하는 업체, ④ 미국자본과의 합작업체 및 미제열업체등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 동아일보, 1971년 3월 5일자 참조.

19. 동아일보, 71년 3월 3일자 참조.

외교교섭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독·소조약과 독·파조약의 체결에 따르는 세계 정치의 발전과 국제정치상의 의의는 앞으로 전개될 정치상황에 구체적으로 부각될 것이나, 이들 조약의 체결로 적어도 서독은 Oder-Neisse 선과 동서독간의 국경을 포함한 구주국경현상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존중하고 상호불가침을 규정함으로써 서독측이 2차대전의 결과인 구주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서독은 동독정권을 국제법상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동독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였고, 이제 「두 개의 독일」은 하나의 공인된 사실이 되었다. 동서간의 평화공존의 체제화를 의미하는 이들 조약으로 구주냉전은 두개체제의 공존을 확인한 셈이 되었고 따라서 본단의 벽은 더욱 굳어져 통독은 아득한 숙원이 되고 말았다.

다음에 70년대에 접어들자 중공문제의 대두가 국제정치무대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작년만 하여도 Canada에 이어 적도「기니」, Italy, Ethiopia 등 서방 국가가 중공을 승인했고 금년에 들어서자 Chile와 Nigeria가 승인했고 조만간 상당 수의 국가가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쨌든 이들 서방제국이 세계정치적 의미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협정내용의 주지는 중국대륙의 정통합법의 유일한 정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다는 것이고, 대만의 국민정부에 대해서는 그 영토적 독립을 이해한다는데 합의를 본 것이라하겠다. 그리고보면 협정내용의 문맥표현상으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중국」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결과사항으로는 사실상의 「두 개의 중국」을 존재케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본단국가로서의 저간의 동서독관계 정상화작업의 추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1국민-2국가」(One Nation-Two State) 형식을 고착시켜 놓은 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추세에 따라 중공의 UN 가입 역시 하나의 현실문제로 대두하여 작년 11월 제25차 UN총회에서는 UN헌장 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지정안에 걸려 UN가입은 좌절되었으나 공산측이 제출한 「중공가입-자유중국축출안」을 찬 51, 반49, 기권 25표로 사상 처음으로 단순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공의 중국대표권 인정문제가 단순과반수 득표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중공의 UN가입을 조만간 실현시킬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아마 그 시기는 금명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미국 역시 위에서 본바와같이 중국이 UN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 가입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문제를 검토중에 있으며 미국은 중공의 UN가입을 저지시키기 위해

서나 자유중국의 안보이사회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미국은 이러한 이증가입정책으로 UN의 영향력과 위신을 부활시킴으로써 UN의 월남전 및 기타 분단국분쟁해결에 의미있는 세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분단국 동시 UN가입구상은 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에 중공 역시 69년 4월에 개최된 「9 전대회」를 계기로 저간 소위 「문화혁명」기간에 소원됐던 국제관계를 호전시키고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그 지위와 위신을 향상시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고 또한 UN무대에서의 진출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중공은 「9 전대회」에서도 밝혀진바 있는 소위 「외교 3원칙」 즉 ① 대사회주의국가 우호관계 ② 피압박인민과 민족의 혁명투쟁지원 ③ 평화5원칙을 기초로 하여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와의 평화공존유지 및 재국주의 반대등의 원칙에 입각, 이를 국제정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때 그때 신축성있게 적용시키면서 대외정책을 전개해 갈 것이다.

아무튼 금후 중국문제를 위요한 세계조류는 2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공, 하나의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갈등, 그속에서 생존하려는 자유중국의 몸부림이 보다 심한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될 역사의 조류에 처해 있다.

(4)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dynamic하게 전개되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의 환경, 그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향방을 모색해야 하는 시련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Nixon Doctrine의 현실화와 함께 Asia에서의 미군철수, 월남전의 종결, 72년까지 Okinawa반환, 일본의 등장과 재무장, 게다가 중공의 핵전쟁성장, 호전적인 중공·북괴의 접근 그리고 주한 미군감축등 착잡한 국제정치의 조건들을 만들게 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 및 통일과 관련하여 이같은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방향의 모색은 당면한 민족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는 우리의 통일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때 능동적 환경 적응노력을 기울여야함은 물론, 우리의 통일의 국제적 기운을 조성할 수 있는 정치역량의 집주가 절실한 것이다. 다시말해 냉전완화와 국제정치의 다원화현상을 강요하고 있는 현국제정치의 변동상황을 신속히 파악, 한국문제를 해결지을 수 있는 극동 국제정치의 「무드」를 조성하여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동태적, 능동적 적극성을 띤 우리의 주체적 노력과 역량이 깃진한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역량이 증대한다면 국제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장애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것이 적을 경우 외적으로 아무리 통일조건이

성숙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통일은 불가능한 법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주체적역량이 없는한 우리의 국토통일은 국제환경이라는 면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불가능한 것이라면, 결국 우리의 내적 역량과 국제환경과의 관계는 함수관계에 있다 할 수 있고, 우리 역량의 구축, 강화야말로 우리 통일을 가기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수 있다.

6. 민주통일을 위한 정치역량 배양책

우선 이러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제역량확보문제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등 모든 분야의 역량구축이 시급하다함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바이다. 역량구축은 우리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객관적 조건형성의 주체적 바탕이 됨은 물론 민주와 공산주의의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서독의 경험에서와 같은 「공존경쟁」에 있어 일차적으로 우선해야 하는 본질적 요소라함은 뉘언을 요치 않는다. 결국 이는 통일에의 저력이요, 통일에의 주도권장악의 중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통일의 제문제에 대한 해결방책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전반적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군사적 체체계의 발전적인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통일논의에 있어 「8·15선언」과 같은 방안과 포석의 탐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맴도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통일에의 의지를 집결 주도하는 데는 지도이념과 체제문제가 중시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새로운 통합원리와 통일추진 주체역량의 재정비가 촉구되는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의 한국정치에서 그것이 뚜렷치 않을 경우 통일을 향한 민족적 energie와 지혜의 집중은 상당한 차질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존재양식을 정립하고 집진적 활력을 일깨우면서 각분야에 부단한 쇄신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심에 권태, 진부감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유의 활력과 조리를 국민이 자신할 수 있게 하는 길이 곧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통일은 원리이지 기교가 아니며 또 그것은 전민족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주체적 책임의식을 저버리지 않는 방향에서 통일논의가 「국민의 것」으로 실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질서의 확립과 역량을 기르며 확고한 정치적 Leadership 아래 국민총화를 형성해야하고 아울러 「잘 사는 체제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민주역량강화를 통한 정치발전을 경제건설과 병행시켜야 하며 정치와 경제의 발전과 조화에서 이룩되는 「국민적 합의」

(National Consensus)와 「국민적 신뢰」(National Confidence) 위에서 점진적 통일접근을 간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 민주통일을 위한 정치역량배양책에 관해 고찰하거니와, 먼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절박한 과제로서 외교와 안보역량강화문제를 살피고 다음에 민주제역량의 확보, 통일이념의 구축, 그리고 승공체제강화등의 방책을 다룬다.

(1) 외교역량 배양

오늘날 우리는 평화적 통일접근에의 외적 기반조성을 위한 통일의교 역량확보라는 시급한 당면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 현금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미·소의 공존협조체제의 확립, 독·소불가침조약의 체결, 중·소분쟁으로 노정된 Ideology 전쟁의 퇴색화, 미·중공간의 급속한 해빙 mood, UN내에서의 Universalism의 제창, 게다가 분단국동시 UN 가입론, 중공의 UN가입가능성등 일련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UN무대에 있어서 날이갈수록 한국의 입장을 곤란케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결들여 끈질기게 전개되어온 북괴측의 교묘한 위장 평화통일 공세라는 정세하에 우리는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전진적인 통일의교의 전개로 국제적 지위의 향상은 물론, 통일논의에의 initiative를 잡지 않으면 안될 지란한 시점에 처해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의 유동성 속에서 우리의 통일의교의 방향은 여하히 「자기확장적 전개」를 할 것이냐 하는 큰 시련에 부딪치고 있거니와 특히 70년대가 군사적 양극체제와 정치적 다원화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의 몸부림속에서 Ideology 보다는 National Interest에 역점을 둔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실리추구의 시대에 있어 우리의교가 걸어갈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기실 우리가 교수하여 온 Hallstein 원칙의 성격변질과 함께 나아가서 대공산권과의 실리추구를 위한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다각외교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고보면 육박하는 현실문제로서 이제 세계의 정치질서, 전쟁양식, 전략 및 군사질서에 이르기까지 다양적이고 새로운 방향감각을 제기하는 마당에 놓여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에 대처해야할 고차원의 정치적·외교적·대비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 일이 바로 통일의교정책의 좌표확립의 1차적 단계가 될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은 국제정치상황이 급변하는 다변적인 세력균형구조와 UN내 정세의 변화라는 거센 파도를 헤쳐가면서 국제적협조를 얻고 자율적인 통일달

성의 계기를 형성하여 국제적 제약성을 가능성으로 유도하는 통일외교 Pattern이 정립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과 UN외교를 주축으로 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오다 국제정세의 다원화현상과 한반도를 위요한 국제정세의 변동과 국력향상을 배경으로 다변외교로 전향, 우방과의 동맹외교·중립국과의 유대외교·비적성공산국과의 실리외교를 전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태에 대처할 신축성있는 외교전략을 강구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한국의 당면한 외교정책방향을 보면, 첫째 분단 현실화추세에 대한 타개, 둘째 대UN·대중립국외교강화와 국제적 지위향상, 셋째 미, 일협조체제를 위시한 민주우방과의 새로운 협조체제 모색, 넷째 안보외교강화 및 ASPAC을 위시한 아·태지역 협조체제와 기타 국제기구의 강화, 다섯째 지속적 경제발전을 뒷받칠 실리외교의 강화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 바 다음에 이들에 대한 약간의 분설을 해보기로 한다.

(1) 분단현실화추세와 대UN통일외교전략의 재정비

최근 분단국 동시 UN가입론이 국제정치무대에 새삼 close-up 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 2월 18일 두 개의 중국·두 개의 한국·두 개의 독일·두 개의 월남에 대한 UN가입문제를 검토중임을 밝힌 이래 끈질기게 논의되어온 이 문제는 지난 4월 26일 다시 Nixon 미대통령의 UN 자문위원회가 「두 개의 중국」정책을 건의, 중공의 UN가입을 지지함과 아울러 한국·월남·독일등 분단국가 쌍방의 UN동시가입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정책노선의 적용을 개진하기에 이르렀다²⁰⁾. 미국의 이러한 분단국 UN가입의 근거는 William Bundy의 논지와 같이 대체로 ① UN의 범세계성유지 ② 분단된 현실의 인정 ③ 분단국간의 긴장완화 추구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견해는 대중공정책전환의 하나로서 중공의 UN가입을 둘러싼 중국의 정통합법성 시비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분단국들의 일괄가입안을 구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같은 분단국 UN가입론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최근 대중공정책전환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있는 「두 개의 중국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론이란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타분단국과 동일차원에서 논할 수 없는 분단의 성격과 상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국을 일괄 UN에 가입시켜도 무방하다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한국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 차지하고 있는 국제정치상 지위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① 한국문제는 중국·독일·월남등의 분단국과 상호 이질

20. 71년 4월 27일 자일간지 참조.

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고 ② 한국문제는 정부와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③ 그러므로 한국문제가 국제정치의 모개홍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공식화한바 있거니와 여타 분단국과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배경과 법률적 의미가 다른 한국문제가 중공에 대한 접근책의 일환으로 또는 독일문제나 국제적인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괄처리되는 과정에서 남북한동시가입의 방향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인 것이다. 사실상 한국문제가 기타 분단국과는 이질적인 특수성을 가졌다는 것은 영토의 형태로는 분단돼있으나 법적개념으로는 한반도에 걸친 유일 합법정부이며 이러한 합법성은 UN에 의해 인정됐다는 사실과 북괴는 UN에 의해 침략자로 낙인찍혀 있다는 점이며 이와같은 법적 해석 이외에도 한국의 분단이유가 2차대전을 매듭하려는 강대국의 홍정에 의한 「전후체제」의 소산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타의 분단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운명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제가 이처럼 역사적·법적으로도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세계여론에 호소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분단국문제가 일괄처리되는 국제정치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안된다. 여기에 앞으로 우리 대 UN외교의 dilemma가 있다고 전망되며, 우리의 대 UN 통일외교전략의 재정비, 강화가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문제가 UN에서 치면하는 난관은 본질적으로 생각할때 「남북한 동시초청안」등 현실적으로 두 개의 분단 한국을 국제적 차원에서 동결, 고정화하려는 경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또한 한국통일문제는 오늘날 반 Yalta 체제 국가군인 Asia·Africa·남미등지의 절대다수인 약소회원국들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때 종래 UN에서의 한국문제가 겪어온 핵심문제인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앞으로는 어려운 고비에 부딪치게 된다는 염려가 앞서게 된다. 만일 UN에서의 Universalism의 기운과 더불어 장차 중공이 UN에 가입될 때 종래 부결되어온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과거와 같이 Stevenson안(조선부로)으로서만 통과될 것인지 의문이 안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대 UN외교정책의 재조정과 통일외교전략의 재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만큼 정부는 대 UN외교와 아울러 대 중립국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 우리를 지지하는 UN 회원국들을 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객관적 정세변화에 따른 신속자재한 다각적인 통일외교정책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대미협조체제강화

70년대에 들어 「대결에서 협상」을 새 외교원칙(작년 2월 18일 발표된 외교교서에 의거)으로 표방한 미국의 Asia정책목표는 기본적으로 미·중공 국교정상화에 있다. 이러한 미·중공관계 개선은 기존의 Asia냉전체제의 전환를 의미하며 동시에 한반도의 현존 국제정치체제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반영시킬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중공접근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미·중공관계 정상화를 당면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정책자세는 기존의 UN의 한국통일방안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방향이라 하겠고 주한미군감축은 이러한 미국정책의 구체화된 실례라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당면하여 우리로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정책원리에 근거를 둔 한·미협조체제를 조속히 재정립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 대미외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것은 Nixon Doctrine하의 미국 대외정책을 여하히 우리의 안보와 통일, UN정책 및 경제적 이익에 최대한으로 부합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작년 9월 12일에 공표된, 미국의 전후 20여년간의 대외공약을 전면 재검토한 Symington 위원회의 청문록에서 새 국면에 들어선 70년대의 한·미관계에 대처해야 할 새로운 외교좌표 설정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음을 절감했거니와 이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한·미관계의 재검토를 자극해준 계기였다. 여기서 그 내용의 주요골자를 이루는 것으로서²¹⁾ ①한국통일문제 ②주한미군철폐와 한국군현대화문제 ③한국군월남파병문제 ④한국정세등에 관한 미국의 국제관계관의 저의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거니와 이 청문내용은 70년대의 미국의 대외정책과 기본적으로 일치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한·미관계는 결코 우방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 한·미간에 한국에 대한 정세관과 안보관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주한 미군의 감축도 협의 이상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면을 볼 때 과거 우리의 대미외교 허점이 크게 반성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 Nixon대통령은 외교교서에서 한국문제에 언급, Nixon Doctrine의 model case로 한국을 들어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한방위 결의의 상징이었지만 한국이 그동안 군사 및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므로 그 실력을 고려해

21. 정경연구, 70년 10월호 pp. 6~19 참조.

서 미군 2만명을 감축키로 했음을 밝혔고 한편 미국의 장기적인 Asia정책에 대해서는 Asia지역방위 체제와 미·소·일·중의 정책이 Asia장래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양대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²²⁾ 이는 결국 Asia국가들간의 책임분담에 의한 Nixon Doctrine의 구현과 4대국의 세력균형이 아·태지역에서 70년대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추세를 신속히 파악, 전망하고 그에 따라 우리 대미외교를 적극 전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전처럼 한국이 바로 Nixon Doctrine의 model case가 되는 줄도 모르고 이는 선택적 방위(Selective Defence)에 의해 한국에는 불적용, 미군감축은 없을 거라고 정부당국마저도 믿고 있던 국제감각의 우둔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미국의 현실론적인 대중국정책을 비롯, Asia의 「현실동결론」에 입각한 안정화의 기도를 주목하면서 또한 분단국에 대한 국제동향도 점차 대결보다는 협상으로 나아가 동시 UN가입으로 분쟁을 막아보자는 의도를 주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재정립, 협조체제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70년대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어떤 고립된 의견속에 얽매어 있을 수 없는 정세변화를 현실적으로 강요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처키 위한 주안점은 일차적으로 한·미관계의 현실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대일외교자세의 재정립

한편 Nixon Doctrine의 현실화와 함께 「세계 제3위 GNP를 과시하는 오늘의 일본은 Asia에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²³⁾는 문제의식에 쫓겨 지금 새로운 향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60년대에 경제대국의 길을 걸어온 일본은 70년대에 정치대국·군사대국의 길을 목하 탐색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방전략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하건 원치않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일본의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70년대 한국이 당면하는 또 하나의 큰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문제이고 또한 한국의 안보와 통일에 근본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 생각된다. 여기에 앞으로 한·일관계는 새로운 접점이 요청된다 할 것이며, 우선 우리는 국토통일을 논의함에 있어 선의의 의미에서 깊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일본문제이고 악의의 의미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중

22. 71년 2월 27일 자일간지 참조.

23. 국제문제, 국동문제연구소, 71년 3월호, p. 3.

국문제라는 걸 깊이 인식해야 한다.

기실 65년 한·일협정이 조인, 발효된 이후에도 일본·북파간의 경제·문화 등의 교류는 증대되고 있는 형편이며, 이것은 그간 한·일양국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오기도 했다. 일본정부가 한·일협정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상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취하고 있음은 이제는 결코 비밀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과 「협력」관계를 일방적으로 회구하면서 일본의 60여상사의 입국을 허용하고 막대한 액수의 상업 및 재정차관을 도입해 왔으며 작년도만 하여도 한·일무역은 6대 1이라는 놀라운 불균형, 역조현상을 보여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도를 엄청나게 높게 되어 우리의 전도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 이와같이 한국경제가 일본에 의존하는데 안주하고 있다가는 일본정부와 업계의 중공·북파에의 철저한 기회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일대 곤경으로 물려들 가능성마저 없지 않고, 이제 아무리 엄중한 외교적 항의도 이미 일본의 경제동물(economic animal)적 「실리주의」의 정경분리정책을 막지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69년 11월 「Nixon·사토」공동성명에서²⁴⁾ 한국의 안보는 자국에 essential하다고 한 일본은 작년 10월 20일에 전후 처음으로 일본의 국방개념을 밝힌 「국방백서」를 공포까지 했는데,²⁵⁾ 이 백서는 ①「자위」의 개념이 일대 전환과 더불어, ② 핵무기 보유에 관한 유보조항 및 ③ 비동맹중립정책에서의 전환과, ④ 공격용병기의 대미의존, ⑤ 그리고 Asia지역에서의 극지전 위협성의 강조등 극히 주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어느면에서 일본의 신군국주의화의 기미마저 풍기게 해주고 있다. 실상 일본은 총예산 5조 2천억원(162억 \$), 그리고 연간 1조1천억원(32억 2천만 \$)이란 막대한 돈이 투입될 「제 4차 방위력 정비계획」(72~76년)을 세워 군사대국으로의 진군을 계속하고 있거니와²⁶⁾ 이와 더불어 작금에 이르러 심지어 미의회 및 미정부측에서조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⁷⁾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음미하고 정책상의 대담한 전환으로서 새로운 대일관계의 좌표를 마련해야 할 시기는 바야흐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해서 우리는 선린 우호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한·일양국

24. 69년 11월 21일에 발표된 「Nixon·사토」공동성명 전문은 Fides(서울법대, 70년 10월) pp. 27~29 참조.

25. 동아일보, 70년 10월 22일자 참조.

26. 동아일보 70년 10월 23일자 및 71년 4월 28일자 자일간지 참조.

27. 작년 4월 22일 4명의 미하원의원이 일본 현지시찰후 제출한 「미하원의교위원회 Asia 특별조사보고서」에서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보고서의 일본편의 전역은 Fides. Ibid, pp. 30~33 참조). 한편 작년 8월 26일 H. Kissinger 미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미신문인회에서 「미국이 만약 아·태지역에서 책임을 포기한다면, 일본은 군국주의로 돌아가든가, 풍산권과 제휴하든가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간의 친선협력을 계속 도모해야 할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일본이 언젠가는 우리를 지배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항시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이완시켜서는 안된다. 우리의 정책목표인 자주국방·자립경제를 달성함에 있어 대일관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세삼 강조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관계에 있어 한국이 일본에 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적 협력의 한계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본은 우방으로서의 협조가 가능할 뿐이지 결코 미국의 대역으로 한국에 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지론이다. 그 점은 오랜 한·일관계의 역사적인 인과가 허락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뿌리깊은 대일감정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한국에서의 역할은 인접국으로서의 국제협력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전개되어야 한다.

(4) 실리의외교 추구와 Asia지역 협조체제 강화

70년대는 단적으로 말해 Ideology 퇴조현상과 더불어 「실리추구의 시대」라 일컬어지는만큼, 통일외교와 후술하는 안보외교의 전개와 함께 적극적인 실리의외교, 환언하면 경제외교의 전개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70년대가 우리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경제외교의 적극화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연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비적성 공산국과의 교역을 트기 위한 입법조치(작년말 무역거래법 개정안의 국회에서의 통과)를 취한바 있고, 우선 무역가능 대상국을 「유고」·Rumania·「체코」·Poland·Bulgaria·Hungary·동독등 동구권의 7개국으로 보고 이들 국가의 시장성에 대한 일차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실리의외교도 이러한 비적성 공산국과의 교역을 통한 경제적 활동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한다는데 현단계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통한 교역의 증대와 아울러 나아가서는 「Asia 경제공동체」의 구성이란 목표를 향해서도 실리의외교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한·미, 한·일체제를 축으로 하면서 아·태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우방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ASPAC을 비롯한 기타 국제기구를 강화하는때도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Asia지역국가간에 정치·경제분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나아가 이 터전 위에서 지역안보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의 집주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우리 외교는 착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주도적인 능동적 자세를 가다듬어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 속에 스스로의 좌표를 재정립하고 「적극외교 행동 반경의 자기 확장적 전개」를 통하여 통일외교와 병행하여 안보외교(후술)와 실리외교를 전개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재언하면 국가목표에 따라 한국외교의 기본방향은 북괴의 국제적 고립화와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다변적인 적극외교의 전개로 미·일에 대한 외교를 축으로 하면서 당면한 안보외교와 적극적인 통일 논의에 대비한 통일외교 그리고 국력배양을 위한 경제외교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적극적인 외교전개를 통한 우리의 목적달성에 유의되어야 할 몇가지 점을 검토해 보면, ①우리가 처해있는 현실과 목표(sein과 sollen)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 국력과 외교의 강약점 등) ② 현재의 국제정세의 변화의 방향과 그것이 내포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③ 교섭상대국의 정책방향과 우리와의 합치점과 차이점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방책을 숙지해야 한다. ④ 외교전략에 관한 유능한 요원을 확보, 외교정책에 자문역을 맡게 한다. 즉 현실적이며 자주적인 외교교섭방책을 수립, 외교관으로 하여금 결실있는 교섭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직업외교관제를 확립하여 이상적인 외교교섭가 즉 현실적이고 신축자재한 그리고 인내력이 강한 외교관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 ⑥ 우리의 종래의 외교방침 내지 자세를 재정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수정할 것은 과감히 수정하여 명실상부한 실리외교(명분외교·이념외교가 아닌)와 자주외교를 향한 전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⑦그리고 통일외교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통일외교 자문위원회 또는 통일외교대책위원회를 구성, 통일외교방향을 강구하고 그 정책수행에 협조토록 한다.

[2] 안보역량 배양

원래 안보란 어디까지나 「현상유지」(status quo)와 직결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해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기존세력관계의 현상을 타파 내지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어도 국제정치의 논리로 미루어 현상유지 안보개념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산 북괴의 침략에 대한 안보는 적화통일을 부정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안보와 통일은 동일문제의 양측면으로 파악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안보문제를 중요시할 소이가 있는 것이며, 결국 국가안보란 자체 존립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바탕위에서만 이 정치적 안정화와 경제적 건설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과업 달성이란 궁극적인 과제를 해결코자 하는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통일을 민족의 목적이라 본다면 안보는 그 수단이며 통일을 장기과업이라 한다면 안보는 단기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 논의는 강력한 안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Reischauer 교수의 풀이와 같이 70년대 Asia의 안정에 대한 미국측이 기대는 북괴와 중공의 도전에 대한 미·소·일의 견제와 긴장완화의 역할, 다시 말해서 미·소·중·일의 4대국간의 세력균형과 미·중공분극화의 완화에 의하여 긴장을 해소시키려는데 그 결정요인을 구하고 있다.²⁸⁾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안보는 4대국간의 복잡한 상호관계 즉 ① Asia에서의 미국의 비미국화정책, ② 미·일협조체제와 일본의 영향력 증대, ③ 중공의 핵력성장과 이에 따른 Asia 인국에 대한 위협증대, ④ 중공에 대한 미·소의 견제정책, ⑤ 소련의 적극적인 Asia 진출, ⑥ 미·중공의 접근정책으로 인한 관계개선 시도등의 착잡한 얽힘 속에서 추구되어야 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이 특수한 유동성속에 우리의 안보를 모색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한반도가 갖는 특수한 유동조건으로 첫째, 국토의 양단에서 오는 북괴의 부단한 전쟁위험이 존재, 둘째, 전후의 미·소의 냉전체제가 계속 한반도에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과 일본이란 두 세력의 대두가 미·소관계를 교묘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 셋째 이에따라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적응이 절박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는바 이는 따지고 보면 한국의 안보는 대미일변도 의존으로부터 자주국방, 자주방위체제로 지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작년 외교교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국의 신전략 체제가 2.5전쟁에서 1.5전쟁체제로 바뀌었고 게다가 Nixon Doctrine에 의한 주한미군 감축등은 우리 안보에 새로운 시련을 던져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일면 이러한 미국의 일련의 방위개념의 성격변화와 아울러 미군감축이 우리의 군사적인 의타적 자세를 자주적인 자세로 전환시킬 것을 요청하는 타율적인 외적 요인이기도 하다. Nixon Doctrine은 신전략체제로 말미암은 Asia지역에서의 「힘의 진공화」현상을 방지하는 대처방법으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것은 첫째, 미·중공관계개선을 기함으로써 힘의 진공지역에 대한 중공의 침투위협저지, 둘째, 국내분쟁적 성격을 띄고 있는 국지전에는 직접 개입을 피할 것이며 현지정부에게 기본적 방위책임을 이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신전략체제의 허점을 방지하는 보완책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

28. Edwin o. Reischauer, Transpacific Relations 및 사회과학(성대사회과학연구소, 70년 11월) p. 40 참조.

그러나 여기서 우선 한국안보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일본의 한국안보에 대한 미국 대역의 문제이다. 비록 일본의 한국안보에 군사적 기여를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수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 이유는 ①반세기 동안 일본군국주의 지배를 받은 한국의 민족감정이 허락치 않는다는 점, ② 일본의 군사적 개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를 수반하는 역사적 경험이 된다는 점, ③ 한·일간의 군사적 제휴는 중공에 대해 가일층 위협감을 자아내게 하여 결국 중공·북괴를 밀착시켜버릴 위국초태가능성이 있다는 점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보장의 제일차적인 급선무는 「자주국방 체제화」와 「안보외교의 강화」 그리고 「안보문제에의 정치적 접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 자주국방체제화

오늘날 북괴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항하기 위한 자주국방력확보는 당면한 시급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여기에는 먼저 국군장비의 조속한 현대화, 국군의 질적 정예화, 예비군동원체제의 확립, 군수산업육성등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중 국군현대화 계획에 관해서는 지난 2월 6일 한·미정부의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일단락짓게 되었거니와²⁹⁾이 공동성명은 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기원조계획과 제 1차년도분으로서 1억 5천만불의 추가군원 배정, ② 주한미군 2만 명감축에 따른 한국군 및 미군의 재배치, ③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한다는 미국결의, ④ 한·미양국의 「연례안보협의회의」개최 등에 합의를 본 것으로서 이는 작년 7월 8일 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의 감축 방침 통고가 있던 후부터 8개월동안 한·미간에 현안문제로 돼왔던 「국군현대화계획」을 매듭지은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13일에는 정부측과 미「콜트」회사간에 M16소총공장 국내 건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육성의 첫단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금년은 휴전후 우리 방위사상 일대 전환을 이룩한 획기적인 해로서 종래 서부전선에서 방위임무를 맡아왔던 미 2사단이 금년 3월초순 서부전선 전초진지에서 완전철수, 후방지원방위를 맡게 됨으로써 한국군이 155mile에 걸친 전체전선을 인수, 전담케 되었다. 이는 바로 자주국방의 현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국방의 새 전기를 맞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자주국방의 체제화할 단계에 처하여 그를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즉 미군이 감축되는 오늘날 방위의 주력이 미군에서 한국군에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① 장차전에서의 미군의 역할과 성격

29. 71년 2월 28일 자일간지 참조.

규명해야 하며, ② 한·미간의 전략개념의 조정에 의하여 자주국방의 당위성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③ 이에 따르는 새로우며 적절한 전략체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④ 다음에 무기체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르기 위하여는 한·미연례안보회의를 상설기구화하여 북괴의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에 대한 한·미간의 정세관의 차이를 해소시키는 노력을 제도화하면서 대한 방위공약에 추호의 변함도 없다는 미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참다운 자주국방 체제화를 위하여 ① 상기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을 실속 있게 완수해야 하고 ② 방위산업의 자립도는 곧 자주국방의 필수조건이므로 군수산업의 육성을 통한 이의 자립화를 추구해야 하며(M16 소총공장건설에 있어 1,500만불은 방위차관이며 이는 차관군원이 시발점임을 의미), ③ 국군장비의 질·양 개선과 정병주의 및 병력수준 재조정을 통한 군사재정부담의 합리화 처리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 안보외교 강화

위의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에 관한 한·미공동합의는 우리 안보외교의 하나의 결실이거니와 한·미간의 공동방위란 유대관계가 다져지면 질수록 북괴가 아무리 도전을 일삼더라도 이는 사전에 그 야욕과 만행이 좌절되고 말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자주방위능력을 보유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안보는 역시 미국과의 공동방위를 위한 협조체제의 모색이 불가결한만큼 우리의 정치·외교적인 접근이 계속 요청된다.

무릇 현대 전략은 예방전쟁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대미안보외교는 현단계에서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한·미방위조약의 보완에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현 방위조약 3조에서 「각당사국은...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괴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정세와 또한 현대전은 「속결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된다. 더구나 공산측의 방위조약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북괴·소련조약 1조) 또는 「지체없이 전력을 다하여」(북괴·중공조약 2조) 지원할 것을 못박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 방위조약은 최소한 NATO조약과 같이 적의 무력공격을 「전 조약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즉각 자동방위를 규정(5조)하고 있는 강력한 내용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방위조약과 안보조약도

필경 예방전쟁을 최선의 방책으로 삼을진대 이왕이면 강력한 조문과 내용을 삽입 시킴으로써 적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소망스러운 일일 것은 물론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우리의 안보외교는 「Asia 지역 집단안보체제」(PATO)의 구축에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경우 경제건설을 위해 방위비를 최소한도로 줄이면 서³⁰⁾ 안보체제를 강화하려면 새로운 정세에 적합한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Asia도 세계적인 추이에 발맞춰 서서히나마 동맹체제에서 「지역집단안보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왔으며 우리의 대 Asia 안보외교정책의 기조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Asia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그리고 중공과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는 지역안보가 매우 필요한 것이며, 한편 Asia에 힘을 개입해왔던 미국이나 소련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안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우 당장 실현전망은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ASPAC 같은 기구를 재검토, 강화하여 이의 실현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해결의 관건은 우리의 「안보외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3) 안보문제에의 정치적 접근

오늘날 우리의 안보문제는 군사적 면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approach 해야 할 단계에 처해 있다. 우리는 군사위주의 질서에서 정치위주의 질서로 전환되는 70년대의 보편적인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치적 다원화 경향과 더불어 군사적 양극화와 정치적 다극화가 상충하여 질서는 여전히 필요하여도 군사위주의 질서만으로써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여기에 정치구조와 군사구조의 상충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군사질서보다도 정치질서 즉 군사적 단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단결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세계질서의 개념에 대한 미국의 기본구상의 변화가 그의 대 Asia 정책에 투사반영된 산물이 지역분쟁의 비미국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분쟁의 비미국화의 군사적 표현이 Asia방위의 Asia화라고 한다면 이것의 정치적 표현이 Asia에서의 다각적인 세력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앞으로

30. 금년도 예산단 보더라도 일반재정규모 5,282억원중, 국방비는 약 1,278억원으로 예산과 대비, 구성비는 24.2%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지출인 투융자는 1,653억원으로 예산의 31.3%를 점하고 있는바, 이들 국방비와 투융자가 합하여 55.5%를 차지하고 있어 「일면건설」·「일면국방」이란 쌍두마차적 예산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5,282억원이란 예산은 GNP와 대비, 17%를 상회하는 높은 조세부담율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거니와 가뜩이나 작년 8월 한국국방비 자담증액론을 들고나온 Porter 미대사의 발언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가피하게 우리의 방위비는 앞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Asia와의 관계를 군사적인 관계에서 비군사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고, 다각적인 세력균형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그의 비미국화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미군감축의 정책적 원천인 비미국화정책은 중공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주축으로 삼아 Asia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종래와 같은 군사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정치적 접근을 시도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장차의 Asia의 질서는 군사적인 안보나 질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은 정치적 접근을 의미하는 비미국화정책의 일환인 미군감축에 대처한 안보문제에 대해 군사적 접근을 시도하기에 앞서 정치적 차원에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정치적 접근, 후군사적 접근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3]. 민주역량 배양

우리는 위에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치역량 배양책의 일환으로 외교와 안보역량강화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보았거니와 이제 여기서 우리는 대내적으로 통일목표달성이 주축이 되는 민주적인 통일촉진의 조화정치 pattern을 마련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통감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토통일의 대내외적 계기조성을 위해 내적으로는 국민의 동질성과 동일체감을 국민대중의 생활의식속에 정립하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기저로 한 민주정치제도의 우월성을 확립해야만 참된 정치적 민주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변화되는 대내외의 새 국면에 적합한 민주적 조화정치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언하면 우리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건설과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통합과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국토통일에 귀착시키는 정치발전적 전환단계의 촉구를 위해 합리주의적인 민주정치윤리관과 민주적 가치를 정치체제속에 정립하여 명실상부한 민주화로 이행하는 정치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근래 한국정치상황을 분석해 볼때 근대화과 민주화과정에서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한 정책전개로 인하여 민주헌정의 정통성을 후퇴시킨 경향도 없지 않다. 기실 민주주의체제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부조리와 불합리를 극복하고 민주역량 강화를 통한 정치발전을 경제건설과 병행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신장함과 더불어 경제발전으로 모아진 부의 편중을

지양하고 부정부패일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진국의 근대화과정에서 경제발전에 치중하다 보면 기존질서의 분화, 혼란과 부정부패부의 편재가 뒤따라 정치후퇴를 가져온다는 Samuel Huntington교수의 이론을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박대통령의 「8.15선언」에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간경쟁을 제창했는데, 여기에는 비단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장점이고 강점인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등 체제의 우월성의 실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실한 중산계층을 육성시켜 빈부의 격차를 해소, 민주정치제도를 보장하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복피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하며, 또 우리는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고 책임정치와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촉진단체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복피보다 우월한 국력을 배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국토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leadership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적 합의」위에서 통일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민주역량확보를 위해서 민주주의 토착화, 정치적 근대화 정치적 leadership의 확립, 중간계층의 육성 그리고 사회적 통합문제 등에 대해 분설해 보기로 한다.

(1) 민주주의의 토착화

일찍이 Max Weber가 말했듯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종교혁명을 통하여 형성된 시민계급의 생활신조로서 전개된 정치이념이었다. 이러한 서구의 역사적 산물인 자유민주주의를 모방, 이식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수다한 시련을 겪어오면서 4반세기의 연륜을 헤아렸으나 아직도 이땅의 정치풍토 위에 토착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처럼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국민전체의 가치 기준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국민전체와 통치 elite들의 가치체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그 운영에 숭한 시행착오를 수반해 왔음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같이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로서 출발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 제도하에서 무엇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도이념이 부재했으며 더구나 정치현실에 있어서 국민전체의 가치체계의 혼란, 민주정치에 대한 혼란부족, 정치의식구조상의 anomie 현상, 집권자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국민대중의 참여의식 결핍등으로 charisma적 지배를 가능케 해왔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한국의 참다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신봉자의 역량과 지혜와 용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이는 민주주의의 규율과 책임감에 피차자의 자각적 동의가 결합될 때 보다 강력한 이념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이념과 원칙은 그의 바탕이 될 정치·경제·사회적 풍토의 특수성에 의해서 융통성 있고 탄력성있는 자기 발전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단계의 한국이라는 역사적 풍토와 실태가 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객관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와 시련이 무엇인가를 구명,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있는 고민을 살펴보면, ①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한 경제적 토대의 결여, ② 확고한 가치체계에 입각한 이념의 빈곤, ③복합사회적인 이중사회구조 ④ 전전한 중산층의 결여, ⑤ 대중의 정치의식수준 미달, ⑥ 정당의 미발달, ⑦ 지도자의 권위주의적 성향, ⑧ 「매스·콤」과 식자층의 정치적 역할·기여불충분 ⑨ 타조직에 비해 비대한 군부역할, ⑩ 압력단체의 부재등을 들 수 있는바, 이는 물론 후진국에 공통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주정치의 발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주주의 존립을 가능케 해주는 여건들이 성숙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전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상 서구에선 정치적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동시적 추진이 가능했지만, 중산층의 결여등 사회구조적 여건을 달리하는 후진지역에서는 양자의 동시적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구조의 발달을 수반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현실에 토착키 어려움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즉 산업화의 추진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과는 괴리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우리의 민주정치적 권위의 정통성(legitimacy)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기 제요인이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선결요전임을 강조하거나 Lipset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경제적 발전수준과 민주적 정치발전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선·후진국을 망라하여 1대1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론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설로 인정할 수 있는만큼,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제 1단계는 여건조성에 있음을 지실해야 한다.

요컨대 민주주의란 하나의 이념적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고 대중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에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당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이 보장돼야 하고, 둘째 대중의 동질성과 일체감이 조성돼야 하며, 셋째 자유의 욕구가 생활화돼야 하고, 넷째 사회정의가 실현돼야 하며, 다섯째 대중이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섯째 정치적 지도자의 leadership, 합리적인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구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들 자유민주국가가 갖는 최대의 무기이자 기본장치인 의회민주주의의 육성이 시급한 것이다. 의회제도와 의회정치는 국가의 권력구조와 정치현상의 상관관계에 있고 그 국가의 정치체계구조와 함수관계에 있는만큼 우리의 의회정치의 건전한 발전은 곧 우리민주정치의 전진을 의미하게 된다. 원래 민주정치는 출발부터 의회정치로 상징되어 있거니와 의회정치의 성패여부는 곧 민주정치의 사활을 결정한다. 따라서 의회정치의 문제는 모든 민주적 제도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감안, 우리는 오늘의 의회정치의 비정상적인 무기력화와 극한대결의 실태를 타개하여 의회민주주의 전통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또 중시되어야 할 것은 정당정치의 건전한 육성이다. 이를 위해 오늘날 한국 정당들이 지니고 있는 체질적 성격으로서 의존성·붕당성 권위주의와 기회주의적 성향·보수성 등에 내재하는 모순점을 타파, 체질개선을 통한 정당풍토의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념정당과 정책정당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 조직 및 활동면에서 민주화를 기해야 한다. 결국 의회정치의 근간이 정당정치임을 감안해 볼 때 정당의 건전한 육성은 곧 민주정치의 건전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검토할 때 민주정치란 제도보다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감지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제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민주정치에 실패한 신생국가에서 입증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민주정치의 운영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정치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의무를 독하여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2) 정치적 근대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근대화라함은 민주적 정치발전 즉 민주주의화로 이해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발전의 개념은 사상의 분석에만 그치는 재관주의 보다 Ideology적 의미를 내포하는 민주주의적 이념을 내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먼저 저간 우리의 정치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그것은 정치불신과 정치부재현상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본바와같이 한국의 정치체제는 서구적 민주주의로 화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머리속에는 민주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 심장

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그리고 개별적 계층을 막론한 전국민의 맥박이 뛰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이중적인 사회구조 기반위에서 집권층과 민중사이의 간격, 지지투입의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의 통치과정 사이의 간격등이 벌어져 상호 통일적 연관적인 작용을 할 수 없는 이중정치 과정의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치와 민중의 유리현상은 「정치가 집권층과 국민사이의 상호 교류에서 이룩되는 과정」이란 원리가 외면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민들에게는 정치가 정치인만의 것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했고 목표의 달성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없어도 정치는 가능한 것처럼 오해해왔다. 국민들은 이같은 정치부재현상에 대해 체념에 가까운 무관심 속에서 비판의식의 마비와 함께 참여의 단절을 자초하고야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양극을 달리는 여·야의 대치상황으로 의회 정치는 부재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정당은 그들의 지배계층을 흡수하지 못한채 만성적 파벌싸움이라는 원초단계에서 주춤했었다. 게다가 그 성격이 서구의 Conservatism과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이며 보수적인 한국의 정당풍토는 정치문화를 비합리적 정치작풍에로의 조성을 촉진해왔다. 그리고 저간 부정선거나 타락선거로 정치풍토는 흐려졌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의식도 흐려져 정치의식구조의 불안정에서 빚어지는 이른바 anomie 현상을 야기, 정치에 대하여 환멸감이나 무관심하게 되었다. 더우기 정치 근대화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때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근대화의 적인 파벌주의·족벌주의·불당성·권위주의·수구주의 부정주의 등에 집착하고 거기에 기인하여 각종 비능률과 부패의 원천을 조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정치적 근대화에 해독을 끼쳐왔다. 한편 우리의 근대화 추진에 의한 급속한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근대성(modernity)은 안정을 낳지만, 근대화(modernization)는 불안정을 낳는다」³²⁾는 Huntington 교수의 말에서 시사받듯이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지역간 및 계층간의 격차조성은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축소시켰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부에의 권력집중은 국회와 정당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결국 여사한 정치풍토는 우리의 정치적 근대화에 암적 그림자를 던져주었고 우리 민주정치는 정체속에 맴돌았을 뿐크게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참다운 정치적 근대화를 이룩하여 민주적 정치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이상의 제부조리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근대화의 본질적 의미는 전통사회적 제요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해가면서 한 사회를 합리화하고

32.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1968, p. 46 및 신동아, 71년 2월 p. 70 참조.

민주화하고 공업화하는 종합적 사회발전 과정의 총화라 할 수 있고, 동시에 근대화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의 병행적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개념이라 할 수 있는만큼 우리의 정치적 근대화 역시 경제적 발전과 진전돼야 한다. 정치적 근대화의 「키」는 다분히 경제적 근대화의 날개로써 역할할 것이며 경제와 정치의 근대화라는 명제를 동일한 목표아래서 추구되어야 하며 정치적 근대화가 곧 경제적 근대화, 경제적 근대화가 곧 정치적 근대화라는 것을 실증해야 한다. 특히 근대화가 되면 될수록 정치적 안정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오늘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환언하면 근대화는 정치적 안정을 수반할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없이 정치적 안정이 있을 수 없듯이 정치적 안정의 뒷받침없이 계속적이고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를 경제제일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정치의 근대화 즉 새로운 이념과 leadership에 입각한 건전한 정치에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급선무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해 권력을 보다 다원화시켜야 할 것이며 아직도 전근대적 정당의 테두리에서 맴돌고 있는 정당의 양태에 탈바꿈이 있어야 하고 또 고도 경제성장의 여파로 점점 커지게 될 대중의 정치적 anomie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상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오늘의 한국정치풍토 개선을 위해 그 전략적 요인으로 ① 도덕적 요인 ② 가치관의 정립요인 ③ 정치이념적 요인 ④ 정당의 정책적 요인 ⑤ 사회구조적 요인 ⑥ 경제적 요인 ⑦ 「매스·콤」의 역할을 위시한 문화적 요인등을³³⁾ 면밀히 통찰하여 조화있는 민주정치의 pattern을 형성해야 하며, 특히 정치풍토에 진정한 자주성과 주체성을 일깨워주는 중간계층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요구되는만큼 정치풍토를 현대화시켜 주교 힘을 부여하는 정치윤리의 가치지향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 발전의욕에 충만하면서 민주정신을 내면화하는 핵심이며 이러한 가치지향이 근대화의 정책의 제도속에 투입될 때 우리의 민주적 정치발전 즉 정치적 근대화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3) 정치적 Leadership의 확립

위와같은 민주적 정치발전 내지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다름아닌 바로 「정치적 leadership」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대중속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환기시키는 길은 이미 민중에 대한 소박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

33. 조선일보 71년 1월 9일자 참조.

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현대적 애국심은 단순한 감정에의 호소가 아니라 민중 생활 속에 안정과 희망을 줌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체제에 신뢰감을 부식하여 체제에 대한 우월감과 체제를 수호해야겠다는 자발적 애착심을 갖게하는 속에 참된 애국심이 형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국가적 충성심은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이 이루어질 때 발휘된다. 인간의 자유와 가치를 소외하는 Machiavelli적 상황이 노정된다면 결코 국민에게 통일을 향한 애국심의 발휘를 요청할 수도 없고 또 국민은 발휘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 민주정치는 참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의식과 통일에 대한 민족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고로 효율적인 민주정치체제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민주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긴요한 과제임은 말할 것도 없다. 후진국에서 이러한 정치체제능력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집권 elite들의 목적과 행동 즉 「정치적 leadership」의 확립문제이다. 이러한 leadership은 어디까지나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신뢰」에 입각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정치권력은 국민의 지지와 신임위에 형성되어야하며, 거기에 집권 elite의 높은 도덕적 수준과 튼튼한 정당성의 근거가 요청된다.

민주정치란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인만큼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려면 우선 공직에 대한 두터운 책임감과 함께 통치자측의 힘보다도 피치자측의 동의를 강조하는 권력관을 가져야 한다. 즉 한국정치인의 통폐인 책임감의 결여와 국민의 지지개발을 등한시 하는 그릇된 leadership 관념을 불식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와 leadership은 엄밀히 구분돼야 하고 leadership은 어디까지나 자유를 특질로 하는만큼 강압적인 지도방법이 아니고 설득에 의한 지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leadership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비록 민주정치에 있어서 leadership은 강력해야하나 그 지배가 아닌 지도는 설득에 의해 대표된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34) 따라서 민주적 leadership의 특질은 민주주의 체제하에 내재하는 자유에 있는 것이요, 항상 새롭게 다수의 의사를 찾아나가는 창조적인 과제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leadership은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All power corrupt, and absolute power is apt to be corrupted absolutely)라는 Acton 경의 명제에 젖어온, 권력불신에의 편향을 가진 민주시민의 권력의식과 조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실 후진국일수록 charisma적 leadership이 농후한 것이 일반적 현상이거니와 오늘날 후진국들은 이른바 「정통성의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통성은 점점 「유효

34. 정경연구, 69년 9월호, p. 94~98 참조.

성」에 의존하게 되고있다. 선진민주제국에서와는 달리 국민간에 기존 사회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정부의 정통성의 확립은 정부가 기존사회가치를 그대로 반영시키는데 있기보다는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창조해 내는 그 역량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대표적 leadership」으로 족한 선진민주제국에서와는 달리 근대화도상에 있는 후진국에서는 「창조적 leadership」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새로운 국민적 통합감의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창조적 leadership은 국민의 감정이나 요구를 통합하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질러서 그것을 설정해주고 표현해주는데서 더욱 뚜렷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근대화의 목표달성은 획일적인 행정위주로 변전했고 정당마저 관료기구화했으며, 게다가 지역간·계층간의 격차는 이중적인 사회 형성과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정치적 leadership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leadership이 보다더 대표적 leadership이 되기 위해선 가난의 추방과 함께 출세하지 않더라도 억울하지 않는 사회의 건설을 내세우고 또 추구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leadership이 보다더 창조적 leadership이 되기 위해서는 억울하지 않는 사회의 건설과 더불어 민족중흥의 사명과 국민총화의 정치력을 결부하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권력과 국민간의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leadership의 기능은 이미 전통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한 사회로 하여금 근대적 상태로 이전하는 과정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또 그 시간폭을 단축하기 위하여 국민의 전재능과 정력과 자원들을 근대화의 과업에다 투입토록하는 데 있다. 여기서 발전형시관에 상응해서 이러한 leadership에 요청되는 몇가지를 보면, 35) ① 변동에 대한 적극적 태도 ② 미래를 투시하는 능력 ③ 시간을 계열화(odering)하고 master 할 수 있는 능력 ④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목표의 형성으로써 vision과 시간의 지배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 ⑤ 상이한 개인과 집단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시간지향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이다. 단적으로 정치적 leadership은 정통성을 유지한 광범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참여와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신뢰의 풍토를 마련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신뢰는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근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고무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leadership이 그러한 신뢰를 불러일으키자면, Chester Barnard가 일찌기 갈파한바와 같이³⁶⁾, 스스로의 기

35. 이한민, 사회변동과 행정, 박영사, 1968. p. 249~256

반을 정통성과 도덕성 위에 두어야만 한다.

요컨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더라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통일의 조건이 성숙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고 그 조건이 성숙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하는만큼, 여기에 정치적 leadership이 일층 강조되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4) 중간계층의 육성

오늘날 후진국 대부분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요인중의 하나가 중산층 결여라함은 이미 지적한바와 같다. 오랫동안 식민제국에 착취당하고 또 균형있는 경제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신생국은 저소득으로 한계생존에 허덕이는 국민이 대다수이다. 후진국에서 「자유보다는 빵」하고 외치는 인간성실태의 민중들이 이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소위 시민정신을 갖춘 중산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말할나위도 없다. 경제적으로 최상위와 최하위의 계급은 극소수이고 중간계급의 국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 민주주의는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회계급의 분포가 Pyramid 형으로 되어 극소수의 유산층과 대부분의 무산층만이 존재하는 후진지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잘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지역에서는 이 양자간의 간격을 좁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산업화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적 변혁만이 격리된 도시와 농촌간을, elite와 대중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간의 간격이 멀면 멀 수록 정권의 교체는 정치적 elite의 교체에 불과하며 대중과는 아무런 구조적 관련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산업화를 촉진하는 세력으로서 흔히 서구에서 처럼 중산계급을 들고 있으나 후진국에서는 그러한 중산계급을 형성치 못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지도층,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산업화의 추진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역시 정부가 주도체가 되어 산업화에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거니와,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빛어지고 있는 지역간·계층간의 심한 소득격차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다. 이 중사회구조적 병폐를 제거하고 중산층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산업화에의 지향은 비록 이것이 과도적 불가피한 현상이라 상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의 해결은 커녕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 벌어지기만 하는 격차에 나타나는 불균형의 확대재생산이 구축하는 사회적 단층이 바로 오늘날 사회적 불안의 잠재적 요인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36. 이한빈, Ibid. p. 256.

따라서 한국의 지도층은 사회의 이중구조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 민주주의의 진실한 발전을 위하여서도 하루 속히 여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중간계층을 육성하는데 근본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연전에 1,500여명의 교수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근대화과정의 혜택을 국민전체가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2%에 불과 했고³⁷⁾ 과반수가 재벌및 대기업주, 집권층, 도시민을 지적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 구조인가를 능히 알 수 있거니와, 앞으로 개발이익이 균점될 수 있는 분배정책이 시급히 시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통일이념으로 추구되어야 할 민족주의 전개에 있어서도 역사와 현실은 이 과업을 달성하는 추진세력이 사회의 중간계층임을 알려주고 있다.³⁸⁾ 민족주의는 그를 실천하는 지도계층만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기여하는 사회적 세력이 전제조건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근대화나 공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중적인 사회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계급육성을 시도해야만 한다.

기실 우리의 국민적 이익과 남북통일이 완전히 합치될 수 있는 태세정비란 결국 통일에 가장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따라서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광대한 중간계층을 규합, 편성하여 그로써 거족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여하한 통일공세라도 받아 넘길 수 있고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5) 사회적 통합

본래 한국의 사회구조는 일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른바 식민지적 2중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사회구조란 J.H. Boeke가 밝힌바와 같이, 외래의 제국주의적 침략세력과 토착민족이 상호 융화될 수 없이 대립함으로써 한 사회안에 피가 통하지 않는 두 개의 이질적인 사회가 병립하는 사회구조를 말한다. 이 이중사회에 있어서 식민지 토착민족은 제국주의적 침략세력의 압제, 수탈, 학대로 달미않아 민족적인 긍지와 humanity를 상실하고 위축된 좌절감과 열등의식에서 생기를 잃은 고목처럼 경화되고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일제로부터 받은 이중사회구조의 상흔은 그동안 치유되지 않은채 잔존해왔고, 결국 그 잔재위에 우리의 파행적 산업구조와 이중경제는 한국사회의

37. 중앙, 71년 2월 p. 126 참조.

38. 중앙, 70년 10월호 p. 74.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됐다. 그 사회의 경제구조가 그 사회의 제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이다. 우리의 경제적인 과행성과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커다란 격차는 전술한 바와도 같이 한국사회를 깊은 chasm으로 갈라놓아 이중구조화시키고 말았거니와 더욱이 공업화의 속도를 앞지르는 도시비대화는 농촌과 의식구조에까지 넓은 간격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부의 재분배는 도시에 편중되고 근대화의 혜택을 못받는 농촌은 비판의 안목조차 흐려져서 대중조작의 물결에 휩쓸려 열등의식 속에서 도시체로의 진출만을 추구하는 역기능적 사회체제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의 낙후가 만성적인 정치무관심으로 고질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눈부신 성장은 가치의 이중구조를 만들었고 사치와 허영, 유행과 소비풍조를 더욱 자극했으며 계다가 0.8에 달하는 소비성향은 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근본적인 착오를 유발시켜 놓았다. 또한 국민의 비판의식과 정의 감각의 마비로 말미암아 사회에 대한 불신의식이 싹텃고 공정 의 기풍은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도처에 만연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산업화, 근대화체로의 급속한 진행은 정치는 물론 사회·문화·정신면의 균형있는 성장을 동반치 못했으며, 따라서 의식구조에 비합리적인 요소를 심는데 크게 작용, 그 여파로 우리의 가치관도 변해 물질을 숭상하고 금력을 높이 추구하는 관념이 보편화되어 물질과 황금만능사상을 배태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치관의 전도현상을 야기시켰고, 나아가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의 둔화를 초래시켰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생기는 역현상과 함께 전통적인 정신문화위에 폭로처럼 쏟아져내린 서구 기계문명의 교민까지를 한꺼번에 짊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이같은 제현상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해가됨은 물론, 국민적 동질성 내지는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이라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구의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잘못 받아들인 우리는 자신의 치부나 영욕만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상호적 협동정신의 결여, 나아가 국민연대감의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어찌면 민족중흥이란 민족국가전설의 과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성장 그 자체까지에도 큰 위협을 던져줄지 모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태세확립에 있어 70년대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신한 기풍이 진작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며, 우리의 의식구조와 생활자세의 근본적 개혁단행이 각진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를 정확하고 합리

적이고 납득이 가는 「사회행위규범」의 정립이 시급한 것이며 오늘의 한국적 사회의 체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기풍정화운동」의 전개와 함께 일대 「정신혁명」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러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한동안 주장하다 흐지부지 해 버린 「제 2경제운동」을 다시 활발히 추진, 「물질적 근대화」와 「정신적 근대화」의 합리적 조화와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 실상 근대화과정을 사회구조의 분화와 통합의 변증법적 지양이라 본다면, 우리사회는 아직도 시행착오적인 뒤범벅속에서 혼미상태의 만성화를 면치 못하고 있는만큼³⁹⁾ 지금 우리의 근대화 도정에서 사회구조의 통합은 중요한 과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다음에 이러한 사회적 통합을 기할 잠재력은 사회적 측면에선, 기대되는 새로운 성원의 사회화작업의 성취와 사회연대성의 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먼저 새로운 성원의 사회화작업에 있어 바람직한 가치체계의 기준을 살펴보면⁴⁰⁾ ① 전통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창의성의 강조와 ② 권한과 의무의 분화를 명시하는 규칙에의 충실 ③ 민주적 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는 관행의 권장 ④ 업적주의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의 명시 ⑤ 민족을 일차적인 준거집단으로 삼는 보편정신의 확립을 다짐하는 가치의식을 고취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기준을 사회성원의 행동체계속에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① 장차의 만족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존의 낡은 가치를 희생하는 인내와 노력이 장려되어야 하고 ② 새로운 가치를 존봉하는 자와 위반하는 자를 구별하는 기준과 제재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③ 상위 지위자일 수록 새로운 가치의 신봉자이도록 서열조직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④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준거집단을 구성하고 그것을 통한 예기적 사회화의 효과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연대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단위의 재조직화를 꾀해야 할 것인바 지역사회단위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조, 육성해서 촌락사회단위, 중소도시단위, 대도시단위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통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1) ① 공동사회의 생활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의식속에 일체감을 발견해야하며, ② 공동사회와 대중사회 양자를 종합할 수 있는 Consensus를 찾아야 하고, ③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양자간의 능률과 정서가 조화되는 협동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④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화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의식적

39. 현대한국의 위치와 과제, 현대사상사, 70년 12월, p. 190.

40. 신동아, 70년 3월 p. 87~88 참조.

41. Ibid p. 90~91 참조.

지적인 복지화계획이 필요하며 ⑥ 지역사회단위의 자율성과 자치권의 부여가 요청되는 것이다.

[4]. 통일을 위한 정치이념의 확립

한 마디로 우리의 정치이념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그 뿌리를 박지 못하였다. 갑자기 도입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적 체질과는 순화되지 않아 숭한 혼란을 야기했고, 지난날 우리의 집권층은 자유민주주의니, 행정적 민주주의니, 민족적민주주의니 하여 정치적 Ideology로 내세웠지만 그것이 한국의 전통성과 체계성의 결여와 한국적 정치상황과의 유리 및 지도층의 철학의 빈곤 등으로 국민대중의 정치의식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갓 Slogan으로 표방함에 그쳤다.

이렇게 볼때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사 조류를 선구적으로 감지하고 때가 늦기 전에 민족적 사명, 즉 조국근대화와 통일을 수행할 새로운 정치적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확립에 서두를 것이 통절히 요청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민족 국가건설을 향한 조국의 근대화와 통일의 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구체화될 단계를 우리는 맞이한 것이라 하겠으며, 그같은 민족주의의 지도이념이야말로 근대화작업이 부딪치고 있는 한계선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이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기본적 이념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도 뒤늦게 현대사 전개과정에 참여한 국가로서 경제발전의 전망을 부여하고, 나아가 지방과 지역, 상이한 직업과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간의 넓은 사회적 불평등의 형태와 사회적·경제적 여러가지 완고성속에 실존하는바 빈곤과 침체와의 싸움에서부터 국민을 한데 뭉쳐 능률적인 정치단위로하여 근대화를 성공시키려면 한국적 민족주의는 필히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족통일이란 제일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민족사회의 입체적인 구심점을 중심으로 통일작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같은 입체적인 구심점은 민족주의 이념 이외는 있을 수 없는 것인만큼 우리의 통일과업 달성을 위해서도 한국적 민족주의는 필히 추구되어야 한다.

서구의 근대화하는 Max Weber가 구명했듯이 Protestantism의 종교적 열정이 밑받침이되어 비로소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거니와 W.Rostow는 그의 "The Stages 이렇게 볼때 결국 민족주의는 단순한 정치이념이나 민족국가형성의 기간논리만

of Economic Growth”(경제성장의 제단계에)서 독일, 일본의 근대화가 단순한 경제적인 「이윤동기」에서가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긍지와 열정이 밑받침이 되어 성공적으로 이룩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 근대화의 사상적 밑받침을 감안하여 볼 때, 한국의 근대화도 결코 단순히 egoism의 「이윤동기」에 입각한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적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족적 사명의 자각과 신념에서 비로서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제 바야흐로 한국은 근대화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승공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3·1운동이래 한국의 정치문화의 전통으로 된 민족주의가 새로운 지도이념으로서 등장해야 할 역사적 단계에 이른만큼 그러한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는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 대비책은 ① 민족중흥의 대업을 지도해나가며 또한 그같은 대업완수를 위한 신념과 긍지를 부여할 민족주의 사상을 정치철학으로 확립해야 하며 ② 그러한 민족주의의 지도사상에 입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체제전환에 관한 설계도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③ 그같은 사상과 설계도를 포함한 지도이념을 체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현 elite를 재훈련하고 새로운 elite를 양성해서 조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통일을 위한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역사의 재창조를 밑받침으로 한 민족주의가 신장되지 못한채로 기도되는 통일이란 우선 성공의 가능성도 희박할 뿐더러 만일 성공한다하더라도 타율적 요인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공간적 통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주의가 처방하고 정당화하는 통일의 과정만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보존하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통일을 추진하는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을 위한 근간 이념으로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우리는 여기서 A. Etzioni 교수가 「통일이전의 상태」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점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²⁾ 「통일은 민족주의 이전의 시기, 민족주의 이후의 시기, 또는 민족주의 그 자체표명의 시기에서 발안될 수 있다. 민족주의 이후 시기의 통일은 다른 두 시기에서 이룩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며, 민족주의를 표명하는 시기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손쉬우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 아니라 후진국발전과 민족통일의 열원이며 지표이고 Vision이라 할 수 있다.

42.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1965 및 신동아, 70년 10월 p. 69 참조.

고로 분단국가의 경우 이 민족주의는 통일에의 자석이고 결속의 가치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민족주의는 민족통일의 이념적 구심점으로서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쳤던 민족주체성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공산학정화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띤 새로운 이념으로 단장하여 민족의 총의와 단결을 위해 민족앞에 그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70년대에 있어 우리는 누구나 떳떳이 민족주의를 거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 민족주의는 통일어로 향한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창조적 의지」의 발동속에 전개되어야 한다.

[5]. 승공체제의 구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북괴 사회체제의 지배적인 Ideology는 Marx-Lenin 주의이고 이것은 정치적 및 법적 Ideology 뿐만 아니라 도덕·철학·과학·예술 등 모든 분야를 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제도하의 우리와는 판이한 사회풍토를 구축한 북괴사회는 그 체제 자체가 북한통일에의 커다란 장애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고로 통일을 대비하려면 우리들 자신의 사회체제를 내용 충실한 것으로 정비하여 그 우수성을 시험하면서 북한의 전민중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승공태세라 할 수 있는 바, 이미 검토해 본바와 같지만 여기서 다시 그런 태세를 갖추기 위한 몇가지 조건을 요약해보면, ① 올바른 민족의식의 양양과 민족주체성의 확립, ② 외래적 요소의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생활화, ③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풍토의 조성, 특히 자유의 정신에 투철하려면 「from의 자유」와 「to의 자유」가 표리불가분의 관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④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병행적 발전에 의한 국민적 통합의 촉진, ⑤ 국민에 대한 민주교육의 철저한 실시, 특히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한 민주교육의 당면과제는 공산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민주주의의 긍정적 면을 강조하는 적극적 방법이 절실하다. ⑥ 희생적이며 유능한 지도세력의 육성과 그들에 의한 공산주의 비판적 극복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우리의 사상적 태세에 관해 일별해 보면, 우선 북괴의 사상풍세에 대비할 우리의 태세는 보다 폭넓고 적극적이며 깊어야 함을 느낄 수 있다. 사실에 있어 한국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남북간의 사상적 분열과 대립이다. 이점

에서 북괴 사상계의 동향을 분석, 우리 것과 비교하고 여기에 대비할 우리의 태세를 갖추는 작업이 시급한 것이다. 실상 유물사관을 받아들일 것을 맹목적으로 강요당하고 그 dogma 앞에 충성을 다하는 공산당이 이끄는 북괴의 사상정황은 전투적이며 강제적, 폭력적, 몰인정적이며 자유의사의 봉쇄, 인간성의 박탈, 획일성, 야비성 등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⁴³⁾ 단적으로 말해 공산당에 있어서 사상은 중요한 침략적, 파괴적인 수단방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정치이념은 Marx-Lenin 주의로 분장한 김일성독재주의요 김일성사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김일성사상이 북괴의 모든 정책과 전략·전술의 기저로 되는 것이며, 북괴의 대남전략도 여기에서 추출, 파생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김일성체제의 행동방식은 혹독한 무단정치에 있다. 그것이 북괴내부에서는 숙청과 terror의 만성화로 나타나고 대남정책에서는 무력사용위협과 폭력혁명시도로 나타난다. 한 마디로 김일성체제는 Stalin식 일인체제이고 가장 폐쇄적인 일인독재체제이다. 이런 Stalin형의 Soviet체제를 모방한 김일성체제는 지금은 오히려 Stalin 체제보다도 강하고 Stalin체제가 이미 50년대초에 소련에서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에 단 엄연히 존재해 있으며, 같은 공산권내에서도 북괴의 김일성체제처럼 폐쇄적이고 극좌적인 체제는 없다.

이와같은 김일성의 일인독재를 강화하고 그 무력남침을 뒷받침하는 소위 「사상교양」을 모든 수단을 다하여 강제하고 있는 것이 북괴 사상공세의 일단면이다. 북괴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주의 노동청년연맹」을 통하여 그리고 「공장, 집단농장 그밖에 모든 집단생활체에 마련된 「혁명전통 연구실」, 「민주선전실」 등을 통하여 이른바 「계급성」·「사상성」의 교양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의 「5차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주민 사상교양에 있어⁴⁴⁾ 선차적인 과업을 학생계층에 돌렸는데, 먼저 학생들을 교양하고, 그들이 당원을 교양하고, 당원이 민중을 교양하도록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또한 당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교양을 해야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 ①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매일 두시간 이상씩 학습한다. ② 토요일마다 간부집체학습을 제도화한다. ③ 현직 간부들은 년 1개월씩 각급 정치학교에 입교토록 한다는 등의 학습체제를 밝혔다. 이와같이 당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체주민, 특히 청년학생들에게 소위 「유일사상체제」에 입각한 공산주의 교양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은 김일성의 일인독재

43. 국토통일원, 통일논총(1), 70년 5월, p. 167

44. 국토통일원, 국토통일, 70년 11월(제 5호) p. 28

정치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특히 당원들의 사상적 동요와 혼란을 막아보자는데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군사·사상·경제·사회 4형태의 북괴의 도전중 사상적인 도전이 남한이 전쟁을 안겨온 새로운 세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혁명적인 인간, 자주노선강화, 김일성우상화, 노동사상강조 등으로 지난 26년간에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개조된 북괴의 사상에 대응할 우리의 사상적 무장이 절박한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상적 태세준비를 위한 몇가지 점을 살펴보면, 45) ① 정책상에 있어서의 사상 경시경향 지양, ② 사상 또는 정신문화의 학문적 연구의 산발성, dilettantism의 지양, ③ 세계적 제사조의 흐름과 그 조화 있는 이해의 요구, ④ 북괴의 사상공세에 대한 직접적, 대응적인 연구의 강화, ⑤ 대중에 대한 사상적 교화의 구체적 진흥책강구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통일의 철학, 통일을 위한 사상적 태세, 통일을 위한 정신적 풍토의 조성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원, 통일문제연구소, 공산권문제연구소 등의 제기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통일문제, 공산권문제등이 단순히 일부 귀순자들이나 일부 정치학자 또는 정치가들의 관심사로만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사상적 내지 정신적 준비태세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면 ① 민족통일의 필요성을 국민 각자의 가슴에 불어넣음과 동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에 투철한 elite를 양성해야 한다. 즉 유물사관의 극복을 위해 이론적으로 준비된 민주주의 elite들이 대량으로 요구되는만큼 이러한 elite의 대량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② 오늘날의 반공교육을 단순한 반공교육의 수준에서 탈피시켜 실질적으로 북괴에 대항할 수 있는 내실적 승공교육으로 지향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반공은 구호에 그치는 폐단을 근절하지 못하였고,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하는 경향을 일소하지 못했던만큼, 앞으로의 우리 승공사상의 자세는 「반공의 생활화」와 「승공의 행동화」란 면에서 갖춰져야 한다. ③ 이의 실현의 일환으로 정부나 교육기관에서는 형식보다 내용에 충실한 승공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초·중·고교에서 가르쳐온 「반공도덕」교육을 하나의 통일교육에 포함시켜 승공교육으로서의 내실을 기해야 하고 한편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인 「국민윤리」 또는 「교련」교육을 통해 반공이론 즉 공산주의의 이론비판의 실을 거두게 해야 한다. ④ 군장교 특히 정훈장교에 대

45. 국토통일원, 통일논총(1), 70년 5월, p. 170

한 사상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⑤ 「매스·콤」의 적극적으로 사상교양에 참여해야 한다. 「매스·콤」의 사상교양 참여는 온 국민의 반공교육에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며, 특히 소위 북괴에서 「Bourgeois적 부패성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제반요소를 과감히 척결하여 정신풍토 쇄신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 ⑥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기풍을 진작하는 일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측에서는 문화공보부와 문교부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보다 더욱 알차고 실질적인 승공교육으로 우리는 북괴의 모든 사상공세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비태세로서의 우리의 승공태세는 명실상부한 내실을 기할 것이며, 나아가 모든 역량과 함께 우리의 승공체제는 공고히 구축될 것이다.

7. 통일정책의 방향

(1) 이상에서 우리는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치역량배양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거니와, 요컨대 국제정치의 변화로 분단상황은 고착화할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우리의 외교적 대처책은 세계 전체의 보편주의와 극동이란 지역주의, 한국이란 개별주의의 3요소를 효율적인 상관관계로 배려, 동태적 적극성을 띤 주체화로 통일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우리의 안보는, 북괴의 도발에 대비, 집단성숙에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주국방체제와 전략발언권 강화를 통한 최소한 세력균형의 유지와 안보외교의 강화에 의한 지역집단안보체제의 모색을 추진해야 하며 이와함께 우리의 내적인 모든 민주역량의 총화를 기하면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치철학의 수립 그리고 사회의식과 승공정신의 확립을 위한 창조적 자유의 정신위에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민상의 정립을 시도함으로써 군사에서 사상에 이르기 까지 통일을 위한 총력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그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먼저 한국의 통일문제는 아직까지도 비운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문제이다. 통일문제가 제기되었던 원점의 그 테두리 속에서 밀폐된 채 대내적인 정치적 조작대상으로 되어 왔다는데 비운이 쌓아올려진 것이다. 통일문제가 그와같이 조작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체념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우리의 것이면서도 남에게 맡겨졌던 것을 말한다. 통일문제는 사실에 있어 극히 제한된 일부계층 즉 일부 지식층이나 위정자들의 전담물처럼 맡 못하는 가운데

뜨거워지기만 했던 문제였다. 따라서 그동안에 통일문제가 통치자계층의 전담물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통치 elite의 정치문화적 속성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문제는 명분과 상념과 현실이 상존하는 사태전개로 일관되어 왔다. 그리고 보면 한국의 통일 image는 통일에 대한 태도와 입장, 주장과 방안은 꾸준히 표방되어 왔지만 이들은 모두 주장이요, 방안이지 현실정치에 있어서 자기 의지관철의 실천의식이 구현되어야 할 정책으로서의 행동화는 부재상태였다.

이렇듯 통일문제가 통치자적 정치문화 속의 것이 되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는 안보체제의 확립문제에 대하여 많은 차질 또는 정치 및 사회적 energie의 불합리한 작용문제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① 동일민족의 문화적으로 이질화되어 가는 현상, ② 통일에의 의지가 바탕을 두고 있는 논리상의 모순 ③ Nostalgia적인 통일관등을 재래시켜 왔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소박한 상념과 무서운 현실간의 상관관계를 직시하여야 할 것이요, 정부는 또한 주체적 자각과 내외상황 전개에의 정확한 파악으로써 국제정치상의 분단국 통일 image에 정치적·외교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여 자기조절을 기함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통합된 통일의 좌표실정을 구축하는 주도역할을 담당, 통합된 하나의 한국적 image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통일정책」은 명분만이 아닌 정치상의 지상명제요 절실한 현실문제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단절과 분열이라는 시련에 맞부딪친 우리로서는 민족통일의 달성을 민족적 의지의 구현속에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의 역사적 의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다. 실로 우리에게 민족통일이란 단순한 목적이나 방법을 넘어서 실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합리성은 단순한 분석적 차원에서만 규명될 수 없는, 그것은 곧 실존적 행동의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궁극적 문제로 환원되는 것이다. 생각컨대 한국의 통일문제의 성격을 공간적 차원에서 보는 일차원적인 사고와 이를 공간 및 시간적 차원에서 생각하려는 이차원적인 사고의 차이에서 우리는 통일 논의의 가장 큰 심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일차원적 관점은 통일을 한국역사의 범주에서보다 현 국제사회의 테두리안에서 생각하는, 즉 안에서 보다는 밖에서부터 관망하는 듯한 비토착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상급까지 통일문제를 일차원적 관점에서 타율적으로 파악코자하는 타성에 젖어왔다. 그러나 통일의 민족적 과업이라하는 것은 통일문제가 지나간 한국 역사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즉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

을 포괄 이차원적 관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통일이 지닌 시대적 의미와 의의는 우리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고 분열된 민족적 경험을 통합하고 단절된 전통을 되찾는 것이 바로 이차원적인 관점에서 규정지을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과업의 성취는 바로 그 민족사적 성격 때문에 소수의 정치적 지도자가 시도할 수 있는 통일방안의 논의 보다도 전 민족, 각개인의 의지를 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민족의식의 전개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평화통일 역시 민족적 규범과 상징으로서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잡을 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비로소 처방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에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8.15선언」의 평화통일구상은 앞으로 제기될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위해서도 정책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통일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저간 수차에 걸친 여론조사의 결과가 말하듯이 통일방안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⁴⁶⁾ 우리는 통일 논의에서 국제적 여건이나 권력체제의 성격을 강조하는데 반비례하여 대중의 잠재적 힘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며 민족적 일체감을 응집, 보다 효율적인 민족 energie의 통일에의 동력화작업을 줄기차게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 장기적이며 본질적인 통일정책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일문제가 민족적 과제로서 재인식될 수 있고, 나아가 내외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너무나 고정적이며 명분에 사로잡혀 있다는 속성에서 탈피, 탄력성을 띤 다각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자세를 일별해 보면,⁴⁷⁾ ① 통일문제의 연구는 사고의 주관화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② 북한에 대한 이해의 태도, 관찰태도의 시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현실을 가치관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③ 결정론적, 운명론적 태도

46. 통일방안에 관한 저간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A)60년말 한국일보의 조사는 ①UN감시하의 남북통시 총선 45.5% ②중립국감시하의 총선 5.5% ③ UN감시하의 남한만의 선거 10.1% ④남북연방안 2.1% ⑤ 남북협상 8.3% ⑥ 기타 1.6% ⑦ 모르겠다 26.5% ⑧ 무응답 0.2% 등이고, (B)68년 공보부의 조사는 ①UN감시하의 총선 23.9% ② 북한지역만의 선거 4.2% ③ 중립국감시하 총선 11.5% ④무력으로 18.1% ⑤ 모르겠다 18.8% 등으로 나타났고, (C) 작년 2월에 발표된 국토통일원의 조사는 ① UN감시하 총선 31.9% ② 모르겠다 23.7% ③무력통일 12.8% ④ 현상태 10.3% ⑤ 남북협상 9.5% ⑥ 중립국감시 8.3% ⑦ 북한만 선거 1.4% ⑧ 기타 1.6% ⑨ 무응답 0.5%로 나타났다.

47. 국토통일원, *ibid.*, pp. 47~48 참조.

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문제의 해결에 임해야 하며, ④ 통일문제의 논의는 형식화되는 일이 가능한 없어야 하고, 정치화가 되어야 하며, 즉 통일에 대한 구체적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며 토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통일정책수립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앞으로 지향할 통일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통일 논의는 정책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역사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전 국민적 민족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② 이같이 민족전체의 의사로 초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통일문제는 원대한 구상과 계획, 임기응변적인 대응책 및 이론과 실천, 전문성과 대중성, 과학성과 철학성을 공유해야 하며, ③ 국제여건 속에 주체적 적응을 하기 위하여는 단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우리의 경우 통일은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재통합·재통일을 의미하는만큼 정치적 통일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통일면도 중시되어야 하고, ⑤ 우리로서는 현시점에서 UN통합방식을 고수함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UN방식이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는만큼,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유동적 탄력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가급적 정책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⑥ 전술한 바와 같이 반공교육을 승공교육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를 통일교육이란 테두리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⑦ 각종 반공단체를 정비통합, 통일추진운동을 일원화하여 국론통일을 구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추진단체 및 통일의식의 고취와 통일의식의 생활화운동을 추진할 범국민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⑧ 그리고 통일추진을 위한 지도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정치적 지상명제가 국토통일에 있다면 「통일정책」은 정부의 기본정책이라야 할 것이며, 그 외의 모든 정책은 개별정책으로서 기본정책의 실천을 위한 보완적 정책으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토통일 작업을 기본정책의 제 1차적 서열에 두느냐, 아니 두느냐에 따라서는 통일정책이 명실공히 기본정책일 수도 있다. 만약에 기본정책 실시상의 제일차적 서열이 통일정책이라 한다면 이에 부수되는 모든 종류의 개별정책, 말하자면 외교정책·국방정책·경제정책·사회정책 등이 통일정책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국가정책의 정상적 운영이요, 정책수행의 정도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개별정책실시의 대국적인 방향감각을 제시하는 일이 바로 기본정책의 기저요, 개별정책과의 밀착관계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국토통일원의 금년도 통일정책상의 목표를 보면,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박대통령의 「8.15선언」에 따라 금년도에 우선 ① 주체적 통일역량 배양과 승

공통일, 국민 정신자세 확립, ② 자유민주통일 구현을 위한 대책수립, ③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기초자료 완비 ④ 국론통일과 범국민적 단합촉진 등 4대기본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니와 한편 통일원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① 북괴의 무력침공시, ② 남북총선시, ③ 국제적 여건조성시등 여러 경우에 대비, 국내의 정세변동이나 적의 전략상 기도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북괴의 무력적화통일정책에 대비, 범국민적 단합을 통한 여건조성을 촉진토록 되어 있다. 또 통일원은 이러한 기본목표에 따른 실천방침으로서 ① 북한의 여러 정세파악 및 대비책 강구, ② 한국통일과 관련된 대내외정세 분석, ③ 국제협력을 통한 유익한 통일기반조성, ④ 통일전략의 다각적인 방안, ⑤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2단계 계획을 마련, 통일교육 전담교사 훈련방안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8.15선언」이후 정부의 통일정책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이거니와 「8.15선언」을 거부한 북괴가 결국 「8.15선언」의 제의를 수락하도록 국내외의 여건조성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앞으로 계속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박대통령은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째에는 평화통일의 길이 트일 것이라고 전제, 그 때가 되면 남북교류는 물론 그 이상의 것도 북괴에 여유있게 제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반공법의 제한도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의주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북괴와의 합작투자 및 금강산공동개발의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임을 부연한 점을 미뤄 볼 때, 이같은 발언은 8.15선언 이후 처음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북괴정책 방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70년대 초반의 전환기적 상황을 무난히 극복하면서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까지는 통일에 대비한 기초적 준비를 착실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문제는 통일이 언제 오건 이질적 체제의 통합에 있어서는 주도권 장악이 기본요건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일이다.

(3) 끝으로 우리 통일 논의의 단계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고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Brzezinski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 논의에 그의 「통일 4단계설」을 적용하고 있는데,⁴⁸⁾ 즉 초기의 제 1단계는 「상호충돌의 과정」이고, 제 2단계는 「충돌과 경쟁의 혼합된 단계」이고, 제3단계는 「제한된 협조가 추진될 단계」이고, 마지막의 제4단계가 곧 「통일로 접어드는 단계」라는 것이며, 오늘의 우리 상황은 제 2단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이론모형은 일단 가설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시사성을 주고 있다 할 것이며, 한편 A. Etzioni 교수는

48. 신동아, 70년 10월, p. 75.

그의 「정치통일론」(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에서 정치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분석되고 검토되어야 할 17개의 단계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있는데,⁴⁹⁾ 그는 그의 통일론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첫째 「통일이전의 상태」, 둘째 「통일과정=통합적 권력」, 셋째 「통일과정=통합요소」, 넷째 「통일완성의 상태」 등이며 그 각단계가 다시 세분되어 모두 17개의 가설적인 과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비록 타국의 경우를 상정하여 이론 모형을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차원에 따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논의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되고 시사되는 바가 많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사의 입장에서 A.F.K. Organski는 Rostow의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정치발전단계론」(The Stages of Political Development)에서⁵⁰⁾ 그 자취를 감추고 있는 왕조정치 및 식민지 정치의 초기통일의 정치단계와 아직도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정치단계로서 자국의 정치구조 속에서 식민지체제가 통일을 지속하고 있는 단계와 경제적인 미개 및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로 나누기도 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마지막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단계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A. Etzioni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 이전의 상태」에 관한 설명처럼 분석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통일 논의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경우도 통일 논의가 가능하게 된 현단계에서는 통일을 위한 이론모형의 형성과 그 모형이 요청되고 있다 할 것이며 통일을 위한 가설이나 이론모형으로서의 통일 논의는 한국의 경우는 그 이론구성의 거점이 되는 「통일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상정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통일 논의에 있어 단계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재통일이 적대관계→정치체제의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실 남북분단의 역사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안에 이질적인 정치·경제·문화질서의 기틀이 굳어져갔고, 그런 이질체제 하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관·인생관·사고방식·행동유형을 갖는 이질적인 인간형이 형성되고 있는만큼, 여하히 민족 일체감과 단일문화권을 조성해 가느냐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통일의 단계는 먼저 정신적·문화적 정지작업을 한 연후에 정치적·경제적 통합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만큼, 우리는 현시점에서 통일 이후의 이해득실에 관한 계산을 명백히 해야 하며 대결이 가능성이 많은 정치·경제·군사면보다 비교적 출발이 쉽고 달성의 가능성이 많은 문화적 통합에서 점진적으로 권력구조를 일원

49. Ibid. pp. 76~78 참조.

50. Ibid pp. 78 참조.

화하는 정치적 통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남북간의 긴장과 적개심을 완화하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는 조치와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8. 통일문제의 전망

한 마디로 우리의 통일전망은 국민의 의지와 우리의 주체적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비관적이다. 즉 한국의 통일은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는 통일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며,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원과 통일문제가 안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이기도 한 것이다.

우선 남북통일의 내적 조건문제만 보더라도 26년간의 Ideology적 대립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완전히 이질화된 체제를 구축, 단일민족이면서 이질화된 문화권 형성을 가져와 지식이나 가치관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8·15평화 통일구상」을 전면 거부한 북괴는 여전히 무력적화통일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편 외적 조건만 보더라도 국제정치적으로 미·소강대국의 현상유지정책, 중공의 호전성과 팽창주의, Nixon Doctrine으로 표명된 Asia의 비미국화정책, 강대해진 일본의 실리정책과 군국주의 대두 가능성 및 극동안보에 대한 소극성, 게다가 중공의 UN가입가능성과 분단국 동시 UN 가입론을 비롯한 분단현실 동결론 등이 대두하고 있는 현 70년대의 국제환경은 그 전시대나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우리 통일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우리 통일의 주관성과 객관성, 양면을 고려해보더라도 현실적으로 통일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할 것이며 더욱이 북괴가 무력·폭력에 의한 남한 적화공작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행동으로 실증치 않는 한 북괴를 상대로 한 여하한 평화통일론의 전개도 무의미한만큼, 사실상 우리의 통일론은 현단계에서는 「비원」의 연속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통일 논의가 구체적인 현실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공적인 성격의 것으로 진전될 위험도 또한 많다. 그러나 통일 논의는 상황적인 구속성과는 관계없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는 통일 논의의 누적이 새로운 민족사의 구성부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로서 닦쳐올 수 있는 것이지만 통일 논의는 취사선택되고 또 대안으로서 다루어 질 수 있다. 여기에 통일 논의는 mechanism의 작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기실 7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의 통일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 고조돼왔거니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 곧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의 접근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느 의미에선 오히려 통치 elite의 정치문화권에 속했던 통일문제가 정치적 조작기능에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국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작금에 이르러 활기치고 있는 통일문제에 있어 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적극통일공세를 취할 정부의 통일정책 천명과 함께 그 전망에 대한 관심도가 또한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통일문제의 전망에 대해 여기서는 몇몇학자들의 견해를 우선 살펴본다. 「러버트·패신」교수에 의하면,⁵¹⁾ 통일은 일격에 성취될 문제가 아니며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목적을 향한 점진적 대처로서만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서, 먼저 가장 단순한 접촉과 대화의 길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선은 재통일(Reunification)보다 오히려 재연합(Reassociation)의 과정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이같은 방법은 연맹(Confederation)에서 연방(Federation)으로의 길을 열게 될 것이고, 재통일(Reunification)이란 이러한 방법의 맨 마지막 과정이 될 것이며 이 과정은 다음 세대에도 도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Brzezinski 교수는 앞서 말한 「통일 4단계설」에서 한국의 통일은 제 4단계에서야 이루어질 것이라 보면서 한국은 「8.15선언」으로써 제 1단계인 직접대결의 시기를 지나서 제 2단계인 충돌과 경쟁의 혼합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독일은 이 제 2단계에서 9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제 3단계인 협상의 시기로 들어갔으나 한국은 이 제 2단계를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영호 교수는⁵²⁾ 통일은 요원한 것이며 우선 무엇보다 긴장완화가 중요하다면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적대관계」→「경쟁관계」→「접촉」→「협력」→「정치체제」의 통합이라는 5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파악, 「8·15선언」에 의한 경쟁관계로 들어가자는 제언이 나오기까지 25년이 걸렸고, 한 단계에 10년씩만 잡아도 앞으로 40년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독일통일에 관해서 Herman Kahn과 Anthony Wiener는 그들의 저서「서기 2000년」(The Year 2000: A Framework for Speculation on the next thirty three years)에서⁵³⁾ 앞으로 30여년이 지나도 독일의 분단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들은 동서관계에서

51. 동아일보, 70년 8월 27일자 참조.

52. Ibid. 8월 27일자 참조.

53. 정경연구, 68년 1월 p.187 참조.

비록 긴장은 완화될 수 있어도 진정한 「화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것을 미뤄 볼 때 역시 분단된 국가의 통일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세월에 걸쳐 미해결의 속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는 매우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절망적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가 잠시도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기 때문이다. 만일 상정적인 문제로서 북괴가 전략상 UN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 남북총선에 임할 때 통일의 가능성은 있으나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적화통일이라는 흥계가 숨어 있을 것이며, 또한 북괴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통일기본자세 및 체계의 전면적 붕괴를 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국에서의 평화적 통일의 달성가능성은 우선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의 포기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북괴에서의 김일성체제의 붕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자에 대한 가능성은 현단계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허지만 동구일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북괴내부에서의 변화는 북괴체제의 속성으로 보아 적어도 당분간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실상 김일성의 개인독재체제도 그 천수가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동구와같은 자유화의 바람이 북한에도 스며들 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 때가 오면,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에 의해 당연히 교체될 것이다. 더욱이 북괴는 Acton 경의 주장처럼 독재정권의 한계수명이 30(75년에 30년이 됨)이라는 정치학설에 따르면 70년대 후반에는 무리한 김일성우상화승배의 내부적 모순의 격화, Stalin 주의에 내재하는 취약성, 가혹한 숙청의 역사, 신 6개년계획의 차질등으로 인한 내부 붕괴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⁵⁴⁾ 특히 최근에 영국 Economist 지(2월 13일자)는 북괴 김일성은 그의 전체주의 정권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수정주의자들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⁵⁵⁾ 작년 12월 Poland의 노동자폭동은 북괴에 자극을 주어 그것이 제기시킨 이념적·실천적 문제는 북괴의 강경론자와 수정주의자들을 갈라놓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괴에도 언젠가 동구와 같은 내부변화가 도래할 때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지금까지 평행적으로만 출달음치던 우리 민족적 이익이 한 좌표점에서 교차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의 통일에의 접근로는 일층 순탄해질 것이다. Brzezinski 교수도 지난 2월 방한시에 한국통일의 가능성에 대해,⁵⁶⁾ 첫단계는 정

54. 국토통일원, Ibid p. 52.

55. 동아일보, 71년 4월 1일자 및 조선일보 71년 4월 2일자 참조.

56. 중앙일보, 71년 2월 23일자 참조.

치세대의 교체, 즉 김일성이 죽고 북괴에 새로운 정치세대가 들어서면 분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제 2단계인 「사회적 재결합」(Social Reassociation)을 촉진하고 이 「사회적 재결합」단계에서 새로운 정치현실이 국제관계 테두리안에서 발전, 마지막 통일의 단계에 들어선다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통합과 통일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의 기반적 사상을 민족주의에 두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에 자유화의 물결을 보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9. 결 론

그동안 분단조국은, 역사 본연의 논리가 외면당하고 미·소양국의 핵무기를 전략적 배경으로 한 「공포의 균형」위에 역설적인 평화공존을 빙자한 실리에 눌러 분단국가의 현상을 합리화하려는 「두 개의 한국론」이 고집되어온 전후 질서 속에 그 방침을 강요당해 왔다. 분단되던 초기만해도, 그러한 분단상태가 역사적으로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국토의 통일은 물론, 민족의 통일도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역사 법칙에서 우려하던 생각들이 오늘의 현실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민족은 분열, 대립의 농도를 더욱 짙게 할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통한의 벽은 더 두꺼워져 갈 역사적 시점에 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한국분단이 역사적 피동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주어질 국제 여건 속에서는 어떤 때보다 한국인 자신의 주체적 적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객관적 정세하에서는 한국통일의 실현이나 통한원칙을 고수하기에는 비판론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국통일에의 접근을 시도할 능동적인 주체적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민주주의 승리가 여지없다는 것을 보장할 민주역량의 확보와 민족주체성을 가다듬으면서 민족적 전통을 재창조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민족통일을 위한 민중의 힘을 집결하는 무거운 역사적·시대적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그리고 자주민이며 자유민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우리는 갖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통합과 통일의 이념적 기저로 깔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일시적이기보다 장기적이며 피상적이기보다 본질적인 정책을 수립, 민족적 자유의 확보로써 조성되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외 사태의 변화가 마련하는 순간적 기회도 놓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기민성과 결단성을 발휘해야 하며, 단순한 반공이 아닌 민족적

규범의 정치화를 기함으로써 군사적 대결로부터 정치적 경쟁으로 통일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정치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로 「대결」에서부터 「경쟁」으로 진입은 결국 정치적 의지에 의한 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치발전과 정치적 안정 없이 「선의의 경쟁」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작용가능성은 정치체제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정치체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민주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긴요한 과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정치체제 능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elite들의 목적과 행동 즉 「정치적 leadership」이라 함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바람직한 「정치적 leadership」을 확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사회적 양심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바탕을 둔 「정치적 leadership」이라야만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치체제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 모름지기 지도자들의 사명감과 양심에 투철한 「정치적 leadership」의 확립만이 국민을 단합,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한 민주평화통일의 기초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치적 접근은 어디까지나 국민총화의 기반위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통일정책을 실속있게 전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여기서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에게 「통일방안」이 미비가 아니라 「통일조건」의 미비임을 통감, 정치역량을 비롯한 제역량 확보를 기함으로써 이 조건형성에 일차적인 노력을 집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통일방안중 어느 경우를 상정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통일을 가기할 핵심은 결국 「국력」이라는 데 귀착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계적인 통일대책을 수립하여 최소한 70년대 초반엔 북괴의 무력도발과 간접침략에 대비하면서 통일의 기초적인 대비태세를 정비하고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부터는 통일 mood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본격적인 통일공세를 취해 북괴를 완전 압도하여 통일에의 initiative를 장악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질적 체제의 통합에 있어서는 주도권 장악이 기본요전임을 우리는 항상 명간해 있어야 한다.

(무릇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긴장된 하나의 역학이다. 역사의 도전력에 대해서 우리의 주체적 응진력이 강할 때 우리는 역사의 영광스런 승리자가 되지만, 우리의 주체적 응진력이 약할 때 우리는 역사의 수치스런 패배자가 되고 만다. 역시 역사의 주역은 인간이며, 역사는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는 창조성을 내포한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하는 함수관계만을 반영해야 될

필연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체적 자각과 긍지없이 새로운 역사창조는 불가능한 법이며, 진실한 민족적 자아의 발견과 주체의식 그리고 만들어지는 역사적 현실에 응진하는 창조적 초극력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새겨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하리어 우리는 저 Delphi 신전의 Gnothi Seauton으로 대변되는 Socrates적 민족자아의 모습을 예시하면서 Platon적 감격과 Aristoteles적 근면으로써 「조국통일」이란 새 역사창조에 줄기차게 접근해야만 한다.

<참 고 서 적>

1. 박동순, 통일문제연구, 대외문제연구소, 1961
2. 통일문제연구(제 1집), 외무부 외교연구원, 1966
3. 통일백서, 국회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보고서, 1967
4. 통일논총(1·2), 국토통일원, 1970.
5. 국토통일, 국토통일원, 1970, 8~11월
6. 최석, 통일문제의 모색, 신문화사, 1969
7. 북한총감, 1945~68년,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8. 양호민, 북한의「이데올로기」와 정치, 아시아문제연구소, 1967
9. 안보논총, 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국, 1969
10. 안보문제(Series 1, 2권), 국방대학원, 1969
11. 한국의외교 20년, 외무부 외교연구원, 1967
12. 박관숙, 세계외교사, 박영사, 1970
13. 조재관, 국제정치학, 법문사, 1970
14. 최종기, 국제관계론, 박영사, 1970
15. 국제문제, 국동문제연구소, 70년 9월~71년 3월
16. 국제연합과 한국문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9
17. 국제정세, 외무부 정보문화국, 70년 1월~71년 2월
18. 한병기, 한국독립과 국제권력정치, 교육원, 1968
19. 이병두, 70년대와 한국의 안전보장, 신아라, 1970
20.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69
2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63
22.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A New Strategy for Peace, Richard M. Nixon, February 18, 1970
23. 미국의외교정책 20년, Richard H. Rovere, 김지운 역, 세태 68년 5월
24. A.F.K. Organski, World Politics, 민병기 역, 울유문화사, 1965
25. 정상익태랑, 오늘의 한국, 동경, 1967
26. 중앙공론, 일본, 70년 7월
27. Memoirs by Harry S. Truman, 손세일 역, 어문자, 1968
28. 국동문화, 한일문제연구소, 동계호, 1970, 12월
29. 사회과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0
30. 현대한국의 위치와 과제, 남재희편저, 현대사상사, 1970
31. 이한빈, 사회변동과 행정, 박영사, 1968
32. 이한빈, 국가발전의 이론과 전략, 박영사, 1969
33. Saum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1968

34. 독매연감·방위연감 각 1970년과 조일신문 69.11.30
35. 동아연감·중앙연감·동화연감 각 1971
36. 이종린, 후진국정치론, 일조자, 1968
37. 신생국 정치발전의 제문제, 국회입법조사국, 1968
38. 차기벽, 근대화정치론, 박영사, 1969
39. 김영준, 신생국정치론, 일조자, 1965
40. 최문환, 민족주의 전개과정, 박영사, 1962
41. 조지훈·홍이섭 편저, 20세기의 한국, 박우사, 1966
42. Foreign Affairs(70년 4월 10월), Ecounter(70년 4월), U.S. News and World Report (70년 2.2과 7. 20)
42. Fides, 서울법대, 1970
43. 한국근대화의 제문제, 경희대 후진사회문제연구소, 1965
44. 신동아(70년 3월·10월·4월), 정경연구(69년 5월·8월, 70년 10월, 69년 9월, 68년 1월, 70년 12월), 중앙(70년 1월, 70년 10월)
45. 동아일보(70년 11월 6일·2월 27일·01월 22일·10월 23일·8월 27일 및 31년 4월 15일·3월 5일·3월 3일·4월 27일·2월 27일·4월 26일·2월 28일·4월 1일), 조선일보사(71년 2월 28일·1월 9일·4월 2일), 중앙일보(71년 2월 23일·2월 27일 및 70년 8월 25일), 대한일보(71년 3월 31일·4월 15), 대학신문(70년 6월 22일·11월 16일)
46. 백상진, 정치학, 박영사, 1969
47. 박동서편, 발전론서설, 박영사, 1968

1950
2-10

통일적응계획 국토통일에 대비한 지도세력의 육성방안

나 석 권

목	차
1. 제 론	5. 지도세력육성의 방향
2. 통일정책의 일반배경	6. 지도세력의 결정요인
3. 정세의 변천과 상황분석	7. 대안의 구상
4. 지도세력의 역할	8. 결 론

1. 제 언

1. 연구의 목적

The training of leaders in communities comes as a by-product of cooperative activities for the general good.

—William W. Biddle—

「통일에의 대비」는, 정책목표의 긍정적인 표현이다. 통일접근의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이 이 논문에서, 「지도세력육성」을 위한 전략적 구상의 전제가 되고 있다.

학문의 체계적 특성 보다는 정책기술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국토통일에 관한 작품의 성격상, 통일정책의 일반배경(Universal background)을 정시하여, 우선, 정확한 상황판단의 기초를 설정해야 한다.

정책원인의 발생은, 정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뉴앙스가 있으나 주로,

- ① 긴급사태
- ② 액션의 필요가 인정되지만 단계과정이 요구되는 문제
- ③ 내적요인의 개발
- ④ 외적영향 등이 기본요소가 되고 있는 바 통일문제는 ②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지도세력을 발전지향의 사회변동 유도인자로 규정

하여, 발전도상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변동(Social change)의 역할에 대한 정책가치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엘리트체계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창의적인 지도세력의 구조적 형성을 시도하는데 연구사항의 「프라어리티」를 두고 싶다.

승공통일은 이념적 전제의 정치적 함축이다. 목표정립과 접근방안의 방법은 평가 과정에서 안보문제의 전략변수를 탐색하고 나아가 지도능력의 유출문제와 동원체제를 고려하여 지도역량의 수급추정(需給推定)을 기도해 보자.

정부의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채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공헌해 오면서, 국민들이, 일찌기 간직했던 많은 의사의 단면이나마 대신해 주는 조그만 계기라도 되었으면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지도세력의 구조적 성층(成層)은, 정치, 경제, 군사, 교육분야가 대표적이거나 그 밖에도 문화, 사회, 과학, 사상등의 지도영역이 있다. 그러나 성층이 가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새로운 계층의 형성에 필요한 부문만을 집중적으로 취급했다. 한편 지도층의 관념에 대한 「이미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층형성의 결정요인을 구별하고 엘리트 이론의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결정요인과 밀접한 제도의 형식중에서 정당관계를 논급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도적 절차로서의 선거기능을 조사해 보자.

정책질이나 잠재적 지도층의 충원문제를 전통적 폐쇄성에 대한 일련의 반성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범위의 팽창이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목표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통일접근의 정책가치와 통일성취단계의 사회, 정치적 정책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정치구조와 사회적 배경으로 부터 투입되는, 여러가지 작용에 관련된 변수로 그 요인의 유형을 한정시켰다.

3. 연구의 방법

통일접근의 연구에 필요한 문헌은 많다. 그러나 통일정책자체가 상당히 원형 고수의 보수적 입장에 집착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준전쟁상태하의 정치적 특수성 때

문에 참고자료의 기술적 권능의 빈약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국민들을 연합시킬 조직체의 기능이 저능하여 개인은 고립된 생활에 빠지게 되는 현상에 편승하여 통일된 방법론의 발견이나 대안의 권위 있는 실례가 극히 부정적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료선정은, 국내문헌과 외국서적에 의존하였으나, 몇차례의 유명인사 초청강연을 참조하였고, 특히 행정대학원의 교수 몇분이 가진 전문적인 관견(管見)의 내용이 많은 시사를 주었다. 자료수집, 상태의 분석, 자료 보충 문제와 사실과의 관계규명, 아이디어, 대안의 구상, 검토, 대안의 선택, 결정후의 부차문제(follow up) 가능한 중요 결과 예상과 리스트등의 순서로 내용을 조정하였다.

전문가와의 진지한 토론은, 주관에 편향하는 약점도 있으나, 합리적, 논리의 효과와 정책의 기반을 보완하는 판단의 권위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대안의 구상에 있어서는 장단점의 비교에서 오는 순수이론의 입장을 택하고 정책효과의 분석은 논문의 목적상 이를 제외했다.

2. 통일정책의 일반 배경

오랜 정체와 빈곤의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의욕과 결의아래 한국은 이제 민족중흥의 길에 올랐다. 번영과 풍요를 다짐하는 근대화 작업은 계속되고, 「새로운 한국」의 건설을 목표로 자손들의 명예로운 부강의 기지위에 자랑스러운 민족사의 좌표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분열」과 「적대관계」의 비극은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부조직의 기능에 우선 호소하여 통일정책을 수립해왔다. 여기서 그 일반적인 배경을 검토해 보자.

1. 파업의 기초

북한땅은 남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민족의 혈맥과 유산이 묻혀 있다. 창조적 협동체로서의 동포에 대한 애정이 잠들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제보와 개체영역의 유기적 단위기능이 또한 겨레의 생활권과 나라의 완전성이 거기에 연금되어 있다.

『이념, 실로, 경계조차 없는 정치철학의 마술에 홀려, 인간은 중무장한 guard로 전략해 버렸고,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을 종주로 한 유물사관의 노예신분

에서 바야흐로, 「이데올로기」의 소비물자가 되기 위해 전쟁부속품과 같이 조련되고 있는 것이 북한동포의 실상이다』

통일은, 말하자면 북한해방의 명제이며 그 정책은 「상실된 인간」 위에 자유와 권능을 소생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론에 불과하다.

국가발전의 가속과 국력의 배양문제가 통일정책에 직결된다는 것은 결코 논리의 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발전을 「영광에의 접근」이라 한다면 전쟁준비는 「비극에의 투지」라 하겠다. 통일목표의 접근과정에서, 전쟁의 위협은 우리에게 수 많은 부산물을 가져다 줄 것이며, 거기에는 방대한 규모의 시련이 포함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용기있는 민족에게 반드시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2. 렌돌프의 전선

「소련과 태평양과의 경계선 바른쪽 끝에서 부터, 쿠릴열도, 한반도, 일본, 오키나와, 대만, 홍콩,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및 타일랜드를 거쳐 버마에 이르는 호상곡선(弧狀曲線)이 바로 확대된 38°선이다」라고 렌돌프는 이렇게 규정했다.

공산권정책에는 자유세계에서는 결여되기 쉬운 일종의 통일성이 있다. 「한국정책」, 「월남정책」 「베르린정책」 또는 「체코정책」은 자유세계에 대한 단일전선, 부분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실리를 좇아 임기에 응해 자유자재로 필요부분을 가열 또는 냉각시킬 수 있다.

「베르린」은 관문점의 근교에 지나지 않으며 「출론」, 「프라그」 교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유세계는 명심해야 한다. 바다에 면한 소련 지역 및 인도 동쪽의 중공과 자유권을 경계짓고 있는 동아시아는, 이 장대한 호상의 전선에서, 지역적 특수조건과 복잡한 지역문제를 내포한 넓은 단위지역에 해당된다.

전략상 위기와 참극을 초래하기 쉬운 곳은 경계선상의 취약요소이다. 이곳에서 조건과 공격의 유혹 또는 위협을 느끼는 것은 쌍방의 입장이다.

그리스, 터키, 이란, 한국, 금문도 및 월남에서의 경우와 같이, 격전을 벌여 대공경계(對共境界)를 안정시켜오기도 했으나, 자유세계는 가끔 국부공세를 무반응으로 감수 했으며, 적군은 헝가리와 체코에서, 또는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했을 때 북한에서 보인 반응과 같이, 야만적이고 또 가공한 폭력으로 대처해 왔다.

긴장과 위협이 지속되고 따라서 가장 불안한 전략목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동남아이다. 저들이 월남에서 시도했던 전략효과를 상실하고 대공경계선이 장벽같

이 경화된다 해도, 라오스, 타일랜드 및 버마를 통과하는 긴 경제선은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 전역에 걸쳐 실질적이고 유형적이며, 확고한 경제선이 구축될 때까지는 공산진영의 폭력과 침략의 위협이 계속,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렌돌프」가 말하는 「호상의 전선지대」에서 한국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은 요소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정책의 배경을 과연 안전권의 테두리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3. 2차원의 구조

신경과민이나 피해망상에 가까운, 위기의식의 맹목적인 표현에 진지(眞摯)를 느끼고 나아가, 국가의 정책목표를 설명하는 통일이론의 대부분이 「열세노출」(劣勢露出)과 「위기변증」에 집착한 나머지, 국력의 요소인 국민의 사기를 극도로 저해하고, 사태비판의 병질적(病疾的) 풍조를 조성하는 이상기류가 우리의 주변을 감돌고 있다는 데, 일말의 비애를 금할 길이 없다.

「렌돌프」의 전선이론에서 도출되는 안전도의 가설은, 이와같은 위기변증의 무드를 배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조건과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정세의 변천을 주목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a. 장기위기의 가능성

일반적(Universal)인 측면에서는, 자유, 공산진영의 대립을 전제로 한국의 준전시상태와 경제의 존속을 단축시킬 만한 특수한 요인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분단상태의 장기화」는 「전쟁」에 다음가는 민족의 비극이며, 이 두개의 이종개념(異種概念)을 동시에 회피해야 한다는데 정책의 지속성이 있다.

b. 전략기지론

한반도는 양대세력의 결전장 또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6. 25의 경험여하를 불구하고, 자유세계는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월남 기타지역에 대한 관심의 유리(遊離)를 의미하게 된다.

공산전략가들이 이와같은 사태의 조작효과를 필요로 할 때는 예컨대 월남등의 공산화에 방해되는 자유진영의 노력을 실제로 혹은 정신적으로 약화시킬 필요를 욕망할 때 전쟁도발의 시도가 가능하다.

정치적 수준에서 볼 때, 한국에서의 철저한 한국화를 월남에 이식하게 되는 것은 공산진영의 전략적인 패배를 뜻한다. 막강한 신생독립국으로서, 한국은 우수하고 강력한 군부대를 파견했으나 철수의 필연성이 증대되는 추세로 봐서, 지금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효과가 월남의 전세변화를 유도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전반적인 긴장상태의 완화를 가져왔으며, 사실, 이 지역의 전략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계산되고 있다.

c. 이질적인 변수

북평과 모스크바는 계속 「대립」과 「억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피와는 공히 상호방위목적의 지원조약을 체결했다. 중공이나 소련의 고위전략가들은 실상, 한국의 「내쇼날리즘」에 대해 거의 관심이 희박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북한해방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피의 적화통일정책은 강렬한 「내쇼날리즘」에 입각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김일성 자신의 의지여하(意志如何)이며, 이는 공산진영의 전략과는 이질적이고, 거의 독립된 전쟁의 변수가 되고 있다. 남북의 직접대치와 그 지원세력의 간접대치 이것이 바로 한국통일문제의 배경이 가진 2차원의 구조이다.

군사적 승리의 가능성, 사태전말에 대한 손익평가, 원조, 지지, 외세개입의 가능성 등 전쟁결정의 척도에 대한 평가가 적대세력의 직접관계에 비해 특강국(特強國)의 대위(對位)에 있어서는 비교적으로 확고하다.

영토에 대한 야심의 감소, 민족주의의 상승, 군사과학의 급진, 군사력 사용, 경비의 급등, 인간의 가치관 변화, 침략목적의 정당성 상실, 핵무기의 역할 경쟁 범위의 확대문제 등, 일반사정의 전략적 의의가 남북한의 경우에는 특강국의 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될 수 있다.

환언하면 정치경쟁의 군사경쟁에 대한 능가가 지원세력의 입장이며 그 역현상이 한반도의 정세이다.

1969년 봄 미국은 중공에 대해 무역과 문화접촉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최초의 스탠을 디뎠다. 관계개선을 위한 욕구를 강조하면서, 자유중국과의 조약이나 우호관계를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그 유사 「케이스」에 속한다.

3. 정세의 변천과 상황분석

이와같이 직접관계와 간접관계라는 2차원의 구조를 가진 것이 통일문제의 배경이므로 우리는 영토내에서의 우월한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함께 정세의 변천에

현명하게 적응하고 또 적극적인 변천과정에서의 참여를 목적으로, 정확한 상황판단에 의거하여 정책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여기에 정세변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특강국의 시대(era of super power)에 살고 있다.

1. 정세개관

국제정세는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양극화에서 다극화의 세계로, 다극화의 형태는 다시, 지역국가간의 블록(Subregional bloc)에 의한 세력권의 형성단계로...

그것은 세계사의 단면으로 볼때, 언제나 새로운 전기의 성립을 촉구해 왔다. 동서해빙의 무드는 비록 성숙의 길을 걷고 있으나, 거기에는 실로 잡다한 위협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a. 세력균형

냉전의 형식은 세력균형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핵의 확대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위협의 증대를 제지할 길이 없으므로 세력균형은, 곧 공포의 균형이론과 배경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의 국면이, 핵의 동질화로 인한 균형원리의 물리적인 변질의 초태라는 전반적인 현상에 한층 더 가세하여 균형의 파괴 또는 새로운 균형상태의 형성을 자극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력을 시위하고 있다.

월남전의 추이, 닉슨·독트린, 중공세력의 팽창과 일본의 잠재력 비대등 일련의 정세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안보문제 경제개발과 통일정책의 기반은, 따라서 근본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긴급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정책의 전략적 조정이나 강화에 의한 국가목적의 실현에 정확한 상황판단이 전제됨을 의미한다. 공산진영과의 교역을 결정할 것도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세의 발전에 대한 적응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공의 공식 태도는 대미도전과 대소「이니시아티브」쟁탈정책의 표현으로 계속되어 왔다. 월남에서 강력한 반공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국내반전세력의 압력을 덜어주는, 명예로운 전쟁체결의 방법을 택한 「닉슨·독트린」은 실로 한반도상의 그 연장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반도에 전쟁이 재발했을 때는 예외라는 보장이 없다. 주한 미군의 철수도 사실 적진이 범할 수 있는 오산의 원인이 될수 있다. 한·미·일 삼각관계에 기능전환을 위한 미국의 거래정책이 투사되어 한국의 안전이 「일

본의 안전을 위해」긴요함으로 유사시 일본의 대한 파병을 가능하게 조정해 놓았다. 대미일변의교의 수정론은 이미 일반화된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대상국가의 선정과 외교관계의 수립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인 균형의 상실등 많은 문제가 개재되어, 실상 대안의 발끝이 곤란하다.

이와같은 세력의 분열 또는 공백상태에 편승하여 분단 25년간 남북대치의 경쟁적인 고압화를 조장해 온 북괴의 침략정책이 또한 자유민의 새로운 판단과 행동의 감행을 요청하고 있다.

b. 미국의 후퇴

자유세계의 주도적인 지원세력이며 사실상 적세의 침공을 결정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력판도상, 한국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은 여하튼 후퇴하고 있다. 미국의 후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70년 10월 월남전 종결유예위(終決留豫委)가 주도한 전국 규모의 반전시위와, 동11월 월남전 종결동원위가 주도한 워싱턴 반전시위 및 71년 4월 24일의 30만 종전시위는 그 규모나 조직력 및 반응형성에 있어 대표적인 월남전 종결시위였다.

흑인반란, 자유주의에의 신조류 그리고 「스튜덴트·파워」는 여론사회에서 발전한 소수의견의 적극적인 다수세력화의 역사적인 실례이며, 그것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 행위의 배경을 이루었다.

미국의 과도국력 분산현상을 가장 비판적인 입장에서 주시하고, 그 결과, 월남개입이나 「영·제너레이션」의 동기전개가 금일의 사회상황으로 변천된 또 다른 정신적 변수가 되었던 것은 소위 해양세력론을 내세운 「리프먼」을 비롯하여 현실과 실리주의를 고수하는 「모겐도」 직업외교관 출신인 보수주의자 「케난」, 그리고 강력한 대외정책의 정예 「폴브라이트」와 「맨스필드」 또 아시아통인 「라이샤워」 등의 잘 알려진 석학들이다.

정책형성 과정, 여론 일반학문분야에서 이들은 유력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절제한 대외개입에 냉철한 비판으로 제동을 가해왔다.

그들의 공통한 비판기준은 국가이익의 궁극적인 수호와 위기로 부터의 회피를 의미하는 안전의 구축에 있다.

그들은 소련의 위협, 중공의 적대, 그리고 서독, 불란서, 일본등 준강대국의 안보협력문제에 민감하다.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자세는 타국이 가진 정치이념이나 정부형태가 아니라, 그 나라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폴브라이트」

제1책 - 73 - 제2책 要 它 侵 辱

의 말이 그들의 태도를 잘 표명해 주고 있다.

미국은 종래의 강열했던 대외개입의 조류로부터, 시대적 추세에 따른 반작용에 가까운 모국지향의 조류를 안고 있으며 이것은 변동하는 현실과 힘의 관계, 여러 나라의 활발한 동향으로 인해 초래되는 방침의 유연한 움직임을 말한다.

대아시아 정책상 야기되는 미국의 태도변경은, 이러한 광범하고 격심한 시대의 변천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변화와 관련된 한개의 국면에 불과하다.

역사를 역급하여, 2차대전 후 「스타린」은 「루스벨트」와 일본으로부터 압수한 무기를 「장개석」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중공에 지원내란을 재발시키고 「모택동」에게 무기를 이양해 버렸다. 국부측에 대해 미국은 원조마저 중단해 버렸다.

이러한 미국의 후퇴는 「장개석」을 대만으로 피란케 하여, 오늘의 국부측의 운명을 결정했다.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택동」 군대를 「장개석」은 저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맥아더」 원수의 중국본토 공습 주장을 좌절시키고 현실무사를 기도한 미국의 후퇴가 38선이라는 비한의 분계선을 결정해 놓은 것이다.

c. 일본의 재무장

「스태폰·영」 미 상원의원은 국수주의자 미시마 유끼오(三島由紀夫)의 죽음은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논평했다. 지난 20년동안 말 없이 성장해 온 일본군사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미국의 여론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경찰 예비대로 7만 5천명의 대원을 가지고, 1950년 7월에 발족한 뒤, 1952년 자위대로 개칭하고, 반전여론에 의해 서자 취급을 받으며 묵묵히 발전해 오다가 70년 11월 1일 정년 20주년을 전후하여 전후 최초의 방위백서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정식 인준을 받았다.

그와 동시에 일본은,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72—76)을 공포하여, 76년에는 아시아에서 중공 다음가는 강군의 자리를 가늠하게 되었다. 자유세계에서 미국을 뒤쫓아 국민총생산고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숙성한 일본은, 사포(佐藤) 수상은 군사대국은 되지 않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군사대국으로 대두하기 위한 잠재력을 비축하게 되었다.

제4차 방위계획의 총경비는 약 5조 8천억원(약 161억달러)로서 제3차 계획의 2.4 배가 된다. 이 국방비 규모는 미·소·불·영·서독·중공·다음의 세계 제7위를 차지하며, 영·불·중의 국방비 중 핵병기 비용을 제외하면 통상병기 개발과

장비부문에서 일본이 실제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제간지 「public opinion」은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일본인들의 태도는 점차 분명해 지고 있다. 그것은

(1) 중공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핵위협에 의거하여

(2) 미군의, 또는 아시아의 Supply Base가 되는 위치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시되고 있다.

또 핵무기의 생산가능성에 대하여

(1) 일본은 이미 최선진국이며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2) 무장금지조항인 헌법 제9조는 일본이 핵무기생산을 준비하는 단계가 오면 수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핵무장은 합헌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3) 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에 의해 자극을 받았던,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전쟁경험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구세대와 교체되어 일본사회의 다중(多衆)이 될 것이다. 고 지적하여 극히 긍정적으로 해명했다.

「야수마사 다니까」는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핵무기생산의 동기를 이렇게 발표했다.

(1) 외부로부터의 핵위협, 특히 중공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처한 일본의 자위,

(2) 중공과의 세력균형의 필요성

(3) 일본이 미국의 Military umbrella로 부터 나와 스스로 방위해야 할 필요성

(4) 자위대의 강화에 유용

(5) 핵무기제조에 대한 정신적인 저항의 정복

(6) 불원간 세계적으로 “The peace-through-nuclear-arms” doctrine이 불가피한 점

여하튼, 일본의 재무장증조는 차츰 증대되고 있다. 일본은 첫째 지원세력, 둘째 거래관계자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 위협세력으로서의 존재가 된다.

2. 상황추정

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의 상실, 균형회복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요청한다는데 안위를 느끼고 싶지 않다. 분쟁의 발생은 언제나 균형의 파괴에 그 원인을 두지 않았으며, 이해당사국이나 집단세력의 군사력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의의와 특수상황에도 비중을 두었다.

陳 外

所 衛 衛

式 自 衛 隊 完 全 端 評 價 傳 億

미국의 후퇴가 즉각적인 적세침공의 계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의 대중공 균형확보가 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무릇, 세력균형은 현황을 만족하거나 중요시하는 국가가 국제정치를 개념유형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관념조작이며 그 정치적 기능은 중요하나, 타당성은 격감되었다.

「월터 리프먼」은 이런 말을 했다.

『한때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내부문제를 군사력으로 정복할 수 있으며 월남 정책에서는 핵심적인 과오는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납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 대륙과 현재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서부세계와의 사이에서 자연이 말하는 진짜전방이 어딘가를 알아야 한다. 진짜전방(The True frontier)은 태평양의 푸른 바다이며, 미국의 군사 기지는 Asia의 mainland가 아니라 태평양의 모체인 해양도서지역이다』

특수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도 변천이 필요하다.

중공의 유엔 가입 가능성 증대, 또는 미국의 대중공 교류정책은 하나의 현실의 성숙이며 일련의 국제정세의 추세를 과도평가할 필요가 없다. 정세의 변천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가 배양하고 있는 국력을 바탕으로 이에 지혜롭게 적응하며 자국의 실리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자신있고 여유있는 대응의 기반과 저력은 발전과 승리의 예약이며, 주체적 자세앞에 변화란 항상 개혁의 기회가 될 뿐이다.

대체로 70년대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 a. 동남아에서 미국은 단계적으로 월남, 태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며 또 필리핀에서도 철군할 것이다.
- b. 오키나와 반환과 한국으로부터의 철군으로 동북아의 전략초소가 달라지고
- c. 서태평양 「미크로 네시아」 제도를 변경으로 하는 새 방위선을 정립할 것이다.
- d. 미군철수가 남기게 될 힘의 공백지대에 소, 중, 일의 경쟁세력이 접근할 것이다. 이미 인도양 싱가포르가 소련의 전초로 되고 있다.
- e. 일본의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변모되면서 아시아 세력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3. 패배와 승리의 경계

전면전쟁이나 정규전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낙관론의 근거를 고려해 보자.

지금까지 주로 외부정세의 변천과 그 방향을 검토해 왔으므로 우리는, 주관적인 정세 또는 직접관계의 측면에 접하여 사태의 변화를 관측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평화공존 외교는 전면 교전의 회피를 기초명분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결전의 양극충돌의 분화구가 되고 있다. 승리와 패배와 전쟁의 개념이 변질된 열핵비축(熱核備蓄)의 상태에서, 북괴의 남침공약을 동의나, 묵인할 리 없다. 중공은 대륙적 선전풍의 과장이나 확대기질과는 달리 집행내용이나 행동반경이 협소하며, 아직은 대미전쟁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괴의 자체도발의 형태는 비정규전과 간접침략에 국한된다.

물론 권위가 인정되는 관측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소분쟁의 측면효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공의 대월, 대캄보디아 적극개입을 최근 「모스크바」 방송은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공의 주도권 쟁탈야욕이며, 혁명수출 과정에서의 「이니시어티브」 독점을 획책하는 북평정권의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자체세력의 확보와 「이니시어티브」 문제는 한반도에 있어서도 경쟁목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원조 조약의 북괴 남용을 방지할 수 없는 기술적, 정책적 사정의 연쇄를 증시할 때, 확률의 타진에는 반드시, 낙관론의 비중이 더 우세한 것은 아니다.

1950년 동기위기로부터 북괴를 구해준 뒤, 중공은 소위 「피로 맺어진 유대」와 「형제국가」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1960년 한국의 정국이 격동하고 있을 때, 120만의 적위대를 편성한 다음 61년 5.16 혁명으로 군사정권이 수립되자, 북괴는 7월, 소련 및 중공과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67년 중공과 경제기술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조인했으며 소련은 대북괴 방위력강화협정을 체결했다.

표면상 방위명분을 내세운 지원조약은 「방어」와 「공격」 양면에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 것이며, 결국 북괴 김일성으로 하여금, 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회의에서, 전쟁준비를 공식적으로 선언케 하였다.

a. 침략세력의 계보

이른바 천리마운동, 군수산업육성, 수뇌의 신격화, 저항세력의 숙청, 계획초과의 선전을 반복하고 독재무대의 구축과 강화에 전념해 온 북괴는 '48, '50, '53, '56, '58의 다섯차례에 걸친 숙청으로 당, 정권내부의 반대 그룹을 제거하고 세칭 갑산파를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확립 비호해 왔다. 만주나 북한외의 취지에서 매일유격대 활동을 한 맹목적 호전적, 교조적 체질의 일파가 이 갑산파이며, 이들은 실제

중등교육정도의 지도세력권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사회주의 조국 소련을 당초 추모하고 대소 의존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사태의 변동에 따라, 가끔, 구호가 변경되었다. 1953년 「스타린」이 사망하고 중소분쟁이 시작되자 비 스탈린정책의 영향으로 김일성의 정치적 지위가 동요했다. 56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안파와 소련파의 공세를 겨우 격퇴한 뒤 55년부터 제창해 온 「민족자주노선」의 구호를 더욱 강조했다.

이 민족자주노선의 사상적 주류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 레닌의 교의는 세계혁명을 호소하고 지금까지 이 교의에 따라 공산진영은 소지배체제의 일부 이탈양상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와의 교역을 통한 공산주의적 모델의 수출에 부심하고 있다.

「루마니아」와 「체코」 「헝가리」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 테러행사를 자행했으며 「알바니아」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개선정책이 주목을 끈다. 계획경제의 유행현상을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매력의 확인으로 보고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외교군사적인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

북괴의 외교정책은 1961년 이후 대중공교섭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불력 또는 비동맹제국에 대한 광범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타 제국에 대하여는 「반제국주의운동」 여하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일 태도는 강경하다. 자민당하의 일본을 「미제국주의」의 종속국가로서 중공과 북한에 대항하는 동북아시아 조약기구의 중심세력으로 단정해왔다. 그들이 내걸고 있는 「제국주의세력」의 고립화라는 「슬로간」은 정치적으로 고립된 자체위치의 모면과 대내적인 여론의 집착을 조장하고 사기양양의 조작효과를 노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고양식의 결과, 선악이나 가치판단이 승리와 패배의 양극으로 귀납되고, 아시아로부터의 미국의 후퇴를 「제국주의의 패배」 「반제운동의 승리, 인민전쟁의 이론의 정당성 입증」이라고 규정 선전하고 있다. 미국의 후퇴, SEATO의 저능화 영군철수에 의한 힘의 공간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근간 북괴는 대학 「레벨」의 교육과정에 약 20%의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버마」 태국 및 「필리핀」등에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취하고 있다. 종전의 「평화통일」 구호는 전쟁준비의 노골화로 「베일」이 벗겨졌으며 '68년도에는 총예산 약 20억 3천 7백만 달러 규모의 31%에 해당하는 6억 3천만 달러를 군사비에 충당했다. 당년 한국의 국가예산 3억 3천만 달러의 근 2배나 된다.

이미 61년도에 소재 NIG 21형 「코마트」 「유도어뢰정」등 최신무기를 도입했다.

저들의 4대군사계획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전인민 무장화로 정규45만 이외에 남녀노소를 총망라하여 130만의 노동적위대가 편성되었고 전국토요새화에 따라 산업시설의 소재 및 전략방공기지 구축, 그리고 군의 간부화 및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거 공군력과 고성능 전자장비의 강화에 특히 역주해 왔다.

북괴의 전쟁준비가 반드시 전쟁형태의 결과로 귀착되는가의 여부결정은 별문제다. 방법과 과정의 이행이 전쟁을 목표로 실천되고 있는 한 맹목적인 낙관은 병폐라고 단정해야 한다. 정책방향과 여건의 성숙에 관해 경각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군사력의 위협도」와 「군사산업의 발전성향」을 혼동하거나 군사력의 범주에서 지원능력과 지구성을 도외시한, 나머지 극히 감상적인 「우세부정」의 무드 혹은 「열세자인」의 위축감에 빠져서는 안된다.

로저스(William p. Rogers)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경제발전이야 말로, 아시아에 있어서의 「막중한 성공의 실화」라고 전제하고 GNP의 실제 연간성장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예의 하나이며, 1966—69년까지 12%를 상회했고 1970에는 근 10%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미국의 축대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평화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b. 기상관측

북괴의 공산주의적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 소련의 평화공존은 원조와 무역의 우회적인 통로로 자유진영의 취약지대에 침투하고 있다. 자유 아시아지역에 있어 공산 「게릴라」 활동을 정치적 질환으로 알고 있는 「말레시아」가 고무수출을 소련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련은, 「필리핀」 등의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대공산권교류를 통한 이익목표의 통로를 개발하고 있는 바, 자유제국의 유대와 단결이라는 전통적 「슬로간」은 점차 퇴색되어 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중공의 대소경쟁은 외교나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관측의 근거가 평가기준의 차이에 따라 타당성이나 의의를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많은 교포가 살고 있는 일본땅에도 우리가 개척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현안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70년대에는 희박하다는 소극적 예상은, 사실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그리고 비정규전의 범위내에서 북괴의 도발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긴장과 대립상태의 지속이 예외적, 우발적인 원인발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전쟁 히스테리」의 병질적 동기가 내부분열 예방이나 국민 사기진작의 한계를 이탈하게 되면 사태는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북괴의 비정규공격에 의한 무수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제한 양보한다는 것은 특히 「프에블로」사건, 해군방송선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큰 착각의 결과이며, 중대한 결과의 착각이다. 적어도 상징적인 문제에는 대안의 실행이 필요하다. 국력의 요소는 인력, 자원, 생산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능력과 국민성 또 국민의 사기 같은 형식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기와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이런 누차의 후퇴가 파괴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공의 교류는 닉슨·독트린의 장기양립(長期懷妊)의 부산물이며 소련의 대미접근의 촉매제가 될 것이나, 무엇보다도 교류의 범위와 수량의 확대는 불원한 장래에 미국의 북괴영지에 대한 교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도계층은, 실제, 서구교육을 그 중대한 결정요인으로 하고 있다. 교류의 확대는 곧 지도자력의 유출문제와 더불어, 국가안보상 새로운 정책기반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북괴는 한국이 「발전의 정상진로」 또는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에 위구를 느끼고 있다. 1970년대는 여하튼, 정치적 행동반경의 경쟁확대가 예상되나 현재의 북괴가 가진 적화통일 정책은 70년대가 경과하면 그 실행의 기회를 일실하고, 따라서 망상의 확인에서 오는 정치적 허탈상태에 돌입할 것이다. 부분 이유의 하나는 완전히 한 세대를 점철했던 김일성체제에 불가피 변천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65—66을 준비기간, 67—정찰기간, 68—69 행동기간에 이어 70년대를 적화통일의 기간으로 예상했으나 북괴의 선전은 아직 「허구의 도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만큼 70년대의 격렬한 변천은 관측되며, 70년대가 한국의 장래와 국민의 번영 및 안전을 위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긴장과 희망, 위협과 「찬스」가 교차하는 패배와 승리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택해야 한다.

4. 지도세력의 역할

Schlesinger는 말했다.

「영웅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사회는 역사의 추세에 무종종하기 쉽다」

발전하는 사회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극히 유동적인 정세의 변천이, 나라의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가치를 들고, 「새로운 한국」의 건설을 위한 기본공정(基本工程)을 시작했다. 신생 독립의 과정에서 몇차례의 심각한 사회적 격동을 겪었고, 그동안 방황하는 시련의 대열속에서, 일단의 지도세력이 정치적 시행에 참여했다. 이제 국가의 기틀이 잡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발전지향의 조류를 타고 전환하는 민족사의 급커브를 돌고 있다.

1. 지도세력의 일반관념

「지도자」는 보통, 정치 행정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 사상적인 지도나 경제, 문화적인 지도를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는 타당하다.

지도자의 지도능력은 국가기능과 사회체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 또는 동원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해석의 실례는 다기하고, 근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에 속한다.

그 관념의 구조는

- a. 지도능력 특성
- b. 지도목표
- c. 지도상황

을 요소로 하고 있으며 잡다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 a. 일반에게 목표에 접근하도록 하는 영향력
- b. 지도능력 또는 자질
- c. 상황에 적응시키는 기능
- d.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인간관계
- e. 높은 권위와 지위
- f. 정책결정기능

등으로 표현되나, 개별적으로는 그 부분 특징만을 의미하며,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지도자는 개체적인 개념인데 대해 지도세력은 연체적인 개념이다.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을 표현하여, 영국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고 한 이야기는 익히 들은 말이다.

지도자의 역량은 국가를 창건할 수도 또 파괴할 수도 있다. 융성해가던 일본제국에 폐허의 초청장을 발부한 「도조」가 이를 실증해 주었다.

또 「세력」은 복합적인 단위로 이루어진 힘을 말하며, 그 힘은 대상단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세력의 요소는 물리적인 힘과 정부조직, 단위량, 자원등의 유형요소(Tangible factors)를 포함하는 반면, 성격이나 국민성등의 심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적세력을 논함에 있어 의지의 측면을 특별히 주의하지 않을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세력은 수량을 기준으로 표현된 관념으로 보는 견해를 우선 따르지 않을 수 없다.

2. 통일과업과 지도세력

우리는 위에서 통일과업의 일반배경을 연구했다. 「분열」과 「대립」이라는 민족의 비탄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적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한다. 미묘하고 착잡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하여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국가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닦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지도세력의 유기적인 형식이 요청되고 있다.

a. 통일접근의 단계

통일접근의 방안에 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원형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8월 26일 「로버트」 미 국무차관보의 「모로토프」 소련의상에 대한 자서에서 제시된 「UN감시하의 남북 총선안」이 그 것이다.

UN 감시하의 인구비례제의 자유선거는 미·소 군정하에서 한·미간에 합의된 역사적 사항이다. 당시의 실태는 UN감시가 공산체제에 의한 공략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유세력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충분한 기초가 되리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UN의 권능이, 선거실행의 효과와 선거감시의 효과에 한정되어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정권이 소련군정을 계승한 뒤로는 이 제안을 복귀가 수락할 경우, 그들에게 선거시행의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정책적 맹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더구나 북한의 내부 사회형성이 크게 변모하여 자유선거가 당초에 기대했던 성과를 기약하기 곤란한 여건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더 진취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통일접근의 방안을 연구할 단계에 도달했다. 8. 15 성명은 그런 뜻에서 많은 의의를 가졌다.

또한 방안의 유형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그 이행과정을 집약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단계설이라 할 수 있다.

미 「콜럼비아」 대학의 「브레제진스키」 교수는 1970년 8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소위 4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 (1) 대결의 단계
- (2) 경쟁의 단계
- (3) 협력의 단계
- (4) 통일의 단계

이것은 통일에의 접근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 것이며, 통일노력의 긍정적인 표현을 전제로 한때 의의가 있다.

대결의 단계는 동란기를 의미하며, 경쟁의 단계는 현재와 같은 군사, 경제력의 경쟁이 계속되는 시기를 말한다. 협력과 통일의 단계는 새로운 개척과정이며 명분가치는 강하다. 그러나 이질적인 정치체제의 공존양상이 세계정세의 변동에 의한 파피의 지점에 도달치 않고는 북괴의 통한정책이 한국의 그것과 타협될리 없다는 점에서 단계의 악순환을 회피할 수 없고 따라서 「브레제진스키」의 4단계 방안도 극히 불완전하다.

「자체실력의 확보」와 「외세동원의 체계」 유지발전론은 「특수상황하의 전쟁」 개념과 연관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한 숙명적 과제이다.

b. 국내요소의 변동

한국의 지도계층을 위해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내부 정책 사항을 정시할 필요가 있다.

공업화의 촉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현정질서의 확립, 과학진흥 및 농업개발의 기반구축, 수출의 증대, 주택 산업시설의 확대등 발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변동(Social change)이 점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1) 국내요소의 변모(긍정적 측면)

70년대에 중진국 수준을 능가하고 한국은 계속, 근대 과학, 산업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다. 3차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 함께 안전기반을 구축하고 「풍요의 사회」로 지향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의 격감과 2차산업의 팽창 및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증대가 전망된다. 국토는 도시화, 고속도로의 건설 산업단지의 조성등으로 크게 변모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력수요는 점차 고급화 될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 서비스, 경영, 행정 및 교수요원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또 민주적 체제의 강화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투입기능과 산출기능은 왕성해지

고 따라서 정책결정의 효율화,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한국사회는 과학기술지식의 확대, 대외적인 개방주의적 접촉으로 다방면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미래학적인 투지와 대응을 촉구할 것이다.

(2) 국내문제의 소재(회의적 측면)

수출구조의 전환과 판로의 확보는 월남전의 추세에 의하여, 타개해야 될 문제이며, 성장지속과 외채문제로 국내저축률의 비율은 계속 증대시켜야 하며 전전한 국민소비 행태와 높은 국민저축 수준이 요청된다.

국민소득의 균형있는 분배는, 빈부격차, 사회정의, 경제개발의 원칙에 비추어 조속히 실현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규모가 더욱 팽창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또한 문제시 된다.

71년 현재의 3,287만의 인구는, 놀라운 증가율과 함께, 취업구조, 교육수요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각급 구성별 직종은 취업자의 학력, 자격, 직능에 적합한 유인구조를 수반해야 하며 취업구조 근대화와의 축진을 기하기 위하여 유인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스컴통제의 문제는, 특히 감시자, 전달자, 교도자 등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광범한 대중문화의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주의의 범람을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대화 과정에서 각종 물량과 제도가 증가함에 반하여 욕구상승과 인간상실을 증대「이슈」로, 문화적인 변모가 예상되고 있다.

(3) 복지의 내부변동

로마제국이 왕실의 부패, 분열에서 오는 내부파탄에 그 멸망의 원인을 두었었다. 무릇, 사태의 예상에는 낙관과 비관 또는 긍정과 부정의 태도가 양립된다.

복지사회의 내부변동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주시한다면 ① 경제적 경쟁수준에서의 이탈, ② 독재지배체제의 변질, ③ 사상적 봉쇄원의 파괴, ④ 지원세력간의 충돌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경쟁은 기간산업의 확대경향을 보여주는 한국의 발전추세에 반해, 대부분의 군수산업이 산업구조의 변화의 필요에 직면하여, 생필품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요시된다.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병행발전을 주요목표로 한 7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실패가, 저들의 국민생활에 가져다 주는 혼란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한국의 조약단체가 가리키는 발전지수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새

로운 침략정책의 강화에 부심할 수도 있다.

독재체제의 변질은, 불원간 근 일세대를 육박하는 김일성체제의 불가피한 몰락을 의미하는 바, 1970년대 적화통일의 환상적 야욕은, 상징조작의 권위와 그 효과의 상실에 의한 정치적 부작용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정권쟁탈의 변혁과정은 공산주의 사회의 특색이며, 반금세력의 잠재력이, 그의 「이태올로기」 목살이나 수정을 단행하여 중국의 상황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상적 봉쇄망은, 「카리스마」적 수법의 조작에 의한 김일성의 전쟁 지향적인 「도그마」의 폐쇄성을 말하며, 한국의 월등한 국력우세와 「컴퓨터케이션·채널」의 확대와 함께 우리가 강력히 도전하여, 자유의 근본적인 위력이 철책속에 갇힌, 북한동포들의 정신적 마비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지원세력간의 충돌은 그 전통적인 대립의 발전으로 부터 초래될 수 있는 기대치(期待値)를 가졌으며, 실제 복피의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이다.

c. 능력의 기여

이와같이 변전하는 상황 속에서 대결, 또는 협력등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립한 정부조직의 기능을 중심으로 통일과업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며 또 다하고 있다.

지도기능은

- (1) 행동의 방향과 생활방법을 제시하고
- (2) 정세의 신중한 판단
- (3) 필요한 수단외 동원
- (4) 영향력에 의해 조직을 형성하며
- (5) 인간관계, 이해와 환경개선
- (6) 목적의 수행과 혜택의 분배
- (7) 장래 적응

에 필요한 능력이므로, 이러한 가능변수에 통일의 목표를 접근시킬 때 지도세력과 통일과업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현실에 입각하여 과연 지도세력의 역할이 기대되는 영역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자.

3. 지도세력의 기대영역

지도현상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때, 지도는 개인적 지도형(Personal Leadership)으로 부터 관리적 지도형(Management Leadership)으로 발전되었다. 지도자

의 특성론(Trait approach)보다 상황론(Situational approach)이 중요시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으며, 바꾸어 말하여 「지도자」의 개체 인격보다 「지도세력」의 본질과 형태가, 사회체제나 정치행태의 보다 결정적인 형성단위가 되는 것이다. 관리체제는 정원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스텝(Staff)과 라인(Line) 조직이, 우선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도 필요함을 생각할 때 그 이해가 용이하다.

일반사회 전체의 지도계층은, 사회적 기능의 경계유지가 요청되는 발전도상 국가의 현실에 비추어 더욱 참여와 공헌이 기대되고, 상황론의 입장을 신중히 평가하면, 개발의 수요와 시공간의 「갭」제거, 기타 산적해 있는 과업추진단계에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민주주의와 발전모델의 수입에 따른 시련을 중심으로 지도층의 역할이 크게 욕망되고 있다.

지도층은 원래 하부계층의 의견 태도 행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능력 계층이므로 직접 행동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피지도층의 동의와 창조, 잠재력을 촉진하는 영향원으로서의 기능이 중시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념을 전제한 정치적 합축으로서의 승공통일을 결정적으로 유도하고, 자유있는 평화의 세대를 유도하는 역군으로서 민족사를 성실히 가꿀 수 있는 창조적 지도세력의 형성과 그 역할의 기대영역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a. 발전지향의 정책형성

국가생활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일은 현실적인 「가능성」과 「필요성」의 한계내에서 시도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정책은, 목표(GOAL)의 존재를 전제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집행, 또는 태도의 원칙적 표현이며 행동이나 방법, 혹은 Doctrine이나 Program등을 그의 유사 개념으로 한다. 복수의 계획상 가능성의 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계산된 모험(Calculated Risk)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의 소스(Source)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1) 전통이나, (2) 상황에 대한 이미지, (3) 정보, (4) 리더쉽, (5) 국가리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조직상의 형태, 의회등이 가장 강력한 정책형성의 기본요소가 되나 특히 엘리트의 공헌을 중요시해야 한다.

정책형성에 있어 지도세력이 가진 임무의 중요성은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정책이 한국의 전통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내포하거나 Leader의 권위주의가 지나치게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발전지향이라고 해서 너

무 이상적인 정책만을 수립해서도 안된다. 「조지 케난」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관념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국제 정신훈벌증 현상이며, 평화조해의 요인이 된다고 비난했다.

물론 여기서는 대외정책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대한 전전한 관념, 정확한 「인포메이션」에 의해 훌륭한 참모진을 활용한 정책의 형성이야말로 지도세력이 담당할 역할의 대역이 아닐 수 없다. 통일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우리는 지혜있게 공헌해야 할 것이다.

b. 민주사회의 전통확립

우리는 전통적인 서구의 민주주의 이식과정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경험해 왔다. 정부의 권력구조, 헌정질서, 정당생활, 선거, 관료, 충원방식 및 개인의 공민적 자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쓰레기통의 장미」를 비유케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사정이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발전하는 사회의 고무적인 현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재태의 전통형식은 점차 퇴색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 가정의례준칙, 각종 윤리위원회, 국민운동의 효과는 현저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네 생활에는 유형무형의 끝 없는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사대주의, 지성인의 현실도피, 동양철학의 유심론, 자학과 「새디즘」, 착취와 폭력, 열세의식과 현실무사, 반도덕과 「샤마니즘」이 저류하고 파벌이나 지역감정, 권력의존과 금전만능의 폐풍이 발전의 진로를 가로 막고 있다.

지도세력은 대중에 앞장서서 새로운 민주사회의 전통쇄신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된다.

c. 안보와 평화애호

이 문제는 통일과업의 일반배경을 검토할 때, 비교적 충분히 언급하였으므로 재탕은 하지 않기로 하자. 간첩의 침투로부터 외세변동, 또는 협조체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방법을 충실히 모색해야 한다. 「인포메이션」과 「메스콤」 활동 군사 기타 안보조직의 활동과 대외관계의 발전 등은 바로,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오늘과 내일의 지도세력의 역할이 가장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영역이다.

d. 민주주체세력의 형성

과학, 문화, 경제, 학술, 정치, 여성을 구분할 필요없이 민주과업을 주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체세력은, 그 범위나 구성방법 및 활동문제를 기술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케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입장의 구별에 따른 분열을 방지하고, 개체단위중심의 생활관을, 민주

적 단위로 승화시키며, 국민단합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말하자면 민족사회의 「단위핵」을 구성하는 것이다.

지도세력이 단행해야 될 문제의 하나이다.

e. 과학기술지식의 공급

지금 우리는 과학한국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 있다.

지도계층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입이 가능한 과학기술지식은 결코 소규모의 정보센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연구소, 군사기술연구소, 경제기술연구소등 기술연구의 확대개발시책은 실로 긴요한 조치이며 지도세력은 이에 보조를 맞추어, 더욱 효과적인 개발과 기술의 수요량을 확보하고 정보의 신속한 교류의 자체발전에 의해 그 활동범위를 개방하여 기술지식의 원활한 공급통로를 개척해야 한다. 현대는 과학만능의 시대이다.

f. 생활권의확장

반도 전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바다를 건너 세계와의 자유로운 접촉이 소망되고 있다. 문물과 인간의 교류를 통해 자유중국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National Interest의 소지를 발굴하자. 영국의 Gun boat diplomacy도 미국의 함대와 다변외교도 지금은 현실주의의 파도속에 묻히고 있다. 한국은 3면밖에 없는 교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g. 국토의 단위기능 조정

농촌이 폐쇄사회가 되어 임금이 과상적으로 저조하고 소득이 투자량을 상회하지 못하여 이농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용어 그대로 Push out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게 되면 가도시화(psuedo-urbanization)라는 후진국의 특색이 드러나게 된다. 의식구조와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물론, 중도시의 성장이 부진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교통 문화시설이 빈약하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분포가 타하위 도시인구의 총화보다 많다. 발전의 편중과 농촌의 정체는 심각한 문제다.

전원 주택, 상공업, 교통, 교육등의 지역간 조화와 생산, 분배, 유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국토의 단위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농촌지도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의 농촌은 차츰 인위력이 가세하고 있다. 통일에의 세력은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h. 반공이론의 개발

복귀의 정치공세로 부터 국가안보체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반공이론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뒤에 가서 좀 더 부연하기로 하자.

i. 메스컴과 여론주도

국민의 레벨이 높을 수록 보도의 객관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메스컴은 사회적으로 감시, 비판, 교육 참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나친 상업주의나 「만네리즘」에 빠지지 않고, 국가의 안전과 발전방향에 민감할 수 있도록 메스컴엘리트들의 공헌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투자율의 증대, 조세부담의 증가 및 인구문제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경제발전의 지속과 군사력 유지문제 민족문화, 여성지도, 교육, 상공산업, 미래관, 교통-통신, 통일 이후의 문제등, 지도세력의 역할이 기대되는 영역은 허다히 남아 있다.

5. 지도세력 육성의 방향

지도세력은 이와같이 국토통일에 대비하여 북한해방의 봉화수(Torch-bearer)가 되어야 하며, 민족적 「에너지」의 분산을 방지하고, 과학한국의 전위로서 국력을 신장하는 주도역이 된다. 사회정화와 발전, 또 창조적인 평화의 수호에 헌신하고 나아가 통일의 전열을 정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외 국내요인의 변동을 관측하고, 특히 국내문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회의적인 측면을 관찰했다.

이것은 주로 70년대의 사태변화에 관한 관측이며, 70년대야말로 조국의 성취를 관가름하는 결정적인 시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의 사정이 제외된 것이 아니며, 전망의 방향은 한국의 장래를 발전 지향적으로 창조적으로 주도할 지도세력의 시대적 사명과, 상황과악 및 역할의 대역을 탐색하고 그 주요한 사항을 점검하는데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세력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대성을 이해했으며 지도세력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를 긴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도세력 육성의 기본방향을 명백히 해 두자.

① 지도세력은 근본적으로

a. 민주주의적이어야

- b. 발전주의적 이념
- c. 국가주의적 이념
- d. 인간주의적 이념

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정신, 국민교육헌장, 교육법 및 경제개발계획에 잘 표현되어 있다.

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지도계층은 민족중흥과 역사창조의 사명을 자각하여 개인생활, 사회생활, 국민생활에서

- a. 평화와 안보 애호정신
- b. 개혁과 전위정신
- c. 협조와 단결정신
- d. 창조적 입체적 국민정신

을 생활의 지표로 하여 건전하고 새로운 국민상을 확립해야 한다.

월남에의 참전과 전투에서의 지배적인 승리가 메스컴을 통해 세계에 전파되자 유명했던 6. 25 사변을 상기하여 외국인들이 느낀 한국인의 「이미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양립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인이야 말로, 용감하고 의리있는 국민이며, 가장 훌륭한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잘 살아 보자는 의욕에 차 있는 국민이라는 「이미지」이며

다른 하나는 살육과 돈을 좋아하는 잔인하고 철저한 국민성을 가진 야비한 국민이라는 이미지이다.

우리는 양론이, 다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아도 좋겠다. 건전하고 새로운 국민상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성취되는 한.

③ 지도세력은, 가속되는 발전, 인력수요를 비롯하여, 상승하는 사회욕구와 인구의 계수적(係數的) 증가에 따르는 취업과, 교육주택의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공헌함으로써 과제해결에 선봉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식인위, 현실 유리와 정치인의 목적 이질적 파벌투쟁은 뿌리 깊은 사회적 질환이다.

④ 국가장래의 긍정적인 전망을 기초로 지도세력은 능동, 보편, 합리, 미래지향의 가치관과 정신자세를 고조시켜야 한다.

↑향락풍조와 기회주의, 물욕적 이기심과 공익기피, 기타 허다한 비리(非理)에의 비판의식 둔화현상은, 산적해 있는 민족의 과업수행을 위한 저해기류가 아닐 수 없다.

⑤ 급진하는 과학, 지식, 기술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도층은 과학적 사고방

식을 널리 보급, 함양하고, 과학시대의 풍토를 조성하면서 인간의 위치를 높여야 한다.

또 지도체계의 근대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국민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며 국제협력의 개척에 전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6. 지도세력의 결정요인

지도세력의 관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류하기에 앞서 현대 사회, 특히 조직구조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이론을 잠깐 검토해 보자.

1. 엘리트이론의 「디렘마」

조직내의 엘리트가 갖는 권위나 지위는 현실적이다. 조직외의 엘리트는 Social change를 지향하는 잠재세력이 된다.

엘리트의 충원을, 선민통치 옹호론과 결부시켜, 대중정치에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엘리트이론의 디렘마로 착각하기 쉽다.

이것은 엘리트의 유형을 혼동할때 주로 원인이 있다. 엘리트의 분류기준을 기능별 전문성에 두고 ① 정치엘리트(Political Elite), ② 지능엘리트(Intellectual Elite), ③ 기업엘리트(Business Elite), ④ 군사엘리트(Military Elite), ⑤ 메스컴 엘리트(Mass Communication Elite), ⑥ 사법부엘리트(Judicial Elite)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다.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주요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 많은 몫을 차지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 권위, 부등 다기한 사회적 가치에 의해 각종유형의 엘리트로 구분된다.

밀즈는 그의 「권력엘리트」에서 정치, 경제, 군사면을 중심으로 빅·스리체제의 상관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a. 빅·스리 체제는 조직기술에 따른 전형적인 단위이며 그 형태는 판로제이고 결정권은 중앙집권화하고 있다.

b. 역사적으로 서로 밀접히 연관된 지배층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c. 이 중앙집권화한 권력의 정점에는 부호 및 회사중진들이 군림하고 경쟁한 정치가와 군인정치가가 엘리트층을 차지한다.

따라서 판넨상 지도세력은 엘리트에 비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 결정요인은 동일하다.

엘리트는 지도세력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우리는 엘리트의 형성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지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엘리트의 결정요인

사회적인 배경으로 「교육」, 「경력」, 「사회계층」, 「부」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제도적인 요인에는 「선거」, 「임명」을, 문제적인 요인으로는 「네포티즘」, 「쿠테타」, 「혁명」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요인들을 검토해 보자.

(1) 교육(Educational Factor)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현존사회 및 정치구조상 엘리트계층에 진입하려는 엘리트 지망자(Aspiring)에게는 최선의 엘리트 통로(Track)이다.

「교육」은 엘리트그룹의 공동목표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집단생활의 Training 과정을 제공하여 소속감이나 충성심을 조장하는 기능을 하며, 기회균등, 동기부여를 통해 폐쇄적 충원방식을 지양하고 개방적인 충원방식을 택하게 한다.

특히 발전지역에서는 직업성공, 교액수입, 사회적 신분과 위신을 제공하며 근대업적 지향의 사회(achievement orientation society)에서는 Social change의 주요요인으로 된다.

역대 국회의원의 교육정도는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의 비율이 한문수학, 국·중·고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의원의 연령분포는 60~40대에 집중되었다. 제헌의원의 경우 35~55세가 80,5%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1893—1913년 사이에 출생했으며, 그 대부분이 청년기인 1913—1937년에 전문, 또는 대학을 마쳤다.

일반국민의 당시 교육수준이 저조한 편임에 비해 정치적 진출이 교육정도와 중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의 일반국민의 교육수준은 90%가 무학 또는 소졸 정도에 불과했었다.

(2) 신분계층(Stratification)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정치적 생활을 할 기회가 많다. 미국의 경우 정치엘리트가 모든 집단에서 균등하게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배적인 사회계층으로부터 불균등하게 선출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경력(career)

엘리트층에 오르기 전에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역대 한국국회의원의 경력을 조사해 보면 농업이 가장 많고(평균 24,6%) 제헌국회 때는 43%였던 것이 5대에 와서 30%, 6대에서는 14,9%로 국회의 연륜이 쌓일수록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6대 7대는 평균치 이하로 떨어져 있다.

전직의원이 두번째로 많고 무식이 세번째 회사중역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법조인, 기타의 순이다.

3. 엘리트의 층원

한국사회에 있어서 엘리트형성을 결정하는 신분계층은 이를 3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 지주층

지주층은 한국의 전통적인 상층 신분이었다. 지주층이 토지자본을 기반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혹은 상공업층으로 대도시에서 사회적 기초를 다졌으며, 국내 국외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제2세대들이 일제식민 관료기구에 많이 들어갔다.

b. 관료층

이들은 실제 전통적인 한국의 관료층의 중핵을 이루었고, 생계수단을 공직에 의존하게 되었다.

c. 전문직

관료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에서 이수한 교육배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법률계, 의사,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기업경영계등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층 유형간에는 수직적 사회변동(Vertical Social Mobility)의 현상도 일어났으며, 반민특재에 회부된 전신 일제관리들도 다수 엘리트 층으로 진출했다.

그리하여 국내식민관료군과 중국, 미국, 등지의 해외에서 돌아온 지도세력의 그 원적인 주류가 한국의 정치풍토를 수 놓았다. 정치사상 그 원적인 주류와 그 내부의 파벌간에 중복된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정치활동의 양상을 결정지었다.

정치 지배세력은 자본가와 제휴하여 소위 관료자본을 부산시켰으니, 이들은 상호보험적인 운명의존 관계를 형성하여 특혜와 부정 부패등등의 사회적인 역현상을 확대시켰고 다만, 자기비대화에 전념하여 관료자본가는 드디어 최근의 매관자본 계층(Comprador)의 성격을 대유하게 되었다.

정치엘리트의 층원과 교육관계는 이와같이 중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초

기에 극소수(전 인구의 1.3%)에 불과했던 학사 이상의 요소들은, 실은 대부분 정치, 사회적인 지배계층을 이루었다.

정치엘리트의 출신배경을 보면, 자유당 때는 경상도, 서울이 많았고, 민주당때 평안도와 전라도, 5.16이후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등이 비교적으로 많은 비중을 갖게 되었다.

또 종교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고(32.5%), 유교(17.4%), 불교(13.3%), 천주교(6.5%)의 순이다.

국민전체의 종교분포에 비해 보면 절대다수의 종교인이 엘리트층을 이루고 있는 바 종교가 정치면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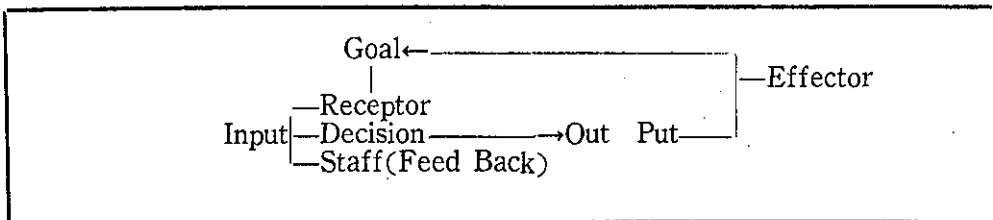
여기서, 우리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종래의 지도세력을 발전지향의 민족적 의지면에서 신중히 평가해 볼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 전통현상의 평가

전통현상은 그 전형적인 시기를 자유당시대로 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사실을 기초로 그 때를 모형화 하자.

사실 정치적 이념의 제도 내지 체계적 함축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직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표와 지배엘리트(Ruling elite)의 유형 및 정치체제의 특성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결과, 정책성립의 과정과 집행결과에서 비정상의 현상을 발견하는 예는 허다하다.

한국의 사회적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표현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시의 정책결정 및 정치체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분석방법은 모델에 의하여, 편의상 정치행정의 체계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의 구성요소와 변수를 발견해야 한다. 「이스튼」과 「알몬드」의 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하고, 그 모형의 적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모형으로 응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a. 자유당정부의 목표(Goal)는 그것의 변형가능성과 국시의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목표자체의 성격에 비추어 단순영역에 속한다. 「민주주의 실현」이 집약표현

이며 이를 위해 반공 반일의 정책 유형이 고정되었다.

1948.8.15 취임 후 1960.4.26 하야시까지 12년간, 지배적인 정치행태는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경향의 것이었다.

인플집단의 권력지향과 세력간의 갈등, 혼란위에 1인독재체제 확립의 각종 대안이 채택되었다. 대통령중심제의 병리화, 단원제, 발췌개헌안의 활용등이 지적될 수 있고 정실인사, 비서정치를 병원(病原)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재론의 흥미가 없다.

투입계층은, 특히 정당사정의 취약성 때문에 지배층의 독주를 개방하였다. 1951년에 자유당이 창당되었을 때 구성요소는 우민우부(愚民愚夫)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1954년 5월 20일 자유당, 민주당이 공천제를 시작했으나 야당세력이 미약했다. 의석 수를 보더라도 자유 126, 민주 79의 비율이었다.

인플그릇의 정당적 생태는 다음과 같이 그 특색을 추출할 수 있다.

- ① 좌익계 노선배척
- ② 고도의 인물주의
- ③ 이념과 정책의 결핍
- ④ 정치적 기반의 약체성
- ⑤ 정당상호간의 비타협적 관계(견원(犬猿)의 생리)
- ⑥ 정당지지분포의 양립(도시 : 야, 농촌 : 여)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정당이 가진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영리, 부정, 권부에 집착하여, 「선택된 자」와 「선택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교량을 브로커의 통로로만 전용하고 토론의 광장은 관권의 사열대로 변해 버렸다.

b. 정책결정을 위한 투입집단으로서 사회적인 지도계층의 기능조직은, 특히 이익집단의 실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전반적인 면모를 이해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관념은, 특수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이익결사체다. 주로 입법, 사법 행정, 언론분야에 접근하여 이익관계를 표명, 또는 거래하면서 타집단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추려볼 수 있다.

① 도시지역의 계층적 편중현상을 먼저 생각하자. 사회의 기능이 아직 미분화상태이며 서구사회의 풍조를 모방하는 것이 대체의 생리다.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권력기관에 접근하고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인사들이 허다했다.

② 성원간의 주체의식 결여는 또한 자주성의 박약을 의미한다. 자기집단의 고유목표 추구보다는 정치권력층에 접촉하므로써 권력조정(調整)의 객체가 되었다. 당시의 대한노총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③ 이익표명의 잠재성과 이익활동의 비공개는 역시, 인풀기능의 빈약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사실이었다. 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대한노총등은 그 당시의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것이 사회적 지도계층의 실태였다. 역사적으로 지도체제가 가졌던 정상적인 역할의 공백을 피부로 느껴왔던 경험에 비추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역사의 횡단부를 점철했던 당시의 지배계층을 돌아보자.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고 중앙행정기구는 '12부, 4처, 2원, 3청'으로 조직 형태의 면모를 갖춘 셈이었다.

1950년을 중심으로 외자구매청과 관리청이 각각 대통령과 총리 직속으로 되고 도의회와 시·면의회가 성립했다.

그러나, 제도적 기초보다는, 향시 집행기술적, 조직운영 방법적 차원이 높이 평가 되어 왔다.

지배계열을 양분했던 족청계와 일송계의 판지쟁탈게임은 공직을 사유물시 내지 치부의 방편으로 알았으며, 더구나 총원(Recruit)의 양상은, 전형적인 스포일시 스템하에서 상층부의 경우, 이박사의 개인관계를 기초로 정실이 두터운 인사와 독립투사에 특전을 부여하고, 동시에 일제시 일본에서 주로 법률을 전공한 인사들과 미국에서 철학을 전공한 인사들을 기용하는 독특한 경향을 보였으며, 한편 하층구조에서는 정실과 청탁의 연쇄가 인사기준이 되었었다.

의회지도는 완전히 집권당의 독점적인 조정세력으로 화하고 의회기능은 권력견제의 제도원리를 떠나 여당정책의 합법화조작으로 전락되었다.

c. 정책결정(Decision Making)의 유형은 권위주의 폐턴을 고수했는데, 초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중심이었으나 후기에는 총리가 제외됨에 따라, 대통령과 당의 중진 중심체제로 바뀌어 졌고, 정책기구는 이박사와 만송의 2원화 현상, 정책절차 역시 공식적결정 절차보다 비공식 절차에 의한 결정이 대부분이었으므로 2원적이었다. 더구나 국무위원은 정책결정의 참모라기 보다는 자문역할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반주민 의사, 특수지역, 특수이익집단 또는 야당의 요구에 의한 투입은 비현실적이었고 전제정치의 양태를 초래하였다.

우리는 이 점에서 최고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① 훌륭한 참모진(Staff)의 형성과, ② 정상적인 인포메이션의 기여가 기초적인 선행조건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분석모형에 의한 피드백(Feed back) 기능은 대내적으로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당시의 집행감시(error-detecting)를 위한 공식기구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

정으로는 부정의 폭로는 기대치가 없었다는게 사실이다.

대외적으로는 ① 메스컴, ② 야당 ③ 국민이 집행감시(action monitor funtion)의 주체였으나, 정치부패와 사회질서혼란, 각종 이익집단의 난입과 어용화, 언론, 문화단체의 수난, 경제질서문란, 부정선거등의 사회상황하에서 그 정상기능의 기대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태의 인식이, 가끔, 불필요한 공박이나 부정적인 태도의 산물로만 간주되고 만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무사주의」, 권력에 대한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가진 「کم플렉스」 때문이다.

d. 여하튼, 종래의 지도계층이 가진 특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1) 리더의 권위주의
- (2) 정치체제의 폐쇄성
- ③ 대중에의 호응(Response) 부재
- (4) 보수, 사대, 봉건등의 특성
- (5) 엘리트의 배타성
- (6) 지도계층의 균형상실
- (7) 엘리트의 유동성의 침체
- (8) 진부한 Nepotism의 풍조

「온고」(溫古)는 「지신」(知新)을 위해, 그리고 「지피」(知彼)는 「지기」(知己)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7. 대안의 구상

Politics furnished the situations, courages provided the theme. Courage, the universal virtue, is comprehended by us all but these portraits of courage do not dispel the mysteries of politics

—John F Kennedy—

해군방송선의 납북을 계기로, 한국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무마하고 대외적으로 도발의 명분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북괴는 소위 평화적 연합체론을 제안하더니 박 대통령의 8.15 성명에 뒤따라, 최근에는 7개항의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제창했다.

그것은 미군의 철수와 한·미방위조약의 전면 철회를 전제로 한 선전목적이 평화 공세였으며, 66년 이후 재현되고 있는 현상이다. 저들이 벌이는 평화공세의 본

의는 적화통일정책의 포장공사에 불과하다. 공산주의는 폭력을 칭송하는 생활방식이며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역사를 계급투쟁으로 해명했다. 「레닌」도 전쟁필연론을 내세워 세계정복과 자본주의의 패배를 호소했다. 다난한 현실의 진행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창조하고, 통일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도세력의 형성과 그 육성책을 확립하는 것은, 역사의 순환과정에서 현재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사실의 하나이다.

1. 핵심론

먼저, 우리는 지도세력육성의 기지를 탐색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두기로 하자.

a. 반공지도자의 육성

혁명공약 제1조는 「반공을 국사의 제1일의로 삼고,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또 국민교육헌장이 「반공민주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구상에는 무엇보다도, 반공지도자의 육성 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변전하는 사상과 문명의 조류속에서, 전 세계를 돌아볼 때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한 독재」와 「독재적 방식에 의한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방식에 의한 공산주의의 채용」과 「공산주의적 방식에 의한 자본주의 실현」등, 우리는 모순과 「파라독스」의 심각한 합류점(Juncture)에 봉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정치철학의 원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실로 다분히 심리적인 원인을 내포한 맹목의 현상이며, 우리가 신앙의 세대(Era of Belief)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민주주의의 전통적 원리가, 제반정세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뢰를 고조하는 정치이념으로 계속 발전되게 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고차적인 이론연구가 필요하고, 따라서, 체계화된 반공이념의 개발이 동시에 요청되며, 반공활동의 실제면에 공헌하여 자유와 평화의 수호에 기여하는 반공지도자의 단계적인 배출이 요망되고 있다.

일반교육과정에 반영된 반공이론은 사실, 극히 논리적으로 공허한 주입식 방법에 치중하여 왔다. 반공교육은 전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민주적 사고와 생활습성, 사회참여와 가치관이 선행된 시민교육의 부산물이어야 한다.

(1) 일반교육과정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 까지, 정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상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학습지도면이나 교과과정에 전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인간관계 공민적 책임, 신념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안을 배정하고, 공산주의의 실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민학교의 교육효과가 교육계층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응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기술적 방법을 연구하여, 예컨대, 정치교육의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복귀체제를 타도 분쇄하는 「타공전술」을 교수하거나, 워크샵(Workshop)형식의 토론에 참가케 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반공정신의 함양을 기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의 반공교육은 정책적으로 등한시되고 이론적으로 빈궁하다.

정치, 경제, 법률등의 사회과학 계열에 부분적으로 혼입된 공산주의 이론과 학문교호(Interdisciplinary) 작용에의 타성적기대에 의존해 온것이 사실이다.

교수가 전문적으로 반공이론을 연구 또는 강의하는 실례는 없으며, 별도로 이수과정을 설치한 학교도 소수에 불과하다.

서독대학에서의 반공교육(정치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거 적극적인 태도로 실행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은 공산국가의 최근사정을 우선과제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각대학에서도 공산주의 문제에 대한 교육을 중대한 관심 영역으로 알고 있고, 하기나 동기의 특별강좌, 또는 학점배정에 의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반공지도자의 전문교육

비전문기관으로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원, 사회종교 단체등이 소극적인 반공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과 능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공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자유센타가 대표적인 존재이다.

한국반공연맹, 아시아반공연맹, 국민방첩연구소의 활동은 물론, 높이 평가해야 한다.

동란기에 문교부는 국민사상지도원을 설치하여 일반 성인의 반공지도를 실시했다. 지도목표는, 자유, 공산진영의 대결의 열전장인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정당성과 우월성을 연구 발표하고 국민사상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계몽선전을 함에 있었다. 예산의 상당배정, 교수와 사계인사의 전문위원 위촉등은 전시하의 반공의식 선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반공이론 역시, 민주정신, 민족정신에 국한하고,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나 적극적인 정치기술의 지도는 없었다. 그러다가 지도원의 존재마저 폐소되고 말았다.

현 단계에 와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인정되고, 나아가 그 지원정책이 강력히 요망되는 자유센타의 활동을 탐문해 보기로 하자.

자유아카데미 교육원과 연구원 및 홍보처를 설치하여, 국제적인 평면에서 반공지도자의 양성, 반공이론의 체계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전파를 기하자는데 그 설립취지가 있었다.

자유아카데미의 학칙에 의하면 「자유센타의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반공이론과 그의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반공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명시하고 제2조는 거기에 연구과정과 일반과정을 둔다고 했다.

다시, 제3조는 「연구과정은, 종합적인 반공연구 기관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포함을 목표로 하여 반공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오하고도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며, 학술과 실사회에 걸쳐 공산주의자를 능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4조에서 「일반과정은 각계 각층의 지도적 인물에게 반공이론 및 전략 전술의 연구와 상호 의견교환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반공정신 무장을 강화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진가를 이해시킨다」고 했다.

자유아카데미가, 그러나 연구과정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사정이 해결되지 않았다. 겨우 중·고 교사반을 주로하여, 대학생반, 초중고 교장반, 교포반 및 고등학생 반등을 위한 일반과정만을 실시했으나 실적은 의심스럽다.

일반과정은 강의와 토론의 방식으로 하고, 특별강의, 세미나, 견학 및 영화감상도 병행하고 있다.

자유아카데미는 결국, 반공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가장 권위있는 훈련기관이지만, 그 기능은, 정상발휘가 어렵게 되었고 창설취지에 기록된 국제적인 반공교육 기능은 마비상태에 있다.

1965년 소규모의 교육활동을 시작한 이래, 재정의 후원이 없어, 한국반공연맹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현 단계에서는 통일원이 이를 흡수 운영하는 안도 고려해 볼만하나, 여하튼, 본래의 창설목적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과 사회의 이해가 앞서야 했다.

b. 과학기술계 지도세력의 육성

정부는 1,2차 인력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2차 인력개발 5개년 계획에

이어, 1967년부터 1986년까지의 20년의 「장기인력수급추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의 수급추계를 산업별, 직종별, 기술수준별로 파악하여 교육, 직업, 훈련등 인력개발에 필요한 장기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인력수요추계를 보면, 1967년의 30,709천명에서, 1986년에는 42,238천명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소산소사(小産小死)의 선진형으로 인구 경향이 개선되며 총 인구중 14세 이상의 생산가중 인구는 1967년의 54.9%에서 1986년에는 74.4%로 격증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과학기술계 인력의 수요추계는, 1967년의 343천명에서 1986년에는 2,427천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0.4%이며 고용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이고 과학기술자, 기술공, 기능공의 구성비는 1967년의 1:4:20에서 1986년에는 1:2:13으로, 특히 수준이 높은 과학기술자의 수요증가가 뚜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계 지도계층은, 경제, 사회개발은 물론, 전문과학분야의 발전의 핵심요소이며, 근본적으로 과학정책의 구체적 형성세력이다.

전통적인 인식의 불합리를 제거하고 한국은 지금 과학수준의 증강에 힘쓰고 있다.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선에서 산업화를 통한 국가근대화는 고도의 과학기술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원자핵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의 해방이 현실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파속개발이 각종형태의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충분한 개발계획과 과학지식의 수입 연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기술계 인력의 수급전망에 따른 국가발전과 통일의 형태로 표현되는 민족전체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지도적인 과학인력의 육성 방안을 질과 양의 측면을 공히 연구하여 확립 실천해야 한다.

① 과학교육개발청의 설치

「유니셀」의 지원하에, 과학기술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현재 기초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조정하고 있으나 문제의 범위가 넓고 예산의 한정 시설의 빈곤, 인적 자원의 부족등의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교육의 자료, 실험실습시설, 교육기관의 체질, 기술수요의 파악문제를 위시하여 교육과정의 상황에 적응하는 수정 개편등의 문제를 전담하는 중추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사실, 과학기술연구소, 군사 및 개발기술연구소, 중앙교육연구소, 시청각연구소, 공업연구소등 각종 연구소가 설치되어 개별 전문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부흥과 관계되는 과학교육의 전담개발기관이, 그러나, 없다는 것은 특히 과학지도의 사회화(Socialization)와 관련하여 갑갑한 일이다.

② 이공계대학원의 확충

이공계대학원은 과학기술 능력개발의 근간이 된다. 국가산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지도적인 과학기술 인력의 배출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영재(英才)교육 기관으로서 이공계대학원 강화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수용능력의 확대, 대학원생 전부에 대한 충분한 장학금 지급, 정부, 연구소 기타 산업계와의 고용계약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사회개발의 방향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대학원을 설치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주요기업체에 실무기술 연수원을 부설, 장기인력 수급계획에 의한 부족 인력의 충당을 위하여, 공과계 각급학교의 교육능력을 신장하는 한편, 산업사회와 교육효과의 일치를 기하는 시대적응(Time Orientation)의 시범케이스를 설정하여 산학(産學)협동에 의한 인력개발을 구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교육과의 상호의탁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C. 충원정책의 혁신

조직체의 효율적 발전을 목적으로, 행정기술적인 인사정책의 새로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의 문제는 그 정책과정을 기준으로 4개단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기초—법령, 기관, 정원, 분류
- ② 채용—모집, 시험, 배치
- ③ 능력발전—훈련, 교과(考課), 승급승진, 전보
- ④ 근무의욕—보수, 연금, 신분보장, 인간관계

문제의 핵심은 업무기능에 일치되는 직위의 조정에 있다. 중앙관서의 업무내용이 연구, 계획, 정책수립을 주요사항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하위급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초에 업무기능을 신중히 고려치 않고 피라미드의 계층제의 형식에 치중하여 직제를 편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계층에 속하는 고위관리직에 대한 체질을 평가해야 한다.

지도자의 제도적 배출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행정의 측면을 실례로 지적하면 전 교육기관의 상징적존재인 국립대학교 내에도 상당수의 학사(學士) 교직자가 있다.

교수, 행정, 연구보조직이 각각 상이한 자격요건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경계구분이 확립되지 않았다.

한국과 같은 저개발국가에 있어서는 대체로 3급수준의 중견공무원에 비해, 2급

수준 이상의 공무원은, 그 체질이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세대감각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정치현상에 관한 가치체계가 보수적이며 비창조적이므로 이의 개선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매크렌스키」 유엔 지역행정 자문위원은 한국의 행정개발 계획 적용의 타당도 조사에서 그 타당도가 인정되었다고 하고, 행정대학원 내에 2급공무원의 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을 목적으로 그 지원계획을 유엔에 건의했는데 그 기본 목표가 이런 점에서 출발한 것이라 이해된다.

현직 고위관리직에 종사하는 많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이나 경영자들 중에는 무자격 또는 저능력자가 불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어느 조직체이든 그 전체의 성과조성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능력발전을 실현하는 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발전행정, 리더쉽, 인간관계교육이 그 중요한 이행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일반이론과 적응시켜 보자. 정치체계의 전문적 역할의 담당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당하여, 업무지식을 기초로 적응한 기술로서 훈련시켜 정치적인 인식관도(Cognitive map)나 가치, 기대, 감정등을 제시하는 과정을 정치적 충원이란 한다.

알론드는, 충원의 담당구조를

- ① 정당
- ② 선거제도
- ③ 관리채용, 시험
- ④ 모집, 진급

등으로 분류하고 충원의 스타일은

- ① 귀속적스타일
- ② 업무적스타일
- ③ 파벌적스타일
- ④ 보통적스타일

등으로 구분했다. 교육, 경력, 훈련에 관계없이 주로 출생배경이 충원의 조건이 되는 경우를 귀속적스타일이라고 했는 바, 후진국에서 거의 지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업적중심, 교육경력, 훈련등을 충원의 조건으로 한 (메리트 시스템등) 경우는, 이를 업적적스타일로 규정하여 선진국의 지배적현상이라 보았다.

또, 파벌과 보통의 문제도지연, 혈연, 소속배경등의 「인포멀 그루우푸」에 의

한 중원기준의 채택 경향과 일반적, 보편적, 기준적용의 경향을 주시하여, 후진국에서는 전자가 선진국에서는 후자가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후진현상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특히 정치적 지도세력의 형성이나 체질 및 육성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체계의 모든 구성부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 정치체계라고 하면, 법으로 공정한 관료기구 이외에 신분, 폭동, 시위조직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 ① 이익집단
- ② 정당제도
- ③ 행정과정
- ④ 입법과정
- ⑤ 매스콤

등의 전 부분의 각개변화는, 그 기능의 경계의 존재를 전제하여, 종합성(Comprehensivenes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정치적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의 양식(Style)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정당활동이나 선거문제 및 매스콤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론과 실천, 방법과 수단, 목표와 과정간(過程間)의 역리를 배제하고, 아이디어의 공전이나 형식적인 구호보다는 과감한 응용과 행동의 미학 또는 기술을 체득하는데 힘써야 한다.

지도자의 육성은 지도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는 문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학생의 귀국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국가의 재원과 장기교육 투자의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는 논리이며, 영주권을 교부하는 국가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식수준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셈이다.

장기교육 투자의 효과를 흡수하고, 지식과 기술수준을 국내로 이식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유대요인을 확보하고, 외교능력을 확충하며, 국민레벨의 상승과 서구적인 생활양식의 보급 및 인격적 신뢰의 무드를 조장하고 원활한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유학생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능력기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오래전부터 요청되어 왔다.

기교적 방법의 적용 예를 든다면, 유학보노금(留學報勞金)이나 기초정착금을 줄 수도 있고 귀국환영 의식을 열 수도 있으나, 그것 보다는 정부의 신분협약증서가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교부될 수도 있다.

신분협약 중서

전공, 학위, 정명

정부와 국민은 귀하의 성공을 축하하고, 귀하가 가진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귀하가 정부 기관이나 학계 기타 전공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조국의 영광을 위해 공헌해 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의하고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대통령 서명

(또는 국무총리)

그리하여 모든 유학생에게 모국지향의 의지를 심어주고, 선택(영주, 귀국, 탈출등)의 기준을 제공하며, degree의 권위를 인정받고, 능력과 가치관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도세력의 형성에 참여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국내생활의 불만을 제거하여 통일과업은 물론 산적해 있는 민족적 과업완수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설치와 역할이 요망된다.

다시는 현실에의 환멸과 경제적인 허탈속에서, 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실업대열에 백의종군하는 세계적 수준의 자원을 없게 해야 한다.

또 해외교류의 폭을 넓혀, 한정된 조건으로부터, 개방된 교육체제에로 자유롭게 이행하도록 문호를 넓히고 관학(官學)협동의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닉슨 대통령의 양팔로 지명되는 「헨리 에이 키신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와 「다니엘 피 모이니한」(도시문제 담당보좌관)은 둘 다 학자출신이다. 「라이샤워」는 주일 대사직을 퇴임하고 하버드대학으로 돌아 갔으며 존슨의 경제담당 보좌관이었던 로스토우도 텍사스주립대학으로 복귀했다.

근래에 와서, 고위관직에 등용되는 대학교수의 수가 늘어나고, 연구소에 국정문제가 위탁되는 사례는 학자의 정치적 공헌의 풍토조성을 의미한다. 어용학자로 몰려 학계귀환이 곤란한 유명교수들의 향방이 문제이던 때는 지나가고 있다.

현실문제와의 결부에 관한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껴 보다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정학이 연구되고 있다. 한국관료제, 한국정부론, 행정분권화, 한국지방자치에 관한 깊은 논급과 케이스 스터디, 또는 고급공무원과 지배층의 배경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자라나는 사회의 면모를 똑똑히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한국학의 분석을 위한 일반적 이론설정의 노력이 현저하고 특히 발전, 변동, 심지어 Time orientation등의 특색있는 연구방향에 관심이 커지며, 과학, 사회, 경제적인 제 현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학문분야의 개척에 힘쓰고 있다.

총무처가 발표한 「엘리트 풀」제는 종래의 총원양식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 약간 고무적인 조치이다.

사회적으로는 기회균등, 발전론에서는 능력과 자격, 개인적으로는 신분보장이 총원문제의 기준이 되며, 새로운 자원의 육성과 기존자원의 유출방지, 또는 도태방지가 병행하여 이해되고 있다.

d. 합리적인 선거제

지도세력은 선거에 의해 형성된다.

정치엘리트의 형성, 또는 정치적 지도세력의 결정에 있어, 대의제의 제도적 장치인 정당과 선거가 가지는 의의는 근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큰 비중을 갖고 있다.

국민의 의사는, 개체단위로서가 아닌 집단의 형태로 조직화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된다. 정당은 대의제의 핵심 조직이며 그 주된 기능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통합(Aggregation)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상황에 있어서, 선거는 정치제도의 명분을 충족시키는 극히 말초적인 작용밖에 이룩하지 못한 것이 정치사의 단면이기도 했다.

우리는 해방후 약 20년의 기간을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의 혼란에 바쳐왔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가 과연 민주정치의 성장과, 현실적 의미에 있어서의 대표자, 또는 대변자를 선발하는데 기여해 왔는지, 혹은 그 역기능을 조성해 왔는지에 대한 논쟁은 많다.

냉정히 주시할 때 세계각국의 선거양상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신생국에서는 가끔 집권세력에 대해 정통성이나 합법성을 부여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매수, 정실, 협박, 탄압, 선동의 난무는 후진사회 선거제도의 디렘마이며, 정책이나 이정보다 감정과 분쟁에 호소할 때 문제는 심각하다.

신생국에 있어서 선거의 발전은

- ① 정치권력의 정당화
- ② 정치권력의 합리화
- ③ 정치권력의 효율화

등의 과정분류가 가능하며, 이것은 정치권력 또는 정치체제와의 관계에서 파악한 것이다.

또 일반적인 투표기준의 변화과정을

- ① 인물정향
- ② 정당정향

③ 정책 또는 업적정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투표행태의 민주성 측정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선거공약의 변천은

① 개연적인데서 구체적인 것으로

② 일반적, 사유적인 것으로부터 계수적, 물량적인 것으로

③ 과거와 현실타파에서 현실적응과 발전 지향적인 것으로

변모해 왔다. 이는 평가적도의 문제다.

말하자면 정당은 정치지도자의 후보관리조직이며 선거는 정치자원의 개발수단이다.

지도세력의 건전하고 창조적인 형성, 또는 발전지향적이고, 통일에 대비한 지도역군으로서 지도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많은 맹점을 내포한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선과 운영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선거가 대의제의 최선의 방법(The best way)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The only way)이며 후진적인 병폐의 역기능 여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제도라는 점에 고민이 있다.

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몇개의 대안을 제의해 보자.

① 이익집단의 양성적 배양

이익집단(Interest groups)의 정치적 의의는 정당기능의 보충 보완기능을 가진다는데 있다. 정당이 국민의 다수의사와 유리된 존재로 침체되어 있는 한 정당에 의하지 않는 여타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결사적 감정이나 압력단체의 기능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선거조작(Manipulation) 과정에서 국민이 독립하기 위하여 정치의식문제가 선행된다. 정치의식은 그런데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닌, 기능집단 또는 지역집단등의 집단형태에 의거한 정치의식의 성립에 단위가치가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종속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은 같이 노력해야 한다.

경제인, 종교, 문화단체, 노조, 향군, 저널리스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에 기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다양한 선거방식의 실험

선거공영제, 증선거구제, 지역, 기능대표제의 가미등 민의반영, 정치안정, 선거비용문제를 기준으로 국가단위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제도가치의 효율적인 절충을 시도해 볼만 하다.

③ 정당의 체질개선과 경쟁적인 추구 선거과정이나 선거효과의 개선은 정당구성원의 기반의 확대와 충원유형의 변경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해결의 길을 찾는 것이 좋다.

④ 사회경제적인 기본문제의 해결과 전통수립

정통정치는 그 경쟁성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지만, 제도개혁의 실현은 결국 민주주의를 안착시킬 인간 및 사회, 경제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기초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배엘리트(Ruling elite)의 신념, 행동(Behavior Pattern) 및 가치관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다.

“선거날만은 국민이 주인이다. 다른 날은 노예가 된다”라는 말은 룩소가 했다.

우리는 후진사회의 일반경향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현실속에 잠재된 개혁의 소지를 탐색해 왔다.

몇차례의 선거경험을 통해 한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았으며, 이념이나 실용, 어느 측면에서도 국민의 판단기준이, 허구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이나 국가발전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의 고려에 신중한, 실리적인 경향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이해해 왔다.

우리는 선거제도를 생각하면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제정치제도를 이식한 한국에 있어서 제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지도자의 특성과 자질이라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e. 경제발전과 인력

한국은 「로스토크」의 말과 같이 지금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

경제발전에 따른 지도세력의 육성문제는 경제활동분야에 대한 정부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로 발전지역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향을 이루고 있는 활동부문은

- ① 계획경제(Planning economic development)
- ② 정부기업(Government Enterprise)
- ③ 지역협력과 무역(Regional Cooperation & Trade)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활동은 사회체제가 정부주도형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적 배경이 상이하나,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체제의 개발」과 「경제정책의 형성」 및 「집행능력의 여하」가 대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구조의 주요측면에 종사하고 공헌할 지도요소의 부단하고 효율적인 배양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상의 경제조항과 경제계획서에 표시된 「자유경제원칙」, 「혼합경제체제」 또는 「재정금융정책의 활용」 등의 경제계획의 기본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제1차 5개년계획에서는 계획기간중 경제의 체제는 되도록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부문과 그밖에 중요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간접으로 유도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도받는 자본주의(Guided Capitalism)의 경제체제는, 구체적으로 제2차 5개년계획에 설명해 놓았다.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우리는 이러한 기본목표를 향해 안정기조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기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고, 또 오늘날 후진국이 당면한 주요문제점(Key issues)이 있다.

- (1) 서구기술의 응용에 따르는 곤란
- (2)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
- (3) 인구문제
- (4)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제적 환경

등이 저해 요인이며

- (1) 투자율의 증대 요청
- (2) 불균형 성장
- (3) 인구와 고용문제

는 후진국의 Key issues다.

현대는 Economic age다. 정치문제(Political problem), 또는 Ideology까지도 근원은 경제에 있으며 세계사는 선후진국간의 경제보완관계에 관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목표는 현실적으로 부정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소득의 증가는 복지증진의 가능성을, 소득의 분배는 복지의 현실성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상 인력계획의 요건을 유추하여 정치행태면에 대조해 보자.

사회적 배경과 정책방향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힐리아드(John, F. Hilliard)가 제의한 요건은 하이비슨(Frederick Harbison)의 의견에 비해 일반적, 기초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①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한 인력문제의 중요성을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그 시급성을 알 것.

② 정부내에 인력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적합한 조직 구조를 발전시킬 것.

③ 통합적인 인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단기적인 국가 발전상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게 할 것.

④ 그 계획을 최고정책진에서 이해하고 충분히 지원할 것.

⑤ 계획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정 보완해 나갈 것.

물론 이것은, 요건이라기 보다는 기본 전제라고 해도 좋다.

하아비슨은

① 인력수요

② 정규학교 교육제도

③ 직업훈련 및 성인교육제도

④ 유인체제와 지도계층 인력의 활용을 들었다. 그밖에 보건의 향상과 영양 문제에 관한 평가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인력계획의 절차는 접근방법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진다.

하아비슨은

① 현황분석

② 장래소요판단(추정)

③ 목표설정

등의 절차를 들었다.

또 쿠크(Lot, H. Cooke)는 총체적인 인력계획의 순서를 체제조정 관점에서 7개 단계로 기술했다.

2. 기본론

a. 먼저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구현의 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정치풍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쇄신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지도세력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다. 일인 천하라는 자유당 시대의 지도세력을 우리는 위에서 검토했다. 약제, 이질세력으로 낙인 받은 장면

정부시대를 체험했다. 비교적으로 충원양상이 호전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전 반적인 지도세력이 가진 결핍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 열을 정비하여 풍토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b. 해외교류의 증대와 인력자원의 유출방지

c. 반공지도자(교육자 포함)의 양성과 자질향상.

대공전략의 허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공이론의 개발은 긴중한 문제이다.

d. 엘리트의 충원과 유동성

e. 전전한 선거제도의 확립

f. 민주주의 전통의 쇄신

g. 정당정치의 합리적인 발전

h. 관료체제의 체질개선

i. 경제엘리트의 정치적 수용

j. 교육가치의 보장

k. 군사교육의 확대

전문교육기관 이외에도 국내의 일반대학에서의 위탁교육이나 교류장려.

l. 전문기관의 강화지원

m. 건실하고 긍정적인 미래관 구축

n. 인력자원의 수요증대

o. 통일적응의 지도능력 배양

p. 인력개발계획의 활용

q. 문화적 침체의 배제

r. 생활권의 확대

s. 발전지역에 있어서, 정치 또는 사회구조는 기능의 경제유지가 빈약한데 특색이 있다. 「기능의 분화」가 성숙돼야 한다.

행정부의 권력집중, 입법부의 실권화, 사법부의 독립성 허약을 가리켜 「에드 워드 실」은 경호민주주의의 특색이라고 했다.

한국은 부단히 성장하고 있다. 강력하고 항구적인 지도세력의 체계를 확립하여 통일과업을 완수한 다음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고 열강국의 대열에 뛰어 들자.

8. 결 론

The policies we are adopting are aimed at realizing
the promise of the rest of the 20th century

—William p. Rogers—

1. 정책원인의 발생

침략세력과의 대치, 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의 파괴, 반복하는 긴장상태, 민족분단의 비한(悲恨)!

그 속에서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불합리한 전통과 정치세계의 무서운 「미스터리」는 그러나 사회의 저변에 깊이 잠재되어 있다.

침공의 위협과 외세변천의 이상기류에도 불구하고 대공태세는 많은 허점을 들어 낸 적이 허다하였으며, 부정부패의 사회적 범람은 정치적이슈가 되었고, 정치철학의 허구성때문에 비상권의 발동과 같은 역 현상을 가끔 초래하였다. 「인플」의 부실과 「아웃플」의 대량생산, 서구풍조를 모방하는 주체의식 결여의 정신적 빈혈에 가세하여 인접지역에서 국수주의의 파도가 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급커브」를 의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외세의 압력이나 내부모순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전전한 민주사회의 전통과 발전지향의 새로운 풍조를 환기시키고, 적극적으로 지도세력을 육성, 민족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절대우세의 국력'을 배양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교통 통신의 개발로 국토는 일일생활권이 되었고 그동안 1,2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기간산업과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수출의 현저한 신장, 그밖에 눈부신 파급효과를 부산(副産)하였다. 다시 제3차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개발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인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을 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하고 외세의 혼탁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아름다운 민족고유의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여기에 지도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발생원인이 있는 것이다.

2. 정책목적의 의미

강력한 지도세력의 형성은 일조에 기약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하여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a. 건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b. 대공태세를 정비하여 c. 인력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므로써 d. 자유한국의 실력과 면모를 쇄신하게 될 것이다. f.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주도하고, g. 국토의 단위기능을 통합하여 h. 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지도개발과 그 정보의 공급을 담당하여 i. 세계와의 제휴를 강화할 것이다.

j.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국토통일 과업을 성취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며 k. 안전과 평화의 수호세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재외교포의 모국지향의 무드를 일으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후세들의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와 책임감을 키워주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어야 한다.

Millikan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회를 근대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국민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끝)

서울 성동구 천호동 133-27(7통 9반)

나 석 권(32)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수석입학

현재 2학년 재학중

★ 전직, 국가공무원 3급, 리더십 연구관

★ 국민방첩연구소 주최 삼십만원 현상논문입선

Handwritten calculations and signatures:

$$\begin{array}{r} 270 \\ 150 \\ \hline 420 \end{array}$$

$$\begin{array}{r} 41 \\ 32 \\ \hline 73 \end{array}$$

$$\begin{array}{r} 23^m \\ 46 \\ \hline 236 \end{array}$$

There are several scribbles and additional numbers below the main calculations, including a large '270' and '46'.

Periodicals

- 박동저 “발전 엘리트 정부론” 정경연구. 1967년 7월호.
 민병대 “엘리트와 리더쉽” 정경연구. 1965. 7.
 김영모 “정치적엘리트의 연구서설” 사회학보 제7집 서울 문리대 1964
 김영모 “민족주체세력의 형성과 배경분석” 정경연구 67. 4월호.
 유혁인 “박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들” 신동아 1964. 10월호
 이방석 “군부엘리트의 과제”, 사상계 1966. 3월호
 이상은 “정치중토크개조의 책임론” 정경연구 1967. 7월호.
 김채운 “대중과 엘리트” 정경연구 1965. 7월호
 문창주 “대통령론” 정경연구 67. 4
 박경석 남시욱 “한국정당의 파벌” 신동아 67. 2
 박운대 “대통령론” 신동아 67. 1
 환매호 “비전있는 지도자의 대망” 사상계 65. 1
 환매호 “한국정치지도자의 사회배경” 63. 11
 최동희 “엘리트와 가치체계” 정경연구 65. 7
 이정식 “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대학신문 71. 4. 5
 차기벽 “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대학신문

국 내 편

- 이승만 “독립정신” 4237, 6, 29간 활문사, 4282. 1월 인쇄.
 조병옥 “나의 회고록” 민교사 4292.
 조병옥 “민주주의와 나” 영신문화사
 김성희 “정당론” 1956.
 박동저 “인사행정론” 범문사 1966
 김운태 “조직관리론” 박영사 1966
 이원순 “인간 이승만” 신태양사 1965
 중앙선관위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1963.
 중앙선관위 “대한민국선거사” 1964.
 중앙선관위 “자국정당제도” 1964.
 중앙선관위 “한국정당사” 1964.
 이병도 “해방20년사” 희망출판사 1965.
 희망사 “해방십년” 4288
 홍이섭 “한국사의 방법” 집구당 1966.
 안해균 “한국정부론” 교강 노트.
 강신택 “정치과정” 교강노트
 국방부 “한국전란 4년지”
 민의원사무처 “국회보” 20보 “헌정기초당시의 회고담” 1958
 고병익 김규환, 박동저, 공저 “발전론 서설” 박영사, 1966.

외 국 편

- Harold, Lasswell, “Agenda for the Study of political elites, in Dwaine Marvie, ed., Political Decision Makers, The Free Press of gleneve 1961. pp. 274—275
- Herry J. Benda, “Non-western Intelligentsia: Political Elites”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d. J.H. kautsky N.W. Wiley, 1962.
- G. Willam Skinner, “Leadership and power in the Chinese community of Thailan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 1958.
- Robert Redfield, The Primitive world and its Transform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3.
 후진민족사회 엘리트체계의 결정요인에 관해 이렇게 지적했다.

1. All-around influence
2. Political mandate
3. Economic controll-commensurate prestige, wealth, and politico-economic power, but significantly less political authority,
4. Economic political authority-banking prestige, with wealth
5. Standing-commensurate wealth and prestige with low political authority and politico-economic power
6. Prestige-respect disproportionate to all other values
7. Wealth alone
8. Formal power-wealth and prestige not commensurate with number and importance of offices.

○ Karl A. Wittfoge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Yale University press, 1959, pp. 200—250.

전체 사회적 엘리트의 5대 분석기준을

- ① Culture
- ② Class
- ③ Interest (Power, Wealth, Respect, Skill, Enlightenment, Rectitude, Well-being, Affection)
- ④ Personality
- ⑤ Crisis 등으로 설정했다.

Baltzell Jr., Edward Digby, *The Elite and the upperclass in metropolitan America: A study of stratification in Philadelphia*, ph. D. Thesis, Columbia univ, 1953.

Almond, G.A. & Coleman, J.S. ed.,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David Truman, *Governmental process*.

V.O. key, *Parties, Politics, and Pressure Groups*.

Vernon van Dyke, *Political Science: A Philosophical Analysis* Stanford Calif, 1960.

David East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1965

Fiedler, Fred E. *Leader Attitudes and Group effectiveness*, Urbana Ill. Univ. of Illinois press 1958

Gouldner, Alvin, "Studies in Leadership: Leadership and Democratic Action." N.Y. Harper 1950.

Hagen, E.E.,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Dorsey press 1962.

Harris, Henry, *The Group Approach to Leadership Testing*,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0.

Marvick, Dwaine & Nixon, Charles, "Recruitment Contrasts in Rival Campaign Groups" *Political Decision-Makers* Marvick(ed) Glencoe, 1961.

Simon Herbert, *Administrative Behavior*, Macmillan, 1958.

China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Pardon house, New York 1969. in free china Review, Reviewed by Charles C. Clayton.

Wilson lecturer on Red china in London. "There are or at least were four principal contenders or four different lobbies.

One in his opinion has clearly lost out. Even and disgrace are not ultimately upheld, he believes Liu and his colleagues, Teng Hsiao-ping and Peng Chen are finished. Two contenders are still running Linbiao and Chou Enlai

Wilson's Comment on Lin, Moo's personal choice includes this Sentence "Lin's skills are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rather than charismatic, and he seems to have failed to take advantage of his preference—perhaps from indifferent health, perhaps from a sense of inadequacy in not having been able to rally the Army Commanders fully behind the Maoist policies

College and university 70. vol 46 p. 67. The general problem is to find away for all parties to stop dealing in stere types.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from Construction workers to corporation executives—are beginning to despise and distrust students, faculty, and administrators. Even while under attack from within as "agents of a totalitarian society"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furthering their can destruction by allowing the few ties to general society to dissolve, Increas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stand isolated, under attack from within and without on the verge of political financial

and social reprtsal.

Public opinion quarterly 1970 Spring p. 32

① 中共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위협에의 평가.

② 미군 및 asia에 있어서의 Supply base가 되는 위치로 부터 이탈하기 위한 욕망

① Japan already is one of the most advanced nations and could produce Nuclear arms even today

② Article Nine of the constilution, which now prohibits Japan from any armament, will be amended by the time Japan becomes ready for its nuclear arms production, so that nuclear armament can proceed constitutionally.

③ Feare of nuclear ams incited mainly by atom bombs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will gradually dieaway as time passes and has new generations of the Japanese, who has no experience with war, replace the older generations and become a majority in Japanese Society

Japanese Attitudes toward nuclear Arms. Yasumaso Tanaka in public opinon Quarterly 1970. Spring pp.274

Motivations for nuclear arms Production

1. 외부로부터의 핵위협 특히, 중공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한 일본의 자위를 위한 필요의 증가
2. 일본은 중공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
3. 일본이 미국의 Military umbrella로부터 나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
4. 핵무기는 군 Self Defense Forces를 강화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5. As nuelear proliferation progresses. Psychological resistance against manufacturing nuclear weapons will be Subdued among the Japanese, provided that there is an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ir actual use
6. In a not-so distant future, There will be an unwilling but universal acceptance of the Place-through-nuclear-ams" doctrine in the world as an inevitable consquence of continued nuclear proliferation, The future international non proliferation agreements에 대해서는 grim, Pessimistic eyes. relative persistense of Political belief Systems에 관한 empirical Political theory에는 2개 핵파가 있고 그들간의 유연한 의견대립은 elitist는 only the better educated and politically aware in American Society, i,e The articulate elite have what might be called. a consistent political ideology or Political belief System, this Camp에서는, Converse, Mcclosky와 Himmelstrand가 Populist는 Virtually all men have political belief systems since such beliefs are internalized early in life with us, in one form or another, whether or not they can be articulated,이 Camp에서는 Lame Lasswell 또는 Rogow 등의 Investigator가 있다.

Steven R. Brown "Consistency and the Persistence of Ideology: 1970.

- Rufus Browning. "Business Politics" Motivation and Circumstances in the Rise of power" Yale 1960. p.2

정치적의식이 generation에서 generation으로 전승된다는 사실은 전체주의 국가에나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나 뚜렷한 Socialization의 Channel이다.

양친의 직업을 계승한 자손의 경우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과 역정까지 전승하는 경우의 현상

- Talcott Parson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Haward. 1951. pp. 17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전 세대의 문화에 대한 특징적인 행동을 체득함으로써 그것을 일반화하는 Socialization Process를 거쳐 모든 행동, 사회성격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굳게 잔류하게 된다.
- C.H. Cooley. Social organization 1907. Chap III.

Primary Group으로서의 가족이 친밀성, 면접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 부모의 Personality 상관관계는 높은 순관계(B.W. Hatuick, Child Development 1936. p.50 0.42~0.65)

A.L. Bolduin et, al Patterns of Parent Behavior. Psychol, Monog. 1945. Vol. 58, p.3

고경자, 부모의 태도에 따른 자녀의 성격형성, 청파교육 제6호, 1966, pp. 21-30

부모의 전체적 태도에 의한 아들의 제성격적 변인과의 상관도는 general activity 0.22 Dominance 0.03 Emotional Stability 0.16, Impulsiveness 0.16. Masculinity 0.05, Objectivity 0.25 Reflectionness 0.12 Socialility 0%로서 아버지의 전체성은 아들의 정서적 안전성과 객관성에 역상관이다.

아버지의 전체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객관적태도가 빈약하다.

한국의 경우는 아이가 처리 할수 있는 일은 조력해주고 극적으로 보호하는 형인 탐기형아이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않고 명령과 지시에 의해 억압적으로 굴종시키려고 하는 전체형 부모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적응하고 가정은 양육방식이 일관성이 없고 아이가 싫은 것을 극성으로 표시하는 거부(拒否) 형이 대부분의 유형이다. 자발성, 독점성의 약화, 내향성, 공격성, 비사회성을 갖게했고 전체형으로부터 순종 예의 수치감을 갖게하고 반항적 지배력등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형성.

Voluntary Groups와 Latent Socialization의 문제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Oxpord University press 1947. pp. 356-392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본질연구로 엘리트 선택이론에 기반을 제공, 즉 사회의 기능적 요구가 지도자의 충원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사회 문화적 격동기에서 가치체계의 카오스가 야기되고 동시에 발달도상 국가에서 사망감에 몰타있고 대중적 매력을 갖춘인물이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충성심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활거하게 된다.

Harold lasswell, Power and Personality, N.Y. LW. Norton 1948 p. 22.

정치적타입의 기본적 특성은 타인과 비교하여 인간 내부의 제가치중 권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Power accentuation Hypothesis.

W. Lloyd Warner Paul P. van Piper, Norman H. Martin and Davis. T. Collins, "The American Federal Executiv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ok 1963. p.27.

Rufus P. Browning and Herbert Jacob. "Power Motivation and the Political Personalit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XXVIII Spring 1964, p. 75

Lester W. Milbrath "The Washington lobbyist, Chicaco, Rand MC Nally. 1963. p.108.

Warner 미국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The matic Apperception Test(주제 해의 테스트)

Browning 연구

어떤 권력 친선관계,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도 정치아들을 타부문으로부터 명백히 구별짓지 못하고 있다. 모 집단인 전 정치인들이 동일한 정도의 권력동기도 갖지 않았고 개성의 특징에 있어, 일반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개성이 정치가들사이에 보여지는 자기선택의 경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독특한 형의 사회적 경험이 미칠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배자가 없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한다. (한츠켈젠의 말)

정경연구 71.3 이택휘 엘리머시즘과 민주주의

Ruling elite의 문제로 집약- 지배자 형성 특히 북대서양 정치체제와는 엘리트신분의 속성을 설명하는 일반론적 정의

J. Dunner 편찬 정치학 사전

"엘리트란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한 사회안에는 지식 권위 부 등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함에 따라서 여러부류의 엘리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는 주요한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많은 몫을 차지한 인간들을 뜻한다"

개념규정을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Constantine Menges, Ruling Elite Theory and research Methods An Evaluation 1968 pp. 2-9

라스웰, 러너 공저 「세계혁명 엘리트론」에서

"엘리트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실력자"

"지배계급의 저편"의 저자 S. Kellor는

"엘리트는 어떤 방법이건간에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방법에 의거해서 전체에게 봉사하는 소수의 개인집단이며 다수에 대해 영향력을 구사하고 동시에 책임을 지는 소수의 유력집단"

이 지배엘리트 내지 지배계급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개의 경향으로 분류할수 있다.

1은 한 사회에 있어서 특성의 소수인 집단이 의도적으로 그사회를 지배

그는 지배의사 형성이 부류이 주요사회집단에 소속된 소수인류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모스카의 이론에 따르면 마키아벨리나 생시몽의 지배계급관이 이러한 두번째의 경향에 속한다고 한다.

○ Harold Casswell. D Lerner C.E. Rorthwell, The Comparative Study of El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2.

○ Kenneth Previtt, "Political Socialization and Leadership Selection" The Anals,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September, 1955.

○ C.W. Mills the white Color p. 73

E. Fromm; Escape from freedom 1941. pp. 43-45

D. Riesman. The Lonely Crowd, Yale University Press, 1962. pp. 17-23. pp.126-137

White Color의 범주는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중간 봉급생활자의 총칭, 경영기술자, 하급관리자, 전문직 피고용자, 사무원, 판매인등을 포함 신중간계층구성, 그 가치체제와 태도에 관해 Riesman은 The lonely Crowd에서 Other-directed Type로서 표현했다.

Mills은 기업체 자체의 권위를 사용, 임금노동자보다 높은 권위를 요구하고 교양, 의견스타일, 문화적 취미가 세련되고 고위경영층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 심리적으로 노동자와 구별하고 있다(스스로) 매스프로덕션과 P.R이 신중간층의 소비 욕구를 자극시켜, 그들의 욕구불만과 초조감을 완화시키고 노동운동, 정치활동에 무관해지는 중에 권력이 굴종하는 예측적 퍼스날리티화 되고 아부와 안일 경향을 갖게된다.

안정위주-자유로부터의 도피-권위지향의 인간형이 된다.

Barber, Social Stratification. pp. 87-83

Bredemeise and Stephenson, The Analysis of Social Systems, 1962 p. 333 참조.

계층형태는 4개이념형이 있다.

- ① 완전성층형(성원이 전부--직선상에 상하배열)
- ② 완전평등형(획적으로--유사위치)
- ③ 부분성층형(상층이 적고 중간이 좀 많고 하층이 가장 많음)한국
- ④ 부분평등형(현대 대중사회에서 중간층이 비대, 상하층이 적은)

Leslie Lipson, "The Great Issues of Politics, an Introduction to politics, Prentice-Hall, 1954. 1960. Chap IV

귀족정치이론과 선민통치옹호론의 2개 문제를 구분

- ① 소수자가 다수자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을 정당화하는 요소.
- ② 사자를 양떼로부터 분리시키는 수단과 기준으로서 인종, 가문, 연령, 성별, 종교, 군사력, 문화, 부, 지식의 9개 요소를 제시

(선택된 소수와 피지배자인 다수의 구별은 9개요소의 우월과 열등을 기초로 양분된다는 것이다)

- 1. 우선적요인
- 2. 열성적요인

James S. Coleman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ewjersey 1965 pp. 10-15

교육은 중대한 결정요인이다.

현존 사회 및 정치구조상 엘리트계층에 가입하려는 Aspiring Elite를 위한 최선의 엘리트 Track 이다 Educational factor는 엘리트 그룹의 공동목표에 대한 Consensus를 달성하는데 기초가 되며, Pluralistic Group life의 Training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당당한 집단적응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며 기회균등 노력과 동기부여를 통해 Closed Recruitment를 지양하고 Open Recruitment를 지향할수 있게 한다.

특히 Developing Area에서는 직업성공, 고액수입, 사회적신분과 위신을 제공, 근대 achievement orientation Society에서는 Social change의 주요요인으로 된다.

미국의 P.M.E 기관은 합참본부소관과 작군성소관으로 대별되며 이외에 연합국에 있는 유사수준의 학교에 유학을 하기도 한다.

○ Senior officer level PME Schools

A. Joint's Schools

- 1) National war College
- 2) Industrial College of the Armed Forces

B. Serrvice's Schools

- 1) Army War College
- 2) School of Naval Warfare, Naval War College
- 3) Air War College, Air University

C. Allied Schools

- 1) Imperial Defence College (England)
 - 2) Canadian National Defence College
 - 3) NATO. Defence College
 - 4) Inter-American Defense College
 - 5) RAF College of Air Warfare (England)
- Intermediate officer's Level P.M.E. Schools.
- 1) Armed forces Staff College (Joints School)
 - 2)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Service's School)
 - 3) School of Naval Command and Staff, Naval war College (")
 - 4)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
 - 5) Marine Corps Command and Staff College (")
 - 6) UK Joint Services Staff College (Allied School)
 - 7) RAF Staff College (")
 - 8) Canadian Forces College (")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

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방향

노 화 준

목	차
1. 서론	5. 이질적인 남북한 사회문화의 형성
2. 문화의 형태 및 문화동태의 결정요인.	6. 단일문화권 형성 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 방향
3. 한국의 문화적 배경	7. 결 론
4. 남북한 사회의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변동	

1. 서론

단일 민족, 단일 문화의 단일 국가였던 한국이 1945년 미국과 연합국의 두 의세에 의하여, 일제 통치의 굴레를 벗게 되므로서 이들 두 외부 세력의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민족과 국가 분단의 비극을 당하게 된지도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이로 인하여 남북한 사회¹⁾, 문화의 이질적 요인은 누적되어 왔다.

따라서 문화적 통합에 의한 사회체제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한 단순한 물리적 또는 정치적인 방법에 의한 국가 통일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 할수 없을 것이며, 단합한 힘에 의한 한국 민족의 번영과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통일의 전제로서 문화적 통합의 중요성이 가중되는 소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통합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은 단순히 국토 통일 이후의 국가 민족 발전이란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통합 여부가 민족 통일을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통일 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사회의 단일 문화권 형성 유지는 통일을 촉진 시키는 하나의 구심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통일후의 민족사회 통합의 기반이 되어 민족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1. 여기서 사용되는 남한과 북한의 용어는 순수한 지역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가속적으로 이질화 되어가는 남북한 사회를 하나의 단일 문화권으로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은 과학적인 분석에 그 기초를 두고, 그리고 사회적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²⁾

본 논문은 문화 동태와 그 결정요인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여기에 비추어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상황의 특성과 문화 동태 결정요인의 특성을 분석 도출하고 이들의 변동 방향을 전망하며, 나아가서는 한국의 사회적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에 비추어 평가 하므로써 남북한 사회의 단일 문화권 형성 발전을 위한 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문화의 형태 및 문화 동태 결정요인

1) 문화의 개념과 그 형태

문화(Culture)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이나, 문학 또는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등에 따라 그 용법이 일정치 않다.

한편에서는 정신적 현상에만 국한하는 개념으로 사용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소산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 되기도 한다.³⁾

여기서는 문화를 행위체제(Action System)의 하위체제의 하나인 문화체제(Cultural System)로 파악 하고자 한다. 즉, 행위체제의 하위체제는 「퍼스널리티」 체제, 문화체제 및 사회체제로 구성되어 있고⁴⁾, 문화체제는 행위자가 선택할 때 그 안내 역할을 해주고, 타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할때는 그 유형을 한정시켜 주는 가치관, 규범, 「심볼」등으로 구성된 질서를 가진 조직체이다.

2. Yehezkel Dror, Public Policy Making Reexamined,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68. Chapter 15.

3. K. W. von Humbolt 를 비롯한 독일의 문화사회학자들은 문화(Kulture)를 학문, 예술, 종교등과 같은 내적생활의 발달인 정신문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문명은 식산공업, 법률제도등과 같은 외부생활의 발달인 물질 문명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문화와 문명을 정신·물질 양면으로 명백히 구분하였다.

이에 비하여 C. Wissler 는 문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문화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협의로는 우월(Superiority)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상, 학술, 예술의 전부에 적용될 수 있는 생활의 양식(The Mode of life)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 하였다. 김학업, 정재자, 세계문화사, 일신사, 1965. pp. 15-17.

4.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The Free Press, New York, 1966. pp. 3~23.

인간의 상호작용에는 어떤 역할 기대(role-expectation)가 있으므로 사회 체제 기본 단위는 역할(role)이며, 인간의 「퍼스넬리티」는 역할을 규제하고, 문화체제는 다시 「퍼스넬리티」체제를 규제하므로써 사회체제와 관련되어 있다.⁵⁾

이와같이 사회 성원의 반응양식에서 관찰된 관측성 혹은 규칙성의 경향을 의미하는 문화⁶⁾는 「퍼스넬리티」체제를 규제하므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문화체제는 다시 그 기능에 따라서 용구적 문화, 규범적 문화 및 관념적 문화로 구분된다.⁷⁾

용구문화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수단이고, 규범문화는 절차이며 관념문화는 목표를 제공한다.

용구문화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자료의 획득에 필요한 방편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문화로서, 대체로 자연물 이용의 효용성에 관계되는 도구, 기계 기술(Technique), 「테크놀로지」 및 과학적 지식 등이 포함된다.

규범적 문화는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행동의 기준에 관한 문화로서 민습적 규범, 원규적 규범, 법률적 규범, 도덕적 규범, 등이 포함된다.

한편 관념적 문화는 사회체제의 유지 존속을 위한 평가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정신문화의 총칭이며, 합리적 체제, 신념적 체제, 사회적 사상체제로 구분된다.⁸⁾

합리적 체제는 지식, 기술, 과학 등의 통제상의 방법이고, 신념적 체제는 종교 의례, 신화, 민습 등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로서 적용할 수 없는 환경 부문에 대한 통제상의 방법이며, 사회적 사상(이데올로기)은 특정 가치체제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성원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동기 지어주는 논리적인 체제이다.

이상에서 문화체제를 크게 용구적, 규범적 및 관념적 체제로 분류하고, 각각의 존립 형태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문화형태의 분류는 모든 사람의 일치된 견해라 할 수 없을 지라도 앞으로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유용한 분류 양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 문화형태의 결정요인

문화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동태적인 것이다.

5. Ibid, pp. 3—23.

6. C. Kluckhohn, The Study of Culture, in Policy Science, D. Lerner and H. D. Laswell, (ed.), 1951. p. 86.

7. 고영복, 사회학요론, 민조사 1968. pp. 62—78.

8. H. Bonner, Social Psychology, 1953. p. 225.

왜냐하면 문화란 한편에서는 행위자가 지향해야 할 표준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행동의 대상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 내용의 변동과 그 상황이 끊임없이 변동되어 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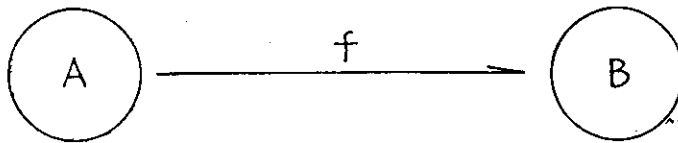
그러면 문화 동태의 결정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서는 지리적 요인, 인종적 요인, 인구적 요인, 기술적 요인, 사회제도적 요인, 외부상황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지리적, 인종적, 인구적, 외부상황적 결정요인들은 그 자체가 문화의 일부는 아니면서 문화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기술적 요인과 사회제도적 요인은 그 자체가 문화의 범주에 속하면서 다시 문화 변동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화동태의 결정요인과 문화변동과의 관계를 도식하면 다음<도표 1>과 같다.

<도표 1>



단, A; 초기의 문화체제(집합)

B; 변동후의 문화체제(집합)

f; 문화동태의 결정요인(문화전이함수)

<도표 1>에서 초기의 문화체제 A는 다시 용구적 문화 A_1 , 규범적 문화 A_2 , 관념적 문화 A_3 로 구분되고, 후기의 문화 B는 용구적 문화 B_1 , 규범적 문화 B_2 , 관념적 문화 B_3 의 하위체제로 구성된다.

용구적 문화 집합 A_1 을 다시 이를 구성하는 단위 요인인 도구, 기계, 기술, 「테크놀로지」, 과학적 지식 등을 $a_{11}, a_{12}, a_{13}, a_{14}, a_{15}$ 로 표시하면 $A_1 = \{a_{11}, a_{12}, a_{13}, a_{14}, a_{15}\}$ 로 표시할 수 있고, 규범적 문화 집합 A_2 는 민습적 규범 a_{21} , 원규적 규범 a_{22} , 법률적 규범 a_{23} , 도덕적 규범 a_{24} 등으로 표시하면, $A_2 = \{a_{21}, a_{22}, a_{23}, a_{24}\}$ 로 표시된다.

관념적 문화는 합리적 체제 요인, 신념적 체제 요인, 사회적 사상 체제 요인을 a_{31}, a_{32}, a_{33} 으로 표시하면, $A_3 = \{a_{31}, a_{32}, a_{33}\}$ 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초기문화는 $A=A_1 \cup A_2 \cup A_3$ 로 표시되며, 변동후의 문화도 같은 방법으로 $B=B_1 \cup B_2 \cup B_3$ 로 표시되는 것이다.

문화전이함수 f 는 지리적 요인 f_1 , 인종적 요인 f_2 , 인구적 요인 f_3 , 기술적 요인 f_4 , 제도적 요인 f_5 , 외부 상황적 요인 f_6 등으로 표시하면, $f=\{f_1, f_2, f_3, f_4, f_5, f_6\}$ 로 표시된다.

이제 문화전이함수 f 가 초기의 문화체제 A 에서 후기의 문화체제 B 로 전이 시키는 과정에서 각각의 하위문화체제에 어떠한 비중으로 작용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 행렬을 보기로 한다.

<표 1>

하위문화체제와 전이함수의 상관표

하위문화체제 전이함수	용구적문화 (A ₁)	규범적문화 (A ₂)	관념적문화 (A ₃)
지리적 요인 (f ₁)	R ₁₁	R ₁₂	R ₁₃
인종적 요인 (f ₂)	R ₂₁	R ₂₂	R ₂₃
인구적 요인 (f ₃)	R ₃₁	R ₃₂	R ₃₃
기술적 요인 (f ₄)	R ₄₁	R ₄₂	R ₄₃
제도적 요인 (f ₅)	R ₅₁	R ₅₂	R ₅₃
외부상황적요인 (f ₆)	R ₆₁	R ₆₂	R ₆₃

<표 1>에 나타난 상관계수 R 은 어떤 문화전이함수가 어떤 하위문화체제 변동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관계수를 엄밀히 도입할 수 있다면,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위문화체제에 따라서 전이함수 선택에 의한 문화변화 유도 전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이함수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시대 및 사회에 따라 그 상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리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적 힘이나 정신활동, 건강 등에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지역은 노동을 결정하고 노동이 가족 형태를 결정하며 이것이 다시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환언하면 지리적 요인이 용구적 문화의 소재를 제공하고 용구적 문화에의 영향을 통하여 다른 종류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⁹⁾

한편 인종적 요인은 그 사회의 구성분자인 인간요인으로서 그들의 가치성향 사회에 지배적인 「엘리트」의 구성 방법 등을 통하여 주로 관념적 문화, 규범적 문화를 결정하고 다시 용구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9. 고영복, 전계서, pp. 79-80.

인간요인의 가치성향은 문화의 수용, 문화의 창조를 가져오는 주체일뿐 아니라 그 사회의 계층조직을 통하여 어떠한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 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그 사회발전과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의 가치성향은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Kluckhohn의 분류에 따르면¹⁰⁾, 인간의 본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활동 양식, 인간 관계, 인간 생활의 시간 초점 등에 따라 한 사회의 지배적인 인간의 가치성향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문화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환언하면,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성향이 자연에 대하여 굴종적이냐, 조화적이냐, 정복적이냐; 인간활동이 존재에 중점을 두느냐, 생성에 중점을 두느냐; 인간관계가 종적이냐, 횡적이냐, 개인주의적이냐; 또 시간차원에 있어서 과거지향적이냐, 현재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 하는데 따라 그 문화 유형이 각기 달리 나타나게 됨과 동시에 그 사회발전이 결정케 된다.¹¹⁾ 또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지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는 그 사회의 가치지향을 달리하는 제 집단의 투쟁과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하거나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가치성향을 가지고 출현하는 집단은 그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념적, 규범적, 문화를 창조하거나 외래문화를 수용하려 하는데 반해서 구세력집단은 이에 반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관념적, 규범적 문화를 창조하거나 기존 문화를 재구성하게 된다.

기술적 요인은 용구적 문화에 영향을 미치므로서 규범적 문화와 관념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18세기 후반기의 산업혁명, 19세기말의 전기동력의 출현, 20세기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출현과 「오토메이션」(automation)은 이것이 용구적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 시키므로서 인간의 사색의 시간을 증대 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의 사고 영역을 확대하고,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을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전파에 영향을 미쳤고, 과학적 지식과 사상은 관념적 문화, 규범적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사회제도적 요인은 정치제도, 경제제도등 한 사회의 규범적 문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인간의 행동화 방법을 명시 하므로서 용구적 문화와 관념적 문화에 영

10. F.R. Kluckhohn and F. L. Strodtbeck,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New York, Row, Peterson and Company, 1961. pp. 10~47.

11. Joseph J. Spengler, "Theory, Ideology, Non-Economic Value, and Political Economic Development," Ralph Brailibanti and Joseph Spengler(ed.), Tradition, Values and Social Economic Developmen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61.

향을 미칠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Social Tecknology)로서의 제도는 사회활동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결정 하므로써 문화 발전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경영제도, 새로운 행정제도의 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 시키므로써 새로운 문화 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은 이것을 반영해 준다.

이상은 주로 사회체제의 내적 요인이나 사회체제의 외적 요인으로서의 외부상황적 요인 또한 한 사회의 문화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 사회체제가 접촉하는 타 사회체제의 용구적, 규범적, 관념적 문화는 이의 모방을 통하여 또 외래문화의 영향을 통한 문화의 재구성을 통하여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이러한 문화외적인 사회체제 외부의 상황적 변화가 한 사회체제 내의 문화변동 요인 자체를 변화 시키므로써 단일 문화권 형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적 변수가 된다.

3)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변동

남북한 단일 문화권 형성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은 위에 말한 제 문화 결정요인을 어떻게 조작, 변형시키느냐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변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 어느 시점의 문화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인 현 시점의 문화와 제 복합적인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화형태가, 또 한편으로는 문화동태의 결정요인이 단일 문화권 형성을 위한 전략 변수가 되는 바 그 중점은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변동 조작에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단일 문화가 상호 이질적인 두개의 문화권으로 형성, 발전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조작이 단일 문화권 형성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문화동태의 결정요인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나 분석의 편의상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독립된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가정하고, 두 사회의 문화동태 결정요인을 각각 $F_1 = \{f_{11}, f_{12}, f_{13}, f_{14}, f_{15}, f_{16}\}$, $F_2 = \{f_{21}, f_{22}, f_{23}, f_{24}, f_{25}, f_{26}\}$ 라 하면 단일 문화권 형성의 조작적 변수는 그들의 상관 정도(상관계수 R)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된다.

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은 유교 및 불교사상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엄격한 봉건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신분 계급은 계속 유지 강화되어 유·불교의 사상은 도덕, 민습, 원규, 법제등 사회규범적 문화의 기반이 되어 왔다.

불교 및 유교사상은 물질적인 진보는 도리어 인간의 지와 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 되었다.

지배층은 질소와 검박으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고 국가정치도 그런 방향으로 행할 것이 요구 되었다.¹⁵⁾

이러한 물질경시의 사상은 정책면에서는 본농억공상(本農抑工商)으로 나타나 상공업은 다른 어느 사회에서 보다는도 천시되고 억압되었다.

이러한 상공인에 대한 천대와 억압은 단순히 사상적, 감정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신분, 법제등 정책면에도 뚜렷이 반영 되므로써 상공계급이 큰 세력으로 대두하지 못하게 된 근인이 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형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민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내적으로 상품의 유통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상품생산을 위축 시켰으며 생산, 기술의 발전을 막아 기술, 「테크놀로지」, 과학적 지식등 용구적 문화의 발전을 저해 시켰다.¹⁶⁾

이러한 용구문화의 발전의 저해는 역순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

첫째, 국민의 독창적 재능을 육성 발전 시키지 못하였고, 창조적인 업적(예컨대 금속활자의 발명, 한글의 창안, 거북선의 발명, 고려 청자기의 제조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활동은 확대 재생산에 뜻이 없는 무력한 지배계급의 수중에 강력히 독점, 통제 되므로써¹⁷⁾ 대다수의 국민은 노예적 위치로 전락되었고, 저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 및 「테크놀로지」는 국민의 「에너지」 수준을 저하 시키고 비효과적 활용체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국민적 「에너지」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새로운 생산조직, 경제제도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근대화를 촉진시킬 시민 계급의 형성을 이룩하지 못하고 민족발전의 주체 세력 출현의 기회를 박탈

15. 고병익, "유교사상의 진보관", 아시아의 미래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pp. 30~31.

16. 유·불교의 물질경시의 정신과는 대조적으로 금욕적 「프로테스탄트」의 기업가 정신이 서구사회의 물질문화를 발전 시켰다는데 대해서는,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17. 이철원, 조선사회사독본, 동경, 맥양사, 1936, p. 154.

하여 새로운 정신문화 발전의 소지를 얻지 못하였다.¹⁸⁾

넷째, 저수준의 기술과 과학적 지식 및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용구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므로서 18세기 서구의 산업혁명이나 그 후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발전이 사회사상 발전에 미쳤던 것과 같은 관념문화의 재구성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였고, 이로서 새로운 사조의 출현을 보지 못하게 하여 기존의 관념문화를 더욱 견고히 고착 시켰다.

3) 결론적으로 「헤겔」의 변증법적 문화 발전 논리에 비추어 볼때, 한국적 유불사상(儒佛思想)은 그 폐쇄성과 배타성 및 사회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립되는 「안티·테제」의 형성 발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고, 따라서 「신테제」(종합)의 제3단계로 발전 시키지 못하는 정적 사회문화를 형성하였다.

한편 물질적인 하부구조의 변증법적 발전이 관념적인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소위 「마르크스」의 논리에 비추어 볼때에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새로운 용구문화 발전의 소지가 말살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용구문화 형성은 거의 불가능 하였으며, 이로써 관념적 문화 변동을 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회상황은 일제의 침략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또한 의세에 의하여 일제의 통치를 벗어남과 동시에 남북한으로 분단되고, 여기에서로 상이한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작용을 받으면서 2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 이제는 각기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4. 남북한 사회의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변동

전항에서 고찰한 한국 문화의 특성은 남북한 사회의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변동에 따라 각기 이질적인 문화체제로 형성되어 왔는데, 본항에서는 주로 이러한 문화전이 함수가 어떻게 상이하게 변동되어 있는가를 각 전이함수별의 이질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지리적 결정요인

지리적 요인은 다시 (1) 지구상의 위치, (2) 지세, (3) 기후, (4) 자연자원 등

18. W.W. Rostow: 근대화를 위한 도약단계 실현 원인의 하나로서 경제의 근대를 증대 하고도 고차적인 정치과제로 삼으려는 엘리트 집단에 의한 정권장악을 들고 있는바 이러한 경제적 발전에 의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형성과 국민 「에너지」 축적은 새로운 정신문화 형성의 기반을 제공케 할 것이다.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 10

으로 구분 되는데, 남북한 사회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는 주로 지세와 자연자원상에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평야가 적고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남한은 농업, 북한은 공업발전에 더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북한에서 전전력의 92%, 전광산자원의 70% 이상이 분포되어 있어 북한은 사실상 전 중공업의 79%, 전 공업의 59.3%를 점유하고 있었다.

19)

이러한 지리적 결정요인은 타 문화동태 결정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한을 농업과 소비재공업사회로 발전시켜 점차 중화학공업 사회로 발전 시키는데 비하여 북한은 처음부터 중공업이 발전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결정요인상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남한에 농업과 경공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고 북한에는 중공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 주로 용구적 문화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

2) 인구적 결정 요인

인구적 요인은 다시 (1) 인구의 밀도, (2) 인구 분포 양식, (3) 인구성장형 (4) 연령 구성비 등으로 대분하여 비교할 수 있으나, 자료상의 제약으로 여기서는 인구 분포의 양식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인구 분포의 변동은 출산과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데, 인구의 사회적 이동면에서 볼때 남한의 인구 이동이 개인의 주체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비해서 북한은 북피의 인적자원 분배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²⁰⁾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도시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빨랐는데 비해서, 1960년대 이후에는 남한이 도시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나 전체적으로 볼때는 북한의 도시화율이 더

19. 이만기, 한국경제론, 일신사, 1968. pp. 122—123.

남북한의 발전 비율(1945년)

		출력(KW)	비율(%)	년평균발전량(KW)	비율(%)
남	한	206,290	14	79,500	8
북	한	1,262,500	86	999,200	92
합	계	1,468,790	100	988,700	100

20.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감, 1968. p. 36.

높다.

<표 3> 남북한 인구의 도시, 농촌별 구성의 변동(단위: %)

구분 년도	남 한		북 한	
	도 시	농 촌	도 시	농 촌
1965	24.6	75.4	29.0	71.0
1960	27.9	72.1	40.6	59.4
1967	33.6	66.4	47.5	52.5

주 * 북한은 1956년도임.

** 남한은 1966년도임.

자료 ① 북한총감,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p. 36.

② 남한은 내무부, 도시통계년감, 1968 및
경제기획원, 통계년감, 1968에 의거작성.

이러한 도시화는 국민생활의 양식,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표출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²¹⁾, 이러한 가치의식은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됨을 고려할때²²⁾, 우선 도시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를 그 기능에 따라서, (1) 경제도시(1차산업도시, 제조공업도시, 상업도시, 교통도시, 경제서비스도시), (2) 정치도시(행정도시, 군사도시), (3) 문화도시(교육·종교도시, 일반문화도시), (4) 오락도시, (5) 주택도시, (6) 상징도시, (7) 기타도시로 분류해 보면²³⁾ 남한은 주로 경제도시, 정치도시, 문화도시, 오락도시 및 주택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북한은 경제도시, 정치도시적 성격이 강하다.

상술한 남북한 도시의 기능상의 차이에 따라 남한에 있어서는 지식, 기술등 용구적 문화 변형과 아울러 외래문화에의 노출도의 증대, 메스컴등의 영향으로 근대적 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작용하여 규범적 문화, 관념적 문화에도 크게 작용하였고, 특히 교통, 통신 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도시문화의 농촌지역에의 전파가 비교적 빠른데 비하여 북한은 도시주민이 주로 노동에 종사하므로써 용구적 문화의 변동에 그 작용이 한정되는 것이 특징이다.²⁴⁾

21. Daniel Lerner, The Passing of the Traditional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pp. 58~59

22. C. Morris, Varieties of Human Val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pp. 67~68.

23. 이러한 도시의 분류는, E. Bergel, Urban Sociology, 1955, pp. 150~152.

24. 1960년말 북한의 사회계층별 분포를 보면, 노동자 38.3%, 사무원 13.7%, 농업협동조합원 44.4% 협동수공업자 3.3%, 기타 3%로서 도시주민은 대부분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전기 북한총감, p. 35.

3) 인간적 요인

인간적 요인은 그들의 욕구체제에 의해서 문화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McClelland 는 인간의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를²⁵⁾, Hagen은 “혁신적 「퍼어스낼리티」”를²⁶⁾ 문화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드는등 논자에 따라서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요는 인간이나 집단의 정신태세(Mentality) 혹은 정신풍토(Mental climate)등 심리학적, 문화 인류학적 개념인 가치관, 태도, 성격 창조성이 문화변동을 결정하는 인간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화동태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간적 요인을 주로 가치지향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한국인의 가치관은 씨족관, 고용관, 취직관, 재산, 사회계층관, 지연관 등을 통해서 볼 때,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입각한 씨족관을 중시하고, 이동성있는 자격자보다 이동성 없는 겸손한 자(자격이 좀 떨어지지만)를 고용대상자로서 더욱 환영하고, 취직선택에 있어서는 금전적 실현 보다는 명예와 신분을 더 고려한다. 또 재산관에 있어서는 재산의 확장 증대보다는 그 보존에 더 가치를 두고 있으며 아직도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는등 전근대적 가치의식이 상존하고 있다.²⁷⁾

한편 문화변동은 그 사회성원이 국가발전의 영역을 어떻게 구상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영역의 결정은 사회성원의 욕구의 구상과 관련되어 있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발전에 대한 사회성원의 욕구변동을 보면<표 4>에서 보는

<표 4> 한국 국민의 욕구변천 (단위 : %)

구 분	정치행정	경 제	사회·문화	기 타	계
제 1 공화국	45.5	16.3	5.9	32.3	100.0
제 2 공화국	6.2	60.1	5.6	29.1	100.0
제 3 공화국	14.7	54.0	6.1	25.2	100.0

자료 국제문제연구소, 연구논총, 제 9호, 1970. p. 77.

25. David C. Mc Clelland,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D. Van Nostrand Company, 1961. p. 36 또는 “The Impulse to Modernization,” Modernization Myron Weiner (ed.), The Dynamics of Growth,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s, 1966. pp. 29~40.

26. Everett E. H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Homewood, Illinois: The Dorsey Pres, 1962. Chapter. 5.

27. 홍승지, “경제발전과 가치관의 문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발전론서설, 박영사. 1966. pp. 102~103.

28. 정범모, “국가발전의 문제와 인간요인”, 발전론서설, 박영사. 1966. pp. 20~22.

바와 같이 1950년대에는 정치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집권「엘리트」집단의 이념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1950년대에 비해서 1960년대에는 경제발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한국집권「엘리트」집단의 관심도 변동 (단위 : %)

구 분	외교국방	경 제	사회·문화	정치·행정	기 타	계
제 1 공화국	32	35	8	12	10	100
제 3 공화국	15	50	12	6	17	100

자료 노화준, “한국공업화과정에 있어서 「엘리트」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 7권 제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9, p. 132.

따라서 남한에 있어서는 사회성원이나 지도층의 욕구는 경제적 발전에 더 큰 비중이 있으며, 이는 문화변동에 있어서 관념적 문화 보다는 용구적 문화변동에 더 큰 작용을 하여 규범적 문화와 관념적 문화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북한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보면 국방과 사상면이 가장 강하며, 그 정도에 있어서는 청년층보다 소년층이 더 강하다.

<표 6> 북한 청소년들의 관심도 (단위 : %)

구 분	경 제	국방(통일)	사회·문화	사상(김일성 관양 포함)	기 타	계
청 년	24	34	6	33	3	100
소 년	7.4	31.5	1.9	48.1	11.1	100

자료 국제문제연구소, 연구논총, 제 9호, 1970, p. 82.

이에 비해서 북괴 지도집단의 관심도의 변천은 <표 7>에서 보는 바와같이 경제적 관심도가 강하나 상대적으로 볼때 점차로 사상과 외교 국방면의 관심도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표 7> 북괴 지도집단의 관심도 (단위 : %)

구 분	경 제	외교·국방	사회·문화	사 상	기 타	계
1 9 6 4	53.9	21.4	3.9	15.1	5.7	100
1 9 6 7	41.2	28.0	4.3	22.3	4.2	100
1 9 7 0	26.9	27.6	11.6	30.4	3.5	100

자료 ① 1964년 및 1967년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논총, 제 9호, 1970, p. 80

② 1970년은 1970년 11월 2~13 북괴노동당제 5차대회, 북괴 김일성의 “정강연설”, 노동신문, 1970, 11.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괴 지도집단의 삼대 주요 관심도는 경제력 증강, 외교, 국방력 강화 및 사상 무장인바, 1965년대 이전에는 경제 재건을 위시한 경

체력 배양에 노력 했으나, 1965년에 들어와서는 점차로 외교, 국방의 강화와 사상의 무장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건설, 국방력의 강화 및 외교의 확대 등 모든 부문에 사상적 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1960년대에 있어서 한국의 국민과 집권 「엘리트」집단의 지배적인 욕구는 경제적 발전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요인은 관념적 문화보다는 용구적 문화와 규범적 문화의 변화에 더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복귀에 있어서는 경제건설에서 사상적 무장에 그 강점이 옮겨지므로서 인간요인은 관념적 문화와 규범적 문화변동에 더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된다.

4) 기술적 요인

“기술은 사회의 주형”이라는 말과 같이 기술의 진보는 경제구조, 사회구조, 나아가서는 정치체제의 변동을 유발함과 동시에 사회를 새로운 물질문명의 사회로 변화 시키므로서 인간에게 새로운 선택 범위를 확대 시키고 이로서 개인의 가치 지향과 사회의식을 점차로 변화시켜 간다.²⁹⁾

다시 말하면 사회의 기술형태는 인간을 노동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인간의 사고의 영역을 확대시키며, 인간의 가치의식을 변형 시키므로서 사회·문화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정도는 공업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공업성장의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Hoffman의 공업구조의 고도화 단계에 비추어 볼 때³⁰⁾,

남한에 있어서 공업구조는 1955~1960년 사이에는 소비재공업대 생산재공업의 비율이 6.1:1로서 공업화의 제 1단계에 처해 있었고, 1961~1967년 사이에는 소비재공업대 생산재공업의 비율이 2.7:1로서 공업화의 제 2단계에 돌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³¹⁾

29. E.G. Mesthene, How Technology Will Shape the future, Harvard University Program Technology and Society, Reprint No. 5. 1968. pp. 2~8.

30. Hoffman은 경제발전의 기준을 자본에 관한 요구의 강약에 두고 소비재공업 또는 경공업은 비교적 수공업이나 공장별 수공업 시대의 특수기능과 결부될 가능성이 높음에 비하여, 생산재공업은 자본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고 보고 공업구조의 고도화 단계를 생산재공업의 생산액율 1로 하였을 때 (1) 소비재공업의 비중이 5±1로서 소비재 공업이 더 우월한 공업화 초기의 제일단계, (2) 생산재공업이 소비재 공업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므로서 2±1로 저하된 공업화의 제 2단계, (3) 소비재공업과 생산재공업이 균형에 도달하거나 생산재공업의 비중이 높아져서 소비재공업의 비중이 1±1/2:1로 공업화의 제 3단계, (4) 제 3단계 이하인때를 고도공업화의 제 4단계로 보고 있다.

Sta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Ein Beitrag Zur Quantitauer Analyse Historischer Wertschaffsprozesse, 1931.

31. 이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국민소득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상파대학, 경제문집 제VII권 제1호, 1968. pp. 25~27.

물론 1960년대 후기의 활발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등으로 산업기술 혁신에 주력하여 왔으나,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혁신을

<표 8> 과학 기술연구개발 투자의 국제비교 (단위: 100만불)

국 명	미 국('65)	영 국('63)	프랑스('63)	독 일('64)	일 본('63)	한 국('69)
투 자 액	21,323	2,159	1,299	1,436	892	36
대 GNP 투자 비율(%)	3.4	2.3	1.6	1.4	1.5	0.6

자료 한국경제연감, 전국경제인연합회, 1970 p.174

위한 국가적 노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공업유형이 소비재공업에서 생산재공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공업 기술은 소비재공업 생산 위주로서 이것은 국민의 물질위주의 생활풍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신문, 매스컴등의 보급증대는³²⁾ 국민의 의식구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볼때 한국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은 용구문화 변동에 더 크게 작용하였고, 일면에서는 과학적 합리주의 사상을 배태시켰으나, 물질만능주의의 소비생활 풍조를 가져 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북한에 있어서 「기술혁명」은 1961년—1967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한 7개년계획의 기본사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³³⁾

1966년 10월의 북괴 공산당 대표자회의에서 지적한 소위 기술혁명방침은 “공업 부문에 있어서 생산공정을 기계화하고 점차로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특히 지방공업의 기술개선을 실현하며, 농촌경제에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추진 시키어 선진적 영농방법을 널리 도입 하는것으로서³⁴⁾ 이

32. 신문 및 라디오 보급증향(1961—1971)

종 별	1961	1963	1965	1967
신문총수	747,256	790,261	1,096,120	1,539,561
천가구당보급율	170	195	220	595
방송수신기총수	642,758	1,286,213	1,783,343	2,393,104
천가구당보급율	147	270	355	455
T.V 보급율	—	—	37,648	70,561

자료 : ① 한국통계연감, 1962. p. 355

② 동 1968. p. 355

③ 공보부조사국, 전국방송수신기 보급실태, 1967.7. pp. 3~10

④ 공보부조사국, 전국신문보급실태, 1967. p.6

33. 북한통감, 공산전문제연구소, 1968. p. 310

34. 상계서, p. 311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북한주민들의 노동시간은 훨씬 단축되어 기술변동이 용구문화의 변동과 아울러 북한주민들의 사색시간을 증대시켜 새로운 관념적 문화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북한의 공업발전은 중공업과 군수공업 발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북한주민은 한낱 노예적인 노동자로 전락 하므로써 새로운 관념적 문화형성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있다.

북괴의 7개년 기본건설 투자계획과 실적을 보면 <표 9>와 같이 중공업 부문에 치중되어 있었고, 실제 공업 총 생산액은 1956년에 비해서 1970년에 총 11.6배가

<표 9> 북괴 7개년 기본건설 투자계획과 실적(1961—1970)

부 문 별	계 획(%)	실 적(%)
공 업	58	57
중 공 업	43	46
경 공 업	15	11
농 업	17	20
기 타	25	23
계	100	100

자료 : 북괴 7개년계획의 종합평가, 중앙정보부, 1970. 11월.

성장 하였는데, 그중 생산수단 생산은 13.3배, 소비재생산은 9.3배가 성장 하므로써³⁵⁾ 군수 및 중공업 위주의 공업 발전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이것은 북괴 주민의 강제동원에 의한 노동력 착취에 의한 것으로서³⁶⁾ 중공업의 우선 성장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공업발전 단계에 따라 경공업의 발전 단계를 지난 다음 단계로서 중공업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5)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은 경제, 정치, 사회적 제도로써 구분하여 간략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제도

남북한 사회의 경제 제도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국이 자유경쟁과 기회균등의

35. 북괴 노동신문 1970. 11.2~8.

36. 북괴의 노동착취 운동으로서는 천리마 운동, 생해 방지 운동, 새벽별보기 운동, 천삼뜨기 운동, 러리안퍼기 운동등 갖가지 명목의 운동이 있어 노동자,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원칙에 입각한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복피는 철저한 중앙계획 통제에 입각한 국가 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활동은 이윤 추구의 원칙에 의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므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물질만능주의의 배금사상을 조성하여 사익의 우선에 의하여 공익이 희생되는 등 사회에 갖가지 역기능을 초래케 되었고, 드디어는 부문적인 국가통제와 국가경제계획제도의 채택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니, 1960년대의 2차에 걸친 경제개발제도와 물가통제제도는 이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특히 19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사회에 계획제도에 대한 새로운 규범(Norm)이 형성됨으로써³⁷⁾ 그후 도시계획, 사회개발계획, 국토개발종합계획 등을 비롯한 숭한 계획을 조출하였다.

한편 복피에 있어서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엄격한 중앙계획 통제에 입각한 경제제도를 채택하므로써 현재 복피의 소유형태는 (1)천연자원을 비롯한 은행, 철도, 통신, 항공기관, 대규모농장, 중요 산업기관 등은 국유이고, (2) 협동농장, 협동단체 등은 공유이며, (3) 불과 50명 이내의 채전경작에 한하여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다.³⁸⁾

복피의 경제제도의 변동과정을 보면 (1) 1958년까지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완성되었고, (2) 1947년 일차경제계획 실시 이래 중공업 우선정책을 기본 노선으로 하여 중공업을 중심으로한 공업의 기초를 구축 하였으며, (3) 1947년과 1948년의 제 1차 및 제 2차 1개년계획을 비롯하여 1949—1950년까지의 1차 2개년계획, 1954년—1956년 까지의 복구3개년계획, 1957년—1960년 사이의 1차5개년계획, 1961—1967년 까지 7개년계획을 실시 하였으나, 계획의 차질로 1966년 10월 당대표자 회의에서 1970년도 까지 3개년 연장하는등³⁹⁾ 지속적인 경제계획 정책을 수행하였고, 1970년 11월 제 5차 노동당대회에서는 1971—1976년 까지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확정하므로써 북한 주민의 강제적인 희생에 의하여 중공업과 군수공업 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 하므로써 「전시형 공업화」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제도의 변천과정에서 구 지주계급, 중산계급 및 지식계급은 몰락하여 노동자로 전락하고 다시 공산당 간부급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 지배계급이 출현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분계급 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37. "유도된 사회변동"에 대하여는 M. J. Esman, "The Institution Building Concepts—An Interim Appraisals", Inter-University Program in Institution Building. 1963. pp. 1—9.

38. 중앙정보부, 복피현황, 1968. p.23.

39. 상계서. p. 23.

(2) 정치제도

한국과 북괴의 정치제도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주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⁴⁰⁾라고 하여 국가권력 또는 통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연원해 나오고 그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최후의 원동력이 국민주권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평등권, 자유권 및 생활권은 보장되고 있는 반면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기본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⁴¹⁾

국가권력조직에 있어서는 억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삼권분립제도(입법, 사법, 행정)를 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또한 복수 정당제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물론 북괴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자기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⁴²⁾라고 하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등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⁴³⁾,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권력은 북괴 노동당, 특히 피수 김일성에게 있는 실정이며, 권력분립주의를 부인하여 정치와 행정을 정치라는 혼합일체적 통치방안을 창안하여 노동당에 의하여 강력히 집행되고 있다.⁴⁴⁾

따라서 북괴의 정치체제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군주주권과 같은 당수 주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사상과 당성 및 신분에 의하여 공산당원과 일반 주민간에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있고 일반 주민은 일방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이다.⁴⁵⁾

이러한 정치제도상의 차이에 의하여 한국에 있어서는 자유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스러운 사고와 창작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창조의 가능성이 주어지고

40. 헌법 제 1조 제 2항.

41. 헌법 제 33조, 34조, 27조 2항, 28조 2항.

42. 북괴 헌법 제 2조.

43. 북괴헌법 제 11조, 13조 및 14조.

44. 윤세창, “북괴의 행정기구 해체에 따르는 민주적 개혁방안”, 국토통일, 1971. 2월호. p.44.

45. 노동당 내에서도 핵심당원과 일반당원 간에는 그 권력에 있어서 천지 차가 있으며, 중요한 당 사업은 핵심당원에 의해서 결정되고 일반당원은 핵심당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순종, 실천할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 “북괴 권력 및 사회구조의 취약점 연구”, 연구논총, 제 9호, 국제문제연구소, 1970. pp. 143~144.

있으나, 북한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목적에 맞게 통제 하므로서 획일적인 사고와 문화활동만이 허용될 뿐이다.

(3) 사회제도적 요인

(i) 가족제도

가족제도는 세대로 부터 세대로 문화를 전수하고 교육하며, 육체적 피로나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등의 활동의 안정을 유지하고, 지배적인 가치전형을 촉진한다. 또한 필요한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일탈의 위험을 수반하는 등 잠재적형을 유지하고 긴장관리기능⁴⁶⁾의 일부를 담당한다. 특히 가족제도에 따른 육아 방법과 유년기의 성장과정이 「퍼스넬리티」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⁴⁷⁾

한국에 있어서의 가족제도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서서히 핵가족제도로 이행되고 있으며⁴⁸⁾, 특히 도시지역에 이러한 핵가족화 경향이 뚜렷해져 가고 있음을 볼때⁴⁹⁾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천은 개인의 성격 형성 면에서 전통적 제 가치성향(예컨대, 가부장적 권위주의, 형식주의, 혈연중심주의 등)에서 근대적 가치의식(예컨대 개인주의등)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이것은 문화동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북괴에 있어서는 집단농장 등 집단생활 조장과 여성의 노동 착취를 위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대⁵⁰⁾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붕괴되고, 어린이들은 주로 탁아소나 유치원에 수용되고 있는바, 1966년 10월에는 전 북괴 탁아소 23,251개소에 적령기 아동의 70%를 수용하고, 유치원 15,218개소에 5~6세 아동의 60%가 수용되고 있는 등 북괴 아동들은 그들의 유년기를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성장

46. Talcott Parsons and Neil J. Smelser, Economy and Society, The Free press, New York, 1956. p.53.

47. 그 예의 하나로서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rev. ed., Glencoe, Ill: Free press of Glencoe, Inc., 1957. pp. 158-159.

48. 한국의 가구당 평균 식구수의 변동(단위 : 명)

년 도	1 9 6 0	1 9 6 6	1 9 7 0
식 구 수	5.71	5.68	5.37

자료 : 서울경제신문. 1970. 11. 27.

49.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 있어서 가구당 평균 식구수는 5.05명이고, 충남 5.72명, 전남북 5.70명, 충북 5.66명 등이다.

50. 노동자 사무원중 여성의 비율

년 도	1953	1956	1960	1964
비 율(%)	26.2	19.9	32.7	37.3

자료 : 북한총감,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p. 441.

하면서 김일성의 숭배와 공산주의 사상을 강제로 주입하고 있는 실정이다.⁵¹⁾ 따라서 북괴의 가족제도는 긴장관리기능 보다도 철저한 공산주의사상 배양의 기구로 전락되는 무서운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ii) 교육제도

교육은 인간을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의식을 갖도록 사회화 시킨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회의 교육이념과 제도는 어떠한 가치의식을 갖는 인간을 양성할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한국의 교육 이념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여 민주주의적인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하며⁵²⁾, 능력발전과 민주주의의 가치의식의 양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이념은 (1) 주권화, (2) 민주화, (3) 근대화로 요약될 수 있고⁵³⁾, 풍부한 개성의 소유와 적극적인 자기 실현의 능력을 배양 하므로써 창의적인 시민을 양성 하는데 있다.

특히 자기 실현의 욕구가 창의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⁵⁴⁾,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자기실현 능력 배양의 교육이야말로 말로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강제적 주입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어, 공산주의적 세계관의 확립, 공산당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소유, 공산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체력의 함양이 교육의 3대 목표가 되어 있다.⁵⁵⁾

북한 공산당이 요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의 중요한 징표는, (1) 공산당과 계급투쟁에 바치려는 무한충성(당성)과 행동에서의 조직성. (2) 협애한 생산규정과 개성 상실 및 기본권의 부인. (3) 의리와 인정의 몰각, 타인의 비운에 대한 냉담성 또는 외면. (4) 공산주의적 심리의 특징인 초조와 불안이라 할 것이다.⁵⁶⁾

따라서 그들의 교육제도는 기회균등이 아니라 당성과 사회 계급성분에 의하여

51. 북한총감,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p. 442.

52. 교육법 제 1 조.

53. 정범모,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제 문제, 공산권문제연구소, “교육이념론”. 1968. pp. 14~19

54. C.R. Rogers, “Toward a Theory of Creativity”, ETC :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XI, 1954. pp. 249~260. also H.H. Anderson(ed.),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New York: Harper, 1959. pp. 69~82.

55. 전계 북한총감. p. 936.

56. 박동운,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의 문제”,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제 문제, 공산주의문제연구소, 1968. pp. 30~31.

제약받는 차별적인 것이며, 오직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획일적인 인간 육성에 초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교육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보다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인간육성의 기능을 할 뿐이다.

(iii) 종교

남한이나 북한을 막론하고 신앙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⁵⁷⁾

한국에는 불교·기독교·천주교·천도교·유교등 제 종교의 신도수는 약 796만으로서 전 국민의 약 26%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 종교는 국민의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⁸⁾

유·불교는 과거 수백년 동안 한국 사회의 사상, 도덕, 사회규범등 관념적 문화와 규범적 문화의 대지주가 되어온 반면, 19세기 초에 도입된 기독교와 천주교는 관념적 문화와 규범적 문화의 변혁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종교인은 전 국민의 26%에 불과하며, 특히 이들 종교가 보수와 혁신, 기성종단과 신흥종교, 세대간의 단절 및 파벌 등으로 국민의 의식구조의 통일과 단합을 가져오는 구심적 역할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⁵⁹⁾

한편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내세워 종교 말살에 광분하고 있고 유일한 종교는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종교이다.

북괴 공산당은,

(1) 8.15해방전 북한지역에는 종교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종교 탄압을 완화하면 종교인들이 반공운동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점.

(2) 많은 종교인들이 8.15후 또는 6.25동란시에 자유를 찾아 월남 하였는데 그들의 가족, 친척, 친지들이 다수 공산치하에 있는 조건하에서 소위 <방모(防謀)>의 필요상 불가피 하다는 점.

(3) 계속되는 숙청선풍과 인생무상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북한의 사회풍토는 종교에로 이끌리기 쉽다는 점 등이 북괴로 하여금 종교 탄압을 광적으로 하게 한 것이다.⁶⁰⁾

따라서 북한지역에는 종교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 종교활

57.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및 북괴 헌법 제11조.

58. 문교통계연보. 1970.

59. ① 한국사회의 양극화—인간화를 위한 진단과 처방, 동아일보. 1971. 4. 6. ② 이종구, “민족적 규범의 공백과 정치퇴화”, 동아일보. 1971. 5. 3.

60. 전개 북한통감. p. 456.

동은 극히 부진하며 공산주의 사상이 새로운 종교의 대용으로 강요되어 모든 국민을 세뇌 시키고 있는 것이다.

(iv) 언 론

매스컴 은 정치과정에 있어서 투입(Input), 결정(Decision), 산출(Output)에 관한 제과정을 감시하고 그것을 체제성원에게 보도, 전달하며 체제를 구성하는 특정집단의 투입을 위한 여론형성 및 feed-back 작용을 할뿐 아니라⁶¹⁾,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문화를 유입시키고 특히 발전도상의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성원의 가치변화와 물질적인 욕구 추구의 동기를 변화 시키므로써 또한 문화동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²⁾

한국에 있어서 매스컴 보급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바 있거니와 매스컴의 구독과 청취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그 내용은 정책의 비판을 비롯하여 정서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므로써 언론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론이 높아가고 있어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는 신문은 약 20종으로서 발행부수는 노동신문 약 30만부를 비롯하여 약 90만부, 방송 보급은 약 2~3만대로⁶³⁾ 그 보급의 절대량이 적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북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 출판의 수단이 공산당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어 추호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으며, 완전히 어용화 되고 있다.

북괴 김일성은 “당은 시기의 정책 방향을 당 기관지를 통하여 각급당 및 단체와 당원에게 신호한다. 그러므로 당기관지는 곧 당의 지도자와 같다”라고 하여⁶⁴⁾ 신문을 그들의 완전 소유물로서 대중에게 선전, 위협하기 위한 매개물로서 못박았으며, 북괴는 이와같은 매스컴 매개체를 이용하여 사회의식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통일을 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⁶⁵⁾

61. 안해균, “한국 근대화와 Communication, 행정논총, 제 2권제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4, p. 10.

62. L.W. Pye. “Communication and Civic Training in Transitional Societies, L.W. Pye (ed.), Communi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p. 13-126.

63. 중앙정보부, 정책자료, p. 25. 및 p. 79.

64. 전개 북한통감 p. 610.

65. 「레닌」은 “신문은 단지 집단적 조직자이다”라고 한바 있는데 북괴는 이러한 「레닌」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6) 외부상황적 요인

한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가 접촉하고 있는 타사회와의 교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제사회는 냉엄하고 국가대 국가간의 관계는 국가이익의 합치점 여부에 따라 그 관계의 기복이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해방후 25년 동안에 양 사회의 대외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그 특징적인 것만을 고찰하여 그러한 교류가 문화동태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 외교정책 방향은 크게 삼단계로 나눌 수 있는바 첫째 1960년 이전의 대미일변도의 의존적 외교정책이고, 둘째는 전반기의 대자유진영으로의 확장단계이며, 셋째는 1960년대 후반기의 적극적인 대중립국 및 비적성 공산국에의 진출 단계이나 대외관계의 주축은 어디까지나 미국이었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변동과 국내상황적 요인의 변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볼때 1950년대에는 동·서 양극화한 냉전의 국제정치 체제내에서, 1960년대에 있어서는 다극화된 평화공존의 국제정치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국내 상황적 측면에서는 1950년대 국방 위주에의 정책 지향에서 1960년대에는 국방과 경제건설의 균형정책 지향으로, 특히 경제자립의 정책 지향으로 전환된데 기인한다.

이것을 문화 이식의 과정으로 보면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외래문화의 수용 모방기였고, 1960년대 전반기는 문화 수용에 따르는 시행착오기였으며, 1960년대 후반기는 주체적 창조 현상의 태동기⁶⁶⁾이다.

이제 위에서 논한 대 외교정책 지향의 변동과 문화이식 양태 변동과정의 특징에서 볼때, 한국은 주로 미국문화의 영향을 강력히 받으면서 점차로 구라파와 기타 지역 문화와의 접촉 범위가 확대 되었으나, 미국문화 영향권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미국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에 이식된 문화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보는 미국문화의 특징은 배금주의, 폭력주의, 권력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무개성적 문화이다.⁶⁷⁾

66) 고영복, "한미관계 25년; 문화면", 국제관계연구 제2권제1, 2호, 한국 국제관계연구소, 1971. p. 119.

67) 상계 논문. pp. 124~125

한국은 지난 26년간 이러한 문화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아온 것이다.

한편 북괴의 경우는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는 중공과 소련에의 의존적인 대외 관계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대중립국에의 진출등 적극적인 대외 정책 지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괴의 주된 대외관계는 대 중공·소련관계이다.

1956년 이래 중공·소련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감에 따라 북괴의 대중공·소련 관계는 제 1단계로 중공지지, 제 2단계 대소 접근, 제 3단계 자기 노선의 단계로 변전되어 왔다.⁶⁸⁾

이로 인하여 북괴는 대외문화 수용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기에는 「맑스·레닌」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맹목적으로 신봉한 단계.

둘째, 중공의 민족주의를 가미한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이념 구축의 단계이다.

따라서 북괴에서는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족문화는 형식으로 사회주의 문화는 내용으로”라는⁶⁹⁾ 문화수용 과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금후에 북괴가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더 강조하는 관념적 문화체제를 형성 발전할 것이나, 또는 민족주의적인 문화를 재형성할 것이나 하는 문제는 북괴가 중공과 소련중 어느쪽에 더 밀착하게 될 것이나 하는 대외정책 방향과 무리한 경제·국방력 증강 과정에서 개인을 희생 하므로써 약화되기 쉬운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적인 전통문화를 어느 정도 내세우느냐 하는데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⁷⁰⁾

이상을 종합해 볼때 북괴는 초기의 무비판적 사회주의문화 수용단계에서 점차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문화 수용과 형성단계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제 문화동태 결정 요인이 각문화 하위체제 변동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볼 때 남한사회에 있어서는 용구적 문화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더 많은데 비해서, 북한에서는 관념적 문화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더 많다.

68. 한태수, “중소분쟁이 북괴의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토통일, 제4호, 1970. pp. 52-55.

69. Grey Hodnett, “민족의 개념과 특징” 공산주의비판. Vol. 3. No. 3. 1968. pp. 8~10

70. 최래권, “김일성체제의 정책이념 분석”, 공산권(북괴·중공) 문제의 분석 검토 세미나,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71. 4 pp. 3~4.

<표 10>

남 북한 사회에 있어서 제문화동태 결정요인의 작용

전이합수	하위문화체제		용구문화		규범적문화		관념적문화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지리적요인	D	D	I	I	I	I	I	I
인간적요인	I	I	I	I	D	D	D	D
인구적요인	D	D	I	I	I	I	I	I
기술적요인		D	I	I	I	I	I	I
제도적요인		I	I	I	I	I	D	D
외부상황적요인	I	I	I	I	D	D	D	D

주: D : 직접적 또는 일차적 영향.

I : 간접적 또는 이차적 영향.

따라서 상관도 R는 D가 높고 I가 낮다.

5. 이질적인 남·북한 사회문화의 형성

1) 문화의 이질성과 문제점

단일국가, 단일민족, 단일문화였던 한국 사회는 국토분단 후 26년간 남북한 양 사회에 작용한 제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각기 이질적인 사회문화를 형성 하였는데, 그 주요한 문화적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하위문화체제 면에서 볼때,

남한사회는 국가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할 정신적인 중심사상이 결여된 채 전통적 유·불사상은 해체되고 물질적인 용구문화에만 치중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제 사회규범간의 상호 부조화는 누적되고 국민의 가치지향과 행태적 불통합은 심화되어 왔다.

한편 북한에 있어서는 인적, 제도적, 외부상황적 제요인의 상호 복합작용으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무비판적 수용을 가져왔고, 한편으로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적 숭배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괴는 그 동안 용구적 문화면의 변동 보다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관념적 문화인 사상의 주입만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2) 하위문화체제의 본질 면에서 볼때,

① 남한사회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유·불사상의 해체에 따르는 새로운 구심적 사상이 형성되지 못하므로써 물질만능주의 배급사상이 지배적이고, 발전도상 제

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식 구조상의 혼란성, 단절성등 이중성을 노정하고 있다.

즉, 의식구조와 행동 면에서의 감정성과 감정중립성, 보편성과 업정성, 한정성과 분산성, 집합 지향과 자기 지향 등이 혼재해 있고⁷¹⁾, 형식주의, 분파주의, 숙명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등이 상존해 있다.⁷²⁾

한편 도덕적인 기존 윤리관이 급격히 붕괴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모랄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호 불신의 풍조가 만연되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 사상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외래문물의 전시효과에 의하여 고도의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② 북한사회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유·불교 사상의 강압적인 해체와 자유주의 사상의 근절정책으로 인하여 「맑스·레닌」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아울러 소위 「유일사상체계」가 표면상 형성되어 가고 있다.⁷³⁾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 만으로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음을 절감한 북괴 공산당이 국민통합을 위하여 내세운 신민족주의 사상이다. 또한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북한 주민의 내면적 사상으로 내재화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폭발될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진정한 북한 주민을 통합할 구심사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좋은 예로서 북괴 문화정책이 유일사상과 혁명사상을 고취하는 범위 내에서만 창조활동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북괴주의 사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특히 고급 당 간부들에게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는 점⁷⁴⁾, 북괴 국사 연구가 계급의식과 민족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김일성 일인독재 사상 교양 사업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점⁷⁵⁾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도덕 윤리는 파탄되어 주민 상호간은 물론 심지어 친족 간에도 상호 불신의식이 고조되어 불안의식이 사회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식과 행태 면에서 상호 갈등이 내면화되고 축적되어 공산당을 매체로 한 인간관계의외

71. T. Parsons, op. cit., pp. 58-67.

72. Fred W. Riggs,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oughton Mifflin Co., 1964. Chapter 1.

73. 당의 「유일 사상체」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로 집약된다. 박동운 「북괴 혁명론의 사상적 기초」, 국토통일, 제4호, 1970. p. 20.

74. 박명석, 「북괴의 문화정책과 제도상의 특징」, 국토통일 1971. 2. pp. 121-125.

75. 예컨대 북괴 조선 국사는 ① 임진왜란을 조국전쟁이란, 개념으로 개괄하며 ② 영웅주의 애국주의 조국애 등 소련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이론과 조국전쟁 인식을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③ 이순신장군을 국사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규정하여 김일성과 이순신을 모두 조국 전쟁의 두 영웅으로 공리화하려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신일철, 「북한의 국사관 형성——1950년 Stalin 민족이론 수정과 1956년 이후 북한 교조의 민족사관화」, 국토통일. 1970. 7 pp. 23~24.

순수한 개인적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⁷⁶⁾

끝으로 용구문화적 측면에서 볼때,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공업과 중공업의 기술과 「테크놀로지」 및 이에 대한 지식은 향상되어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대중화 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단순 노동자의 위치로 전락되어 착취의 대상이 되므로서 이러한 용구문화의 발전에 의한 어떠한 새로운 자체적 관념적 문화나 규범적 문화 창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3) 사회계층 구조의 측면에서 볼때,

남한사회는 경제적, 교육적 및 기타 여러 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형성, 구분된 상류층과 하류층 간에 관념적 규범적 및 용구적 문화 면에서 심한 「갭」(gap)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도시와 농촌 간에도 역시 문화면에서 심한 「갭」을 노정하여 이러한 문화의 단절성이 국민의 의식 구조와 형태를 통합하는데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당성과 과거의 신분제에 의하여 새로이 형성된 고위 공산당원을 중심으로한 북한의 신흥 상류계급은 철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고, 물질적인 면에서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과거 중산층 이상 이었거나 지식수준이 높았던 소위 반혁명적 세력과 중간 세력은 이러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아직 세뇌되지 못하므로써⁷⁷⁾ 북괴는 이들의 통합을 위하여 소위 민족주의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남북한 사회는 극단적인 이질적 문화권으로 변천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각 사회체제 내에는 많은 문화적 취약점과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바 문화 종합을 위한 장기 정책이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취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북괴를 붕괴시켜 우리의 문화권으로 유도 하느냐 하는데 귀착된다.

6.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 발전을 위한 장기정책 방향

1) 단일문화권 형성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우선 순위

통일을 촉진 시키고, 나아가서는 통일후에 전 국민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발전

76. 전계 북한총간, p. 438.

77. 북괴 주민의 성분에 의한 인적 구성은 공산주의 핵심세력 상, 중간 세력 상, 및 반 혁명적 요소 인원 상로 되어 있다고 북괴 공산당은 추정하고 있다. 전계 북괴총간, p. 200

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한 단일 문화권 형성 정책의 우선 순위는 첫째로, 한국의 내적인 주체역량의 배양이고, 둘째는 대북괴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 공세이다.

한국의 문화동태 결정요인의 분석과 현실적 문화의 분석을 통해서 볼때, 문화 발전의 순위가 용구적 문화→규범적 문화→판넬적 문화의 순위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통합을 위하여 구심적인 역할을 할 견고한 사상적 토대가 갖추어 지지 않은채 물질적인 면에서의 근대화에 치중 하므로서 오늘날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도시와 농촌 및 특정지역간)에 이질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이기적인 배금사상만이 풍미하게 되므로서 전반적인 발전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발전정책은 발전도상제국에게 공통적인 빈곤의 극복을 위하여 어느 단계까지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1960년대의 2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이제 상위 중진국의 대열에 발돋움 하게된 마당에서는 근대화 정책의 우선 순위가 판넬적 문화→규범적 문화→용구적 문화의 순위로 점차로 전환 되어야 한다.

이로서 국민 각자는 뚜렷한 발전 철학을 지니고 설정된 국가발전의 목표를 향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되고 현재와 같은 원자 분열적인 불통합 현상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⁷⁸⁾

이러한 우리의 주체적 문화가 형성되면 다음 단계로서는 북괴의 제 취약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문화 공세로 돌진하여야 한다.

이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2) 주체적 문화역량 배양을 위한 장기정책

(1) 민족 주체의 창조적 철학사상의 배양.

한국 사회문화의 근본적인 취약점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유·불교의 철학사상이 붕괴되는 가운데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 사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잡다한 제 외래사상이 유입·이식되었으나, 이것을 소화하여 과거의 전통사상과의 변증법적 재구성이 되지않고 자기 이질적인 사상으로 유리되어 있어 국민의 행태의 불통합을 가져오고 말초적인 물질주의적 배금사상의 충격으로 인하여 원자적 분해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1961년 5.16혁명 이후의 국민재건운동, 1960년대 중엽의 제 2경제운동, 1960년

78. 박종홍, 한국의 사상적 방향, 박영사, 1968. pp. 245-264.

대말(1968년말)의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등으로 이러한 주체사상의 배양에 노력해 왔으나, 이것은 단지 구호에 그친 감이 있으며, 진정한 국민의 주체사상화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민대중에게 좀더 현실적으로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민족주체사상을 설정하여 국민 각자에게 내면화될때 까지 계속적이고 끈질긴 내면화운동이 전개 되어야 한다.

(2) 사회체제의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체제로의 전환

사회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또는 문화세력간의 갈등 현상은 필연적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폐쇄된 체제 내에서는 갈등은 되도록 억제되고, 내면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커서 이것이 표면화될 때에는 전 인격적인 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폭발적이 되고, 근원부터 파괴될 가능성마저 갖는다.

반면에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회 체제내에서는 사회참여가 부분적이고, 갈등이 복수성(Multiplicity)을 띄게 되므로 기본적인 구결의 가능성이 감소되고 오히려 새로운 사회·문화 창조의 기본 바탕이 되므로서 사회·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⁷⁹⁾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좀 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장기정책이 필요하다.

(3) 기회균등 사회의 실현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기회균등의 사회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성원각자가 체험으로서 이러한 자유평등을 느낄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등 제부문에서 진정한 기회균등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을 창조적 발전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의 균등은 개인과 집단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므로서 민족문화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회적 기풍이 조성되는 것이다.

(4) 민족문화창조를 위한 지도세력의 육성

79. ① Lewis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pp. 151-157. ② Ralph Dahrendorf, "Toward Theory of Social Conflict Resolution, Vol. II. No. 2, June 1958. pp. 179-183. ③ David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 67.

북괴보다 우위의 주체적인 문화의 형성과 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창조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여 전체국민을 이끌어 갈 민족문화 창조의 지도 세력을 발굴하고, 또한 육성 하여야 한다.

국가통치를 담당할 「리더십」그룹은 정치·경제·사회의 제 측면의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유능한 창조적 인재를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육성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보호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제 부문에 창조적 「엘리트」들의 요람(enclave)을 형성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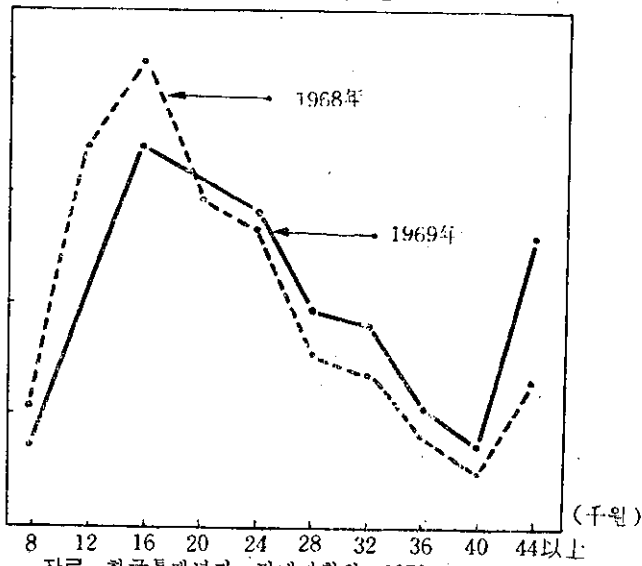
이러한 요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엘리트」들은 교오배양(Cross-fertilization)에 의하여 그들의 능력을 증진하고 점차로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사회 전면에 분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족지도세력의 육성은 국가적인 발굴, 보호, 육성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회 전면에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케 하므로써 민족문화의 지속적 성장은 가능하게 되고 또한 북괴의 사회·문화를 압도 하므로써 한국에의 흡수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또한 측면에서는 민족지도 세력을 사회의 중산적 안정 세력의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바, 1960년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두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한국 사회에 건전한 중산계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며⁸⁰⁾, 따라서 안정된 중산계층

80) 경제적 소득의 측면에서 본 중산층의 부재는 다음표와 같다.

소득계층별 가구분포



자료 한국통계연감, 경제기획원, 1970. p. 280.

의 형성은 대중문화의 형성 발전을 위해서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5) 유물사관 극복 문제

민족주체의 창조적 문화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민족주체 사상의 배양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진정한 극복이 전제되지 않는한 문족문화 통합은 그 과정에서 근본부터 뒤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서 공산주의의 폭력성과 무자비성을 폭로하는 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역사적 발전과정의 필연적인 형태라는 유물사관의 허구성을 교육(학교 교육과 사회교육 포함)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유물사관을 극복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행해져야 한다.

이상의 여러가지 내적 조건이 충족될때 「8.15」선언에 의한 선의의 경쟁체제가 한국내에 갖추어 졌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3) 북괴의 취약점을 이용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공세정책

문화통합의 우선 순위는 관념적 문화→규범적 문화→용구적 문화이다. 따라서 문화통합의 정책방향의 역점이 관념적 문화의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면 직접적으로는 북괴의 관념적 문화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용구문화, 규범문화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역으로 관념문화의 재구성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미 문화동태 결정요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945년 8.15해방 이후 북괴의 역점은 관념적 문화, 특히 사상의 재구성에 주어져 왔다.

따라서 북괴의 관념적 문화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 문화동태 결정요인중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선택하여 북한 사회에서 역기능을 작용하게 하는 것에 주력 하여야 한다.

북괴의 관념적 문화의 재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는 인간적 요인, 제도적 요인 및 외부상황적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주요 변수의 순위는 외부상황적 요인 인간적요인, 제도적 요인이다.

북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상황적 요인은 공산권제국, 특히 소련과 중공에 의한 문화적 영향이다.

구주의 공산제국의 특성은 첫째는 자유화의 경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고⁸¹⁾, 둘째는 민족주의 의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소련과 중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노정되고 있는데, 소련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민족주의적 특수성을 인정 하기에 이르렀고⁸²⁾, 1960년대에는 자유주의 사상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다.

중공은 1940년 모택동이 그의 「신민주주의 이론」중 역사관 관계의 언급에서 「새로운 민족문화」의 지침을 사회주의적이 아닌 신민주주의 문화임을 밝힌 이래⁸³⁾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대두 되었고, 최근 「탁구의교」를 핵으로 한 미국과 중공간의 급속한 새로운 관계의 발아는 미국과 중공간의 25년간에 걸친 장기적 냉전과 단절이 점차로 풀리어져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외교관계가 수립된 여러 자유진영의 국가(예컨대 영국, 캐나다등)들과의 접촉은 더 한층 긴밀해지고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공에도 새로운 자유의 물결이 율출 가능성이 엿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변천 속에서 북괴가 택할 정책은 폐쇄적 정책을 택할 것이냐 개방적 정책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북괴가 개방적 정책을 택할 경우, 소련, 중공을 비롯한 제 공산권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자유화의 물결이 점차로 유입될 것이며, 북괴는 소위 그들의 민족주의적 사상을 더욱 고취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은 비적성 공산권에의 교류를 증대하여 북괴에 한국의 주체적인 민족문화 창조의 사상의 영향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북괴와의 문화 창조의 경쟁과 교류 방안을 모색하여 북괴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자유세력과 중립 세력에 문화적 영향을 확대해야 한다.

북괴가 폐쇄적인 정책을 택할 경우 북괴의 고립화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먼저 대 중립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⁸⁴⁾,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대공산권과의 진출을 도모하므로서 북괴의 고립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로서 폐쇄적인 북괴 자체내에 갈등의 폭발을 유도하고, 나아가서는 북괴 사회를 우리사회 문화권으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배양되고 민족적 주체사상의 확립을

81. 1968년의 「책교」의 자유화 운동은 그 좋은 예의 하나이다.

82. 신일철, 전개논문. pp. 61-62.

83. 상계논문, p. 65.

84. 최근의 멕시코, 실론 등에서 보여준 북괴의 호전성, 비인도적 성격을 들어 파상공세를 취한다.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에 주체적문화형성의 단계가 지나면 상호충돌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서 보다는 북괴문화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북괴와의 문화적인 면에서 경쟁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문화 교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이상에서 남북한 사회 문화 동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문화의 이질성을 분석 검토하였으며, 문화통합을 위한 몇가지 장기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볼때, 한국사회는 민족주체의 관념적 문화가 재형성되지 못한채 용구적 문화의 발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회성원 개개인의 연대의식과 공동의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어 사회통합이 국가발전의 당면과제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통합은 민족주체적인 철학사상이 국민 각자의 심층 심리에 내면화되는 문화적 통합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체적 사상이 확립된 연후에야 북괴와의 경쟁이나 교류를 통한 문화통합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민족문화 통합을 위한 장기정책의 기초적 과업으로서 민족주체의 사상, 배양, 민족주체의 관념문화의 형성, 민족문화의 재구성이 강조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전문가 훈련방안

송 일 빈
(법무부 근무)

< 목 차 >

<p style="text-align: center;">서 론</p> <p>1. 국민교육의 국가적 필요</p> <p>2. 북괴의 교육이념과 그 실태</p>	<p>3. 우리의 국민교육 현황 및 문제점</p> <p>4. 전문가 훈련방안 모색</p> <p>5. 결 론</p>
--	---

서 론

우리 국토의 분단은 타률에 의해서 저질러진 역사적 비극이다.

한 나라의 운명은 내적·외적 제변수의 총합된 작용에서 결정된다는 원리도 당시 우리에게서 적용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4반세기의 흐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국토분단이 비록 국제적 압력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국토통일의 마지막 관전은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설사, 미·소·일 또는 중공이 한국 통일안을 합의보았다고 해서, 또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그 방안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국토통일이 이루어진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의 국토통일을 위한 최적의 국제환경도 통일을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학자는 한국을 위요한 오늘의 힘에 작용을 다음 등식에 의하여 표시하고 있는바,

$$8S+5A+2J=8N+4R+3C$$

※S=한국 N=북괴

A=미국 R=소련

J=일본 C=중공

여기에서 민족자체의 힘이 8, 관계국의 태도가 7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매우 뜻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와같이 격변하는 국제적 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여 나가면서 주체적 역량을 배양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국토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놓인 것이다.

이의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경제성장, 군사력 강화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사상적 통일인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의 승공태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에 대비한 국민교육 실천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고 있는가?

냉철하게 비판했을 때 경제, 국방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산당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일부층이 있는가 하면 승공통일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 그리고 사태를 직시하면서도 외면하는 기풍마저 엿볼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거의 잘못만을 논할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러한 취약점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온 국민이 확고한 신념에서 승공통일 대열에 적극 참여토록 제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교육은 이론적인 체제위에서 공산주의를 항복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가의 훈련이 초미의 과제인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는 그간 국토통일원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특히 국토통일원에서는 1971년도 시정목표에서 국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장·단기에 걸친 전문가 양성계획을 수립 실천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바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기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선행되었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국민교육의 성과는 거시적인 장·단기종합계획에서의 실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의 성패여부는 전문가의 질과 성의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지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고에서는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전문가 훈련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세계적화의 일환속에서 움직이는 북괴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핀 다음 우리의 국민교육 현황과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1. 안보문제 쟁리즈
우리 민족 통일과 그 과제 p. 11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전문가 훈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서 전문가 훈련방향을 슬하고저 한다.

1. 국민교육의 국가적 필요

1. 국민교육의 의의

국토통일문제는 피상적인 물량적 조건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설사, 물질적으로 부강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통일에 임할 국민의 정신적 능력이 보잘 것 없다면 통일의 길은 암담하여 질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는 물질적인 부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온 국민이 통일목표를 지향해서 굳게 뭉쳐 주체적 역량을 배양하여 나간다면 그 상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통일의 기반조성은 국민단합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더욱이 우리의 국토통일의 저해요인이 「이메올로기」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는 국민정신의 총화는 국민교육에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며 국민교육의 성패여부는 국운을 가름하게 된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잘 입증되고 있다.

「프러시아」가 19세기초 「나폴레옹」에게 유린당하게 되자 「시히테」교수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교육의 일대 개혁을 주창하였고 정부는 그의 주창을 받아들여 개혁을 단행한 결과 「프러시아」는 「나폴레옹」에게 패배당한 후 60년만에 보불전쟁(1870~1871)에서 대승하였고 일약 세계의 열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로지 장기계획에 의한 국민교육의 힘이 가져온 통일된 국민정신의 발로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당시, 「몰토케」장군은 “이 전승으로 인한 국가의 영리는 군인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국민교육을 담당하였던 교직자에게 당연히 돌려야 한다.”²⁾고 한 것은 국민교육의 위력과 참뜻을 잘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7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보다도 이념의 확립과 사상통일을 기하고 상대를 항복시킬 수 있는 힘을 배양하여야 하겠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국민교육을 국가적 최우선 사업으로서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교육은 국토통일이 어느 일부층의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계층, 계급, 남녀노소를 불문한 거주적인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2. 대학교육과 국방문제 p. 5
한국교육학회 주최 심포지움

그리고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등, 전반에 공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교육, 산업단체원의 교육, 성인교육, 군교육,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육등까지 총망라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은 전 국민이 대상인 것이며 거시적인 면에서 단계별 장기계획으로 지속성있는 실천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전체국민으로 하여금 공산당의 정체를 똑바로 인식케 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능력, 승공사상의 확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국토통일의 확신과 참여의 적극성을 계도함으로써 국토통일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신적 태세를 갖추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통일 의식을 고취하여 생지육에서 신음하는 북녘 동포를 구출하여야 할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데 또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전문가 훈련의 긴요성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서 보다 낮은 성과를 기대하려려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전문가를 확보하는데 있다. 교육전문가는 교육의 기능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인간 형성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전문가는 고도의 지적수준을 요구하게 되며 장기적인 교육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더욱이 민족의 지상과제인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을 담당하게 될 전문가, 즉 연구가나 교직자는 교차원적인 연구와 열의로서 우리 자체의 통일철학을 보다 확립하고 심도있는 지도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사상행동상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일찌기 사상행동 통일의 중대성에 대하여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Young」은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주요한 사상행동상의 공동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사회마다 자체의 지도원리가 있는 이상, 만약 매개 구성원들이 자양 각색의 교립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집단으로서의 안정과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유사시의 난국들과는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³⁾ 고 하여 사상통일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서 일관하여 왔다.

즉, 북괴의 정보분석이나 선전자료 제공을 위한 것에 그치는 연구결과를 초래했고, 공산당과 1대 1로 대결해서 설복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연구가 폭넓게 진행

3.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제문제 p. 21
공산주의와 인간형문제 박 동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는 그간 국토통일문제가 타부시 경향에 있었고 많은 제약으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있어도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연구는 고사하고 외면하여 왔던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직 전문가의 경우는 더욱 한심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하여 어느 교육행정가는 자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술하고 있다.

“거년, 고등학교 일반사회과 담당교사 자격검정고시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비교해서 정치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비판하라는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그 결과 100여명의 응시자중 약 1할정도 외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선교직자로서 일반사회과를 담당할 것인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⁴⁾는 것이다.

일반사회학과는 고등학교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을 종합해서 이루어진 공민교과인 것이다.

여기에서도 교육전문가 훈련의 지급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문가 훈련의 선행없이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綠木求魚格(綠木求魚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따라서 범국민적 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임할 전문가, 즉 연구가, 교육전문가의 훈련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당면과제인 것이다.

2. 북괴의 교육이념과 그 실태

1. 공산당의 교육이념

공산치하의 교육은 피교육자 스스로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게끔 지능과 정서, 그리고 체력을 배양토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적 인간형성이라는 구호밑에서 “당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인간”⁵⁾을 양성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북괴는 학교교육의 기본구호를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인간형의 인간을 양성하자”고 떠들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공산당을 위해서는 개성, 자아의식,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서슴치 않고 희생시킬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공산당의 결정과 지시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생활하는 인간을 뜻하는 것이다.

공산사회를 당수가 조종하는 큰 기구에 비유한다면 공산치하 주민들은 이 기구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하며 사실상 그 이상의 역할을 못하게 되

4.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제문제 p. 194

5. 공산당 제3차대회에서 제시된 교육부문의 기본구호

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교육은 이 부속품들이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착오없이 수행하며 어떠한 외부조건하에서도 변질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정밀하게 제작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산당의 교육이념을 다시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성과 정서를 지닌 인간을 공산당의 지령에 움직이는 ‘인간로봇’으로 개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북피의 주민교육 실태

북피는 교육자체를 소위 혁명의 수행방법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공산당에 충실한 ‘붉은 정신’으로 전 주민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일반학교에서는 물론, 당원, 비당원, 노동자, 농민,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상교양을 강요하여 공산주의식 인간개조를 꾀하고 있는 바 그 실태를 다음에서 간추려 보겠다.

(1) 학교교육

“교원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의 보급자이며, 문화교육사업과 사회정치사업을 꾸준히 수행하는 정치활동가인 우리 당의 붉은 선전원이다”⁶⁾라는 말에서 표현되고 있듯이 북피의 학교교육은 모두가 ‘붉은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교양을 위하여 표면에 나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북피가 얼마나 학교교육에 광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동구공산권에서 일고 있는 자유화물결로 인하여 보다 더한 세뇌교육 방책으로서 교육체계 개편(부록 1)까지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교육체계 개편에 따른 교과과정은 보면, 소위 인민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사, 정치, 경제학등 정치학습을 강요하고 있는 외에도 매주 한 시간씩 소위 ‘수령연구실’에 모여 김일성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며 매일 한 시간씩 정치교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시사, 회상기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놀라운 것은 매일 특정시간을 설정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정신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를 보면,

입학시에도 공산당의 추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정치학습 및 노동과정등에서 비상한 노력과 열성을 보임으로써 공산주의 사상이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과목으로서 당투쟁사, 철학, 정치, 경제학 등을 졸업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학교교과가 끝나면 청소년단

6. 북한 20년, 유현 저 p.p 316~318

간부의 지휘아래 집단활동을 하여야만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일 특정의 날을 정하여 전 생활을 통해서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표 1) 북한 학생의 파외 활동

요 일	명 칭	내 용
월	사 회 봉 사 의	노력동원, 계몽선전, 사회사업
화	회 의 의	각종회의 진행, 정치사업
수	문 화 의	공산사업의 영화상영, 문예회
목	위 생 의	대청소, 환경미화, 위생검열
금	기 술 연 마 의	공장직학, 생산기술전습
토	체 육 의	각종체육운동, 경기개회
일	휴	오전중 자습

(2) 사회교육

북괴의 사회교육의 전담부서는 소위 보통교육성 교육국으로 되어 있으나 기실은 공산당의 선전선동부가 어느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회교육은 사상통일과 김일성 사상의 신격화 교양을 위해서 미증유의 공산주의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전 조직을 총동원해서 소위 교양혁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교양내용은 당정책, 당의 결정지시문, 당회의 결의문, 김일성의 회상기 및 선집, 그리고 이상 집 이외에 다양한 당 문헌 등을 철두철미 주입시키어 대중화하며 생활화하는데 혈안이 되어왔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집단적 학습교양 및 개별적 학습교양
- 2) 장기적인 당책임의 개별적 교양
- 3) 이동식 직관물 교양
- 4)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을 통한 교양
- 5)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양
- 6) 이야기 도입 및 오락회를 통한 교양

이와같은 전 기능을 총동원해서 교양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과 형식이 전적으로 계급교양과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정신의 진작,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성의 고취, 그리고 공산주의 전략과 전술을 체득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북괴는 이와같은 조직적이고 교활무쌍한 각가지의 방법으로 사상개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대남역선전과 공산주의 잠장(潛場)에서 오는 정서는 대남한적개심이 더욱 굳어질 것은 명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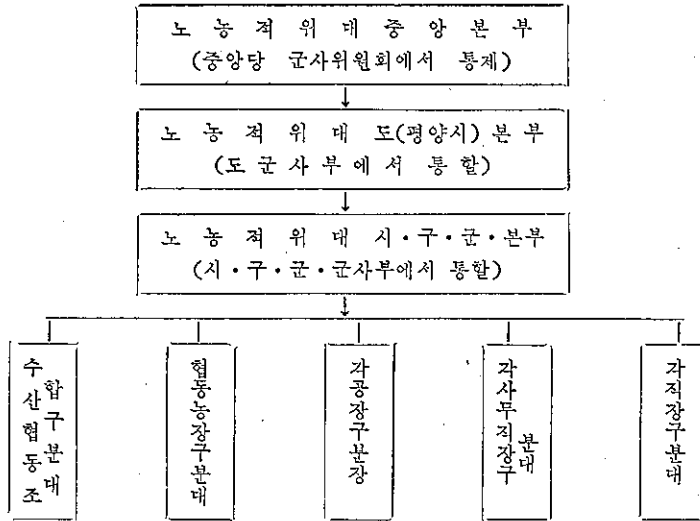
(3) 민병교육

북괴는 1959년말, 만 17세로부터 45세까지의 청장년중 공산당이 믿을 수 있다

고 인정한 남녀로서 소위 노농적위대라는 민간 무력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전 북한의 매개 직장까지 전반적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편성되어 있다.

(표 2)

노 농 적 위 대 의 편 성



자료: 남북한 교육문제세미나 논문집 p, 230

물론, 이 조직은 적화통일을 위한 후방 군사요원의 확보라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출현한 것이나 공산당의 체제로 보아서 일면으로는 사회교육의 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모든 직장과 기관에 군사편제로 조직되어 있는 노농적위대는 매주 시간의 군사훈련과 정치학습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치학습은 공산당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적화통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는 정신의 주입이 목표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민병교육은 세뇌교육을 위한 제한된 범위의 일종에 사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공포 분위기 속에 휩쓸어 넣어 공산독재제도에 순응케 하는 특수한 방법에 의한 사회교육으로도 볼 수 있겠다.

(4)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육

북괴는 각직장요원의 재교육, 통신수단을 통한 사회교육, 그리고 전시회, 박물관, 소위 혁명전적지등 직관선전 수단을 통한 사회교육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기술한바와 같거니와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세뇌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중할 것이다. 이중에서도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보다 철저한 통제밑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실례로는 공산당이나 괴뢰정권 이외에서의 신문사·출판사·방송국을 비롯한 보도기관 운영은 일체 허용되지도 않으며 「매스·미디어」는 보도일체를 공산당의 선전 선동부에서 관장하여 이를 통한 사상교육이 집요하게 되풀이 되고 있다. 공산당은 허위선전이 수없이 반복되면 진실처럼 주민이 믿게 되는 것이라고 타산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리하여 북한에서의 「매스·미디어」는 공산독재제도를 합리화하고 이에 맹종하도록 주민에게 강요하는 기만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5) 당원 및 사회단체원 교육

북괴노동당의 당원과 사회단체원에 대한 교육은 극성적인 것으로서 간부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간부교육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 특색이다.

노동당간부 및 간부양성 교육기관으로는 송도정치경제대학,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원 중앙당학교 및 공산대학등이 있으며 피교육대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원의 경우 당의 파장 이상으로부터 부수상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가증스러운 교육실시 계획은 초급당원들에게는 매주 토요일(14—18시)에 의무적으로 당투쟁사 등의 정치학습과 기술학습을 강요하고 있고 일반당원은 주기적인 시행계획에 의해서 주당 8시간의 정치학습 등을 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밖에 각급 사회단체원의 교육은 학습과제조차도 당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사노청’의 경우 1개월에 4회, 매주토요일에 다음 내용의 학습을 되풀이 하게 되어 있다.

(표 3) 사 노 청 의 학 습 내 용

과 목	시 간	내 용
당 정 책	22시 ~ 23시	국가경제계획, 당론원
마르크스·레닌주의	"	사회개발법칙, 공산주의 사상
계 급 교 양	"	지주 및 자본가, 사회주의 승리
기 술 학 습	"	시비법(施肥法), 식물재배법등
노 동 자 교 육	"	국어, 수학, 지리, 역사, 생물

자료 Mig 제공

(6) 학원에서의 공산당조직

북한에서는 어떠한 기관이나 지역에서도 공산당의 조직이 없는 곳이 없으며 학원에서까지 실질적인 실권자는 당책임자로 되어 있다.

대학의 경우, 중앙당 또는 도당에서 파견된 당비서가 있으며 이들의 직위는 거의 부총장, 부학장으로 되어 있으나 대학당위원회를 통해서 총장과 학장을 통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학원내의 상호감시와 견제하는 조직으로 어느 개인의 독주를 막고 오직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서 교직원과 학생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또한 대학당위원회 아래는 학부별 조급당과 단체가 있고 학급별로 당세포가 조직되어 있어서 이러한 당조직들은 학원내의 전반적인 일에 간섭하게 된다. 심지어는 각과별로 분과위 또는 강좌 회담이 있어 교수는 여기에 토의를 거친 후에야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토의내용은 공산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수업을 통해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거의 논의되게 마련인 것이다.

3. 북괴의 교직자

공산당은 교직자를 “인민교원의 영예”, “인간정신의 기사”라고 추켜올리고 있으나 기실은 지식인에 대한 불신의 태도로 교직자를 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면으로 보아서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 의문이 갈 정도이다.

그 예로서 평남 순천군의 어느 중학교 교장은 연간 불과 3개월 밖에는 교장으로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줄곧 당 지시에 의해서 타사업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평교사의 경우도 심지어 ‘인민반’의 회의지도로부터 당정책 선전원으로 동원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와같이 주야의 구별없이 본래의 직책외에 동원되어야만 하는 교직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일반 사무원보다는 다소의 우대를 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소위, 인민학교 교원이 월 50원~55원, 고등학교의 교원이 월 65원~70원 정도로 추산되는 데, 나이롱양말 한 켤레에 7원, 모직양복 한벌에 250원~300원이고 보니 물가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실정이다.”⁷⁾

또한, 이들 교직자들은 교단에서 말 한 마디 부주의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심정에서 교편생활을 영위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슴아픈 현상은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와 한국사 자체도 본의와 달리 다른 각도에서 수업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역사상의 위인들까지도 양반계급에 속한다고 하며 비난하여야 하고 심지어는 안중근열사까지도 멸시를 하여야만 했고 또한 구미각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애국자들을 ‘반동분자’로 가르쳐야만 하는 형편이다.

또한 가소로운 실례로서는 “어느 교사가 생물학시간에 소위 당성이 희박한 수

7.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p. p 332~333

— 이론비판과 북한분석 —

업”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노동자로 전락된 예가 있다.

그는 해방전, 그렇게도 혼했던 ‘정어리’가 해방을 전후해서 우리 연안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다가 학교당위원장으로부터 당성이 없는 교원이라고 지목된 것이다.

“학교당위원장의 말은 ‘정어리 떼’가 연안에 접근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견해로만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미제국주의자들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였고 해방 후에도 원자탄의 수중폭파실험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해류의 대변동이 일어나 이 영향으로 우리 연안에 접근하던 ‘정어리’가 오지않게 되었다고 하므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당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 이와같은 사실들은 북괴의 교직자들의 생활상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북괴의 주민교육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전 주민을 “공산주의 역군”, “적화통일의 희생자”로 개조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공산주의의 맹종자가 된 북한의 동포,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생활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북한의 젊은 세대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현 시점에서의 대비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로 심각한 과제이다.

3. 우리의 국민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교육 현황

우리의 국민교육의 목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주체성이 강한 민주적 한국인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1968년 12월 5일에 제정을 본 국민교육헌장에서 국민교육의 뚜렷하고 바른 방향과 지표를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이 헌장은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바탕을 두고 국민생활의 지표로서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감에 의한 새 역사의 창조를 교육의 지표로서는 개인 윤리면에서 창

8.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제문제 p. 157

조와 개척정신을 사회윤리면에서 협동정신을, 국가윤리면에서 국민정신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우리의 국토통일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관계당국에서는 작금 다음과 같은 승공통일 교육목표 설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1) 민족적 국가관의 확립
- 2)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 3)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능력
- 4) 공산주의 도전의 성격과 현상의 이해와 이에 대한 대비능력
- 5) 승공통일에 관련된 국제적 시야에서의 전망
- 6) 민주승공통일의 신념

이상에서와 같은 목표아래서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실태와 이를 위한 전문가의 훈련상황은 어떠한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실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교육

학교교육은 국민교육의 중핵으로서 학생수만도 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800여만에 달하고 있으며 교직자는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부록 2)

통일의 명제를 놓고 생각할 때 학교교육은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에서 국토통일에 대비한 승공통일교육의 획기적인 문교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963년이며, 그때서야 비로서 초·중·고등학교에 반공도덕시간을 설정하고 교과서의 새신을 가져온 것이다. 즉 국민학교에서는 ‘바른생활’, 중·고등학교에서는 ‘민주생활’과 ‘국민윤리’라는 교과서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승공통일문제를 다루게 하였다.

그리고 이밖에 따로 학교에서는 ‘민주통일의 길’, 고등학교는 ‘자유수호의 길’을 국정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 이전의 실정을 1963년 ‘한국철학회’에서 문교당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북공산 괴뢰정권에서는 고등학교부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그들의 유일한 철학이라 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이에 배정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항할만한 조치가 우리 한국 대학교육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반공을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의 앞날을 위하여 현상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긴급한 일이 아닐 수 없아옵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라

는 서두르켜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특히 도의과정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6개항에 걸쳐 지적하였고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도의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할 것을 전제하고 철학의 일반이론, 공산주의 철학의 비판, 한국사상, 현대사조와 자유민주이념, 그리고 민주정신의 강화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날의 이와같은 현상은 오늘에 와서(1963년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학교 교육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시간배당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표 4) 학교 교육의 시간 배당

학 교 별	주당시간배당	교 과 내 용
국민학교	2 시간	바른생활
중 학교	"	민주생활, 승공통일의길
고등학교	약 1시간	국민윤리, 자유수호의길
대 학교	평균 4학점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은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 6. 25당시 피뢰들의 만행이나 간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부록 3)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도의교과서인 '민주생활' 외에 '승공통일의 길'과 '자유수호의 길'이 별도로 있으나 한 권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도덕'과 함께 학습하게 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공교과서의 내용은 과거의 '민주통일의 길'등에 비하여 (부록 4, 5)에서와 같이 많은 보완이 있었고 비교적 충실한 것이긴 하나 흡족하기에는 거리가 있는듯 하다. 여기에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승공교육의 담당교사가 대부분 사회과 교사이거나 학교에 따라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효과면에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문교당국은 중·고등학교에는 철학과 출신의 전임교사를 일부 배치하였고 계속해서 연차별 교육공무원 수급계획과 교사훈련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으며 여기에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이밖에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과거 등한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문교당국은 성의 있는 지도계획에 의거 각대학에 지침을 시달한바 있고 현재는 교양과정의 한 과목으로 문교부에서 출간한 '국민윤리'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과외자치활동등을 통해서 사상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공무원 교육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해서 각 시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고, 특수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체신, 세무, 건설공무원 교육원이

있다. 또한 경찰학교, 교도관 학교등의 양성기관과 이밖에 각종 교육기관이 있으며, 승공교육훈련에 있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중앙정보학교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공무원교육에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중앙공무원 교육원으로서 이의 승공통일교육의 번모를 찾아보면 다음(표 5)에서와 같이 승공교육내용의 비중이 너무나 근소한 실정이다.

(표 5) 공무원의 승공교육실태

과 정	구 분	총 교육 시간	승공교육시간	비 율 %	평 균
행정관훈련과정		264	12	4.5	2.76%
초급관리자훈련과정		132	6	4.5	
훈련담당관훈련과정		33	0	0	
교관훈련과정		66	3	4.5	
직무훈련과정		298	7	3.9	

(68년 중앙공무원)

본표는 68년도의 실태로서 현재는 보다 발전되고는 있으나 이로써도 지난날의 공무원에 대한 승공교육실태를 짐작할 수 있겠다.

최근에 와서는 국토통일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게 되자 이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달리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중앙정보학교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승공교육은 상당한 수준의 것이었고 각급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시간을 이에 할애하고 있음은 다행한 현상이다. 그 예로서 교도관학교의 경우 다음(표6)에서와 같이 승공교과시간 외에 특강시간을 설정하여 승공정신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표 6) 교도관의 승공교육 실태(71년도계획)

과정별	구 분	총 교육 시간	승공교육	특 강	비 율 %	비 고
전문부(간부양성)		561	8	10	1.4	
고등반(중견간부)		99	2	5	2.2	
교도반(5급감류)		13.2	2	2	1.5	
교관 교육 반		132	2	5	1.5	

(3) 군 교육

분단국가로서 최대의 위협은 군사적 대결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 보다도 군인의 사상적 무장문제는 실로 국가적 과제이다.

이의 중요성에 따라서 국방부에 정훈국을 두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본부, 그리고 각군 사령부에 각각 정훈담당기관 및 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육군과 해군에 정훈학교를 설치하여 지도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국방부의 1971년도 기본 교육목표를 보면

승공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승의 감투정신을 배양하고 참신한 생활기풍을 조성하며 국민일체감을 육성하여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내용은 자주국방의식고취 필승의 감투정신, 승공정신 함양, 참신한 생활기풍 진작, 국민일체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배당 시간에 있어서는 기본 정훈교육으로서 주당 1시간과 지휘관 정신훈화시간이 주당 1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각군별로 별도 자체교육계획에 의하여 정훈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휘관에 따라서는 특히 자체교육에 주력하여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로서는 군의 정신무장 강화책으로서 1967년도부터 '군인정신 지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제의 권위자와 판계관 등 20여명으로 구성하여 장병들의 정신지도면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대책을 수립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애로점은 교재의 부족, 예산의 빈약등으로 충분한 계획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인듯 하다.

(4) 사회단체 및 산업체의 현직교육

사회단체나 기업체등의 교육시설이 공무원 훈련기관에 못지 않게 시설면이나 내용에 있어서 충실한 것이 많다.

예로서 한국전력기회사의 사원 연수활동은 오히려 학교기관 보다는 훌륭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Y.M.C.A 지도자 훈련계획이나 사회사업지도자 훈련계획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체등의 경우도 동방생명의 직원교양 실시계획이나 국영기업체의 사원연수계획 실천등은 상당한 수준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교과내용이 기업이나 사업중심의 것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관에 입각한 정신교양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내용의 국가적 조정을 요하며 업무면에서의 질적 향상 문제와 병행하여 거시적인 면에서의 승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이 절감되고 있다.

(5) 국민운동기관의 교육활동

국민운동기관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실적이나 규모로 보아서 재건국민운동 중앙회라고 할 수 있겠다.

재건국민운동사업은 국민교화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언커크」의 12차 연례보고서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군사혁명의 정신적 차원을 거양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도과업은 재건국민운동에 위임되었으며 동 운동본부는 범국민적으로 인간개조와, 자립정신과, 향토개발, 그리

교 국민단합과 민주주의 창달을 위한 교육계획을 실천중이다”⁹⁾라 하고 있다.

이로서도 재건국민운동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의 교육제도로서는 본부에 시·군단위 이상의 지도요원을 교육 훈련하기 위한 중앙교육원이 있고 도지부에는 읍·면단위의 간부요원의 훈련을 담당하는 도지부 교육원, 시·군에는 자연부락단위의 청년회와 부녀회의 간부요원 교육 훈련을 위한 향토 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다.

교육대상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중견지도요원의 양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고 중기에는 일선지도요원의 양성,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범국민운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인간개조와 사회구조, 그리고 사상적 통일과 단합을 통한 향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아래 ‘맑은 사회 만들기 계획’(부록 6)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승공통일문제를 보다 아프로취(Approach) 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의 교육과정을 보면 정치사상(10시간~20시간), 민족사상(10시간~15시간), 국제정세(5시간~10시간), 한국경제(5시간), 국민운동과 향토개발(40시간~50시간), 실무(5시간), 정서교육(5시간)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계획면에서 ‘1일 순회교육’ 제도 등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전문가 훈련 및 연구기관 실태

(1) 전문가 훈련실태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면 이에 대한 연구가, 교직자, 교육행정가, 사회지도원등을 망라해서 말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훈련에 대하여는 국민교육의 실태를 통해 국민교육의 미흡과 애로점의 절대적인 요인이 전문가의 빈곤과 훈련의 결여에 기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실은 국민교육의 전문가 훈련계획 자체가 최근의 일로서 일천하며 국민교육에 중핵을 이루고 있는 학교교육에서도 이를 위한 전문가(전담교사)의 훈련계획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문교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직 교원의 훈련은 교원교육원을 비롯하여 각급 연수원에서(부록 7)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교육연합회에서 각종교원 재교육강습회와 교육연구회 등을 통해서 훈련을

9. 민족의 등불 p. 205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국토통일, 또는 승공교육 훈련과정의 설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교당국이나 교직원체인 대한교육연합회에서는 금년도부터 이의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기에 국토통일원 당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요청되고 있다.

이밖에 국토통일에 대비한 승공교육훈련을 담당하여온 기관으로는 한국반공연맹과 자유센타등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자유센타의 경우를 보면 196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지도자훈련에 임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지원이 여의하지 못하여 한국반공연맹에 의존하여 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의 의욕과 실적은 지대한바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원의 학칙에서 찾아보면 “본 교육원은 「자유센타」 설립 취지에 입각하여 반공이론과 그의 광범위한 운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반공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연구과정과 일반과정으로 구분하여 연구과정은 종합적 반공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다함을 목표로 하여 반공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오하고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촉진하여 학술과 실사회에 걸쳐 공산주의자를 능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수업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계획단계에 있는줄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칙으로 보아서는 서독의 「오스트·울레게」와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운영내용에 있어서는 재정문제등으로 해서 천양의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과정은 그간 크게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그 편성에 있어서 반공요원반, 교사반, 공무원반, 군인반, 학생연구반, 교포반, 언론인 및 경제인반 등으로 세분하여 훈련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교육기간은 1주 내지 4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사반에 있어서는 직위 승진에 필요한 강습시간을 이로도 대체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 더욱 효과적이었다.

(2) 연구기관 실태

공산주의 내지 북괴에 대한 연구와 통일문제연구의 관계기관으로는 정부조직에서는 국토통일원을 비롯해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외무부, 문화공보부 등 수많은 관계부처(부록 8)가 있으나 국토통일원 발족의 일천과 부처 중심인 행정체도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단계이며 정부기관 밖에서 국토통일과 공산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으로는

한국반공연맹에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에 아시아문제연구소, 그리고 국제문제연구소, 내외문제연구소, 공산권문제연구소 등이 있으며 실로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이 중에서 한국반공연맹의 부설로서 1967년에 발족한 공산주의 문제 연구소에 사업내용을 보면 공산주의 이론 및 공산권 실태분석과 반공이론 연구, 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한 종합적 정책자료제공등으로서 현재 공산주의 이론과 국토 통일에 대비한 교육문제 등의 다수의 서책을 발간하였고 공산주의 문제연구(계간), 공산주의 비판(격월간), 자유의 증언(월간), 자유의 종(월간) 등의 계몽지를 발행하여 국민계몽에 진력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부설인 아시아문제연구소의 연구계획에 있어서는 북한의 통일방안 연구, 북한의 대일관계, 북한의 대 AA관계, 북한의 수원(受援)연구, 북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교육의 공산독재의 정책적 기초등 비교적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북한 공산권 연구총서가 발간되고 있고 수차례 공한 연구발표회 등을 가져 연구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1966년에 가진바 있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문제세미나 등은 의의 깊었고 거반에 있었던 통일문제 「십포지음」은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밖에 공산권문제 연구소의 경우는 1963년 내외문화사로 발족하여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비판전서(전 7권)의 발간을 비롯해서 북한총감을 내놓았고 그 사업계획에서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몇몇 연구기관의 실태를 검관하여 볼 때 아직도 학문적 견지에서 연구실적을 가진 기관은 근소한 것이며 대부분이 정보분석과 선전자료 제공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감이 없지 않다.

3. 승공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구조

우리 국민의 반공 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철두철미한 세뇌교육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는 북괴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

다음 (표 7)은 20세~29세의 청장년을 대상으로 문화공보부에서 조사한 것인데 청장년층이 공산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선명히 부각시켜 주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과의 비율의 차이는 지방에 대한 국민교육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7)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상태

지역	구분	특 재	보다나은 경제생활	무력철락	속 칭	경 제 적 등	기 타	모르겠다
서 울		86%		6.7	3.3	2.8	0.6	0.6
지 방		77.8	0.7	5.5	4.4	2.2	9.7	0.8

단위 Percentage

※ 반공시책에 대한 전국 국민 여론조사 결과(1968. 4) p.p 238-239

또한 다음 설문에서 젊은 세대와 전세대의 사고의 차이와 공산당에 대한 인식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설문내용은

“삶에 대한 나쁜 정부는 다음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말하십시오.”
이며 그 순은

- | | |
|-----------------|----------------|
| ① 공산주의 정부 | ⑤ 정치적으로 불안한 정부 |
| ② 부패한 정부 | ⑥ 사회적으로 혼란한 정부 |
| ③ 개인의 자유가 없는 정부 | ⑦ 기타로 되어 있다. |
| ④ 경제적으로 빈곤한 정부 | |

(표 8)

연령	정부형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 수		34.0	17.9	19.6	8.5	6.9	4.0	8.7
20 ~ 29세		22.8	20.0	24.4	10.0	11.1	8.9	2.8
30 ~ 39세		38.3	16.9	18.6	7.8	6.6	2.4	4.0
40 ~ 49세		44.5	16.8	19.3	5.9	4.2	2.5	6.6

상 p. 244

단위: 백분율(%)

이 표는 매우 시사적이다. 총수로 계산해 볼 때 가장 살기나쁜 정부로서 공산주의 정부를 택한 사람이 34%에 해당하는데 20세~29세의 젊은층은 22.8%에 불과하며, 40세~49세의 장년층은 44.5%이다. 또한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의식이 개인주의적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정부를 공산주의 정부에 못지 않게 싫어하는 층이 상당수인 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정부가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관련적으로 생각할 때 이 조사를 통해서 승공교육의 중대성을 새삼 느끼게 되며 특히 젊은 세대의 사고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국토통일문제에 대한 반응에서도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선 1960년 11월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표 9. 10)에서 보면 61.1%의 절대수가 통일방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9) 국 토 통 일 방 안

방 안	인 원	비 율
북 진 통 일	143명	6.0%
중 립 국 화	126	5.3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455	19.0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통선거	75	3.1
유엔 감시하의 남북선거	105	4.4
연 방 제	8	0.3
기 타	20	0.8
모르겠다.	1,461	61.1

(표 10) 출 신 지 별 통 일 방 안

방 안	지 역	이 북		남	
		도 시	지 방	도 시	지 방
		37명 100%	50명 100%	286명 100%	1,999명 100%
북 진 통 일		5(13.5)	10(20.0)	26(9.1)	101(5.1)
중 립 국 화		6(16.2)	2(4.0)	24(8.4)	93(4.7)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선거		11(29.8)	16(32.0)	74(25.9)	352(17.6)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통선거		1(2.7)	3(6.0)	11(3.8)	60(3.6)
유엔 감시하의 남북선거		3(8.1)	2(4.0)	24(8.4)	74(3.7)
연 방 제				3(1.0)	5(0.2)
기 타				4(1.4)	16(0.8)
모르겠다.		11(29.8)	17(34.0)	120(42.0)	1,298(64.9)

특히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의식구조이다. 1962년 10월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표 11)에서와 같이 석연치 않은 통일관을 지닌 학생이 상당수인 것이다.

(표 11) 국 토 통 일 의 효 과 적 방 안

방 안	지 역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선거	서울(990명) 255(25.8%)	지방(989명) 254(25.7%)
중립국 감시하의 "	33(3.3)	55(5.6)
국제 "	47(4.7)	58(5.9)
유엔 감시하의 북한만 통선거	56(5.7)	45(4.6)
북 진 통 일	240(24.2)	201(20.3)
연 방 제	19(1.9)	28(2.8)
자주적 통일(남북협상)	253(25.6)	279(28.2)
기 타	15(1.5)	16(1.6)
모르겠다	66(6.7)	42(4.7)
무 응 답	6(0.6)	6(0.6)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1968년 4월에 실시한 반공시책에 대한 여론조사와 통일시기에 대한 조사 및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에 나타난 반응이다. (표 12, 13, 14)

(표 12)

달 성 시 기	서 울	지 방
5년 이내(1970년 이전)	4.0%	6.3%
10년 이내(1970년대)	10.9	15.5
20년 이내(1980년대)	5.6	8.4
20년 이후(1980년 이후)	3.7	1.3
언젠가는 달성할 것이다	65.8	58.3
모르겠다	8.3	8.7
무 응 답	1.7	1.5

(표 13) 통 일 논 의

논 의	서 울	지 방
(자립변영과 정치적 안정달성시기까지 통일논의 입장)	43.8%	35.7%
지금당장 통일준비 작업착수	41.8	39.8
모르겠다	12.0	23.2
무 응 답	2.4	1.4

(표 14)

장 해 요 인	서 울	지 방
국민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22.3%	17.8%
김일성의 독재정권	28.6	29.8
국 제 정 세	11.0	7.1
미국의 미온적 태도	4.2	3.3
중공·소련의 방해	16.2	7.4
자유변영의 결말부족	3.2	1.3
기 타	1.9	0.9
모르겠다	12.5	31.9

총수 서울 301명 지방 606명

최근에 와서는 1969년 말 국토통일원에서 이에 대한 것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다 음표에서와 같이 종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15) 국토통일성취의 시기

통 일 시 기	비 율
10년 이내(1970년대이내)	39.5%
10년내 불과	19.5%
모르겠다	40.5%

(표 17) 국토통일이 안된책임

북 과	48.46%
합 국	2.38
북괴책임약간	17.53
한국책임	1.29
공동책임	4.60
모 르 겠 다	22.69
무 답	6.64

(표 16) 전쟁없이 국토통일은 가능한가

도저히 불가능	37.9%
가 능	21.7
무 답	20.2
모르겠다	19.7

작금, 통일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뜨거운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이상의 여론 조사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국토 통일문제의 인식이 전 국민적인 것이 되기까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겠다.

이러한 현상을 빚어낸 원인으로서 지난날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라는 구호만 내걸고 방황제시에 있어서 뚜렷함이 없었고 공산주의 내지 북괴에 대한 연구 분석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거기에서 국민교육이 실효성있게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북괴는 사상적 대비면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공산당을 절대적 권위로만 믿게 하고 획일적인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당의 지침아래 사상교양을 강요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느면 다양한 현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산당과 같은 절대적 권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4. 문 제 점

(1) 통일관의 다양성

북괴는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이라는 구호 밑에서 공산당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기본 목표를 두고 철저한 사상교양을 통해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로 획일성을 갖추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국민의식에 있어서도 통일론이나 승공사상면에서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면 민주주의 제도의 강점이기도 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로 변모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반일 북괴의 사상적 도전에 대하여 계속 각기 다른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면 사상적 대항에 있어서 약화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통일관의 다양성은 전체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대안의 결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산당이나 북괴에 대한 인식이 6·25동란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층과 기성 세대간에 사교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2) 승공교육의 경시

북괴가 사상교양을 통해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공교육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시되고 있는 경향에 있고 더욱이 사회의 중견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교육에서 등한시하여 기초적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에 허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실정이며 승공교육을 위한 전문적 교사의 양성이 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비 전문가에 의하여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성을 결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론적인 면에서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의구심마저 가져오게 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3) 승공교육의 다원성과 비조직성

북괴는 당조직을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사상교양을 실시하여 동일한 내용이 동시에 전 지역적으로 주입되고 있으나 우리는 조직면에서 거론할만한 것이 없고 미약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호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관장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어 각기관 중심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거국적인 것이 못되고 있다.

(4) 승공교육 내용의 비종합성

교육내용이 거의 북괴의 만행이나 공산당모순의 폭로 일변도이어서 높은 차원면에서 종합성을 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은 반공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으나 이것만으로는 공산당의 위장된 이론과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으로도 전하여 올 때 이와 대결해서 항복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승공교육 내용의 종합성 결여는 사상적 무장에 있어서 중대문제인 것이다.

(5) 연구 및 훈련기관의 미비

승공통일에 따른 문제연구는 그간 관계 부처와 몇몇 연구기관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국토통일원이 발족되면서부터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는 있으나 오랫동안 너무나 타부시되어 왔고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던 관계로 아직도 근시안적인 영역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방향과 목적이 주로 북괴의 정보분석이나 선전자료의 제공등을 위한 것으로서 거시적 면에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연구기관이 근소한 실정이다.

훈련기관의 경우는 더욱 한심한 형편으로서 자유센터 교육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연구반은 개설조차 못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훈련에서 승공교과 담당교사 훈련의 과정조차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승공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 실시에 있어서 기초적 작업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6) 전문가의 빈곤

과거 국토통일 문제나 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등한시하여 왔던 관계로 이에 관심을 가진 인사가 있어도 의욕적으로 국토통일 문제 등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여 왔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조성의 미흡과 연구기관의 미비등으로 자신과 열의로서 국민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가의 희소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7) 예산의 부족

재정문제는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계획도 열의를 보이는 것 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재정적 지원이 이에 상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날 원대한 이상으로 실천단계에 있었던 「자유센터교육원」과 반공연맹에서의 국민교육 지도자 즉 전문가훈련 계획도 재정문제로 계획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할 수 있는 처우책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국토통일원의 경우도 전문가 훈련을 위한 전문가의 발굴, 또는 교육 및 전문가 훈련계획 수립에 수반한 예산조치가 극히 미미한 상태인 바 이는 감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4. 전문가 훈련방안 모색

전장에서 의 고찰(考察)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토통일의 과업은 통일된 강한 민족 의지의 형성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며 그를 위하여는 범국민적인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전개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승공통일 지도이념의 확립과 국민교육의 전문가 훈련이 무엇 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긴요성에 비추어 전문가의 훈련이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고 따라서 지적한바 있는 허다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우리의 통일문제가 수세적인 위치에서 타부시되어 왔고 따라서 제반 여건조성이 여의하지 않았던데 연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와 전문가 훈련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저 한다.

1. 정 책 방 향

(1) 승공사상 지도이념의 확립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나, 생활 수준을 비교하거나,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는 자유민의 수를 보거나, 소련에서 「리벨만」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든지, 최근 동구라파의 자유화경향 등 여러가지 사실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통일관이 다양성을 띄고 있음은 국민교육 실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저한 국민교육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함때 연유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공산당에게서 하나의 운동인 동시에 체계적인 사상이며 정신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의 이론적 체계를 제압할 수 있는 대항적, 사상체계 즉 승공사상의 확고한 지도이념의 확립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 국민,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산치하의 생활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에 대하여 이론과 정신적 면에서의 사상무장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교육의 종합적 국가계획 수립, 승공사상 지도 이념의 확립을 위한 연구와 승공교육 등을 발전시킬 전문가의 훈련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선하여야 할 것은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종합적 국가계획의 수립이다.

현행 부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교육을 비롯하여 학교 교육에서의 통일교육 각종 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교육 활동 등을 보다높은 차원에서 종합 검토하고 국토통일원이 중심이 되어 각종 부처와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여 국민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 국가계획 수립이 시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물론 독자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거쳐 국가종합 개발 계획이나, 장기종합 교육계획, 즉 1972년부터 1986년까지의 교육의 전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 계획등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전문가 훈련계획이 과학적인 기초 조사를 근거로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교육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H.M. Philip」의 주장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는 것으로서 그는 교육계획

을 국가발전 계획과 합치시키기 위한 5개의 방향 및 12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의 5개의 방법이란 사회적 방법, 인력방식, 종합방식, 인적망심(望深) 측정 방식 등으로 되어 있다. ¹⁰⁾

훌륭한 여행은 주도면밀한 계획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종합성을 유지하는 데서 성과를 보다 더 거둘 수 있는 것이다.

(3) 전문가의 발굴과 연구의욕 고취

그간 의욕적으로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미흡으로 이에 관심을 가졌던 인사들도 외면하여 왔으며 일부 인사들은 통일문제 등의 전문가의 규합을 시도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뒷 발침에 걸려로 각기 분산되어 있거나 미미한 활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다 폭넓게 전문가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 발굴작업은 전문가 훈련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적 방법에 의한 선정이 되어야 한다. 즉 기성전문가.

단기간의 훈련으로서 유능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자.

교직전문가, 또는 국민에게 영향력있는 위치에 있는 훈련대상자 등으로 세분하여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문제이며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 분류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처분의 처우책과 연구분위기 조성등등이 필히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4) 교직전문가 훈련대상

승공교육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시되고 있는 경향에 있을 뿐 아니라 이것조차도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서 교육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전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승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전문가의 훈련 즉 승공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훈련이 지급(至急)하다.

이에 대하여,

문교당국은 국토통일원과 협조하여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일차적으로 국토통일원, 반공연맹 또는 중앙정보 학교의 교육시설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다.

또한 문교당국으로서는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보조기관(반연 통일교육과)의 설

10. H.M. Philip,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Educational Planning Paris UNESCO, 1964

치도 바람직한 일이다.

(5) 충분한 예산조치

어려운 국가재정에 예산염출은 지난한 문제라고도 하겠으나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 문제는 국가적 과업이므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감한 배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기관, 훈련기관 그리고 전문가의 훈련과 연구에 따른 흡족한 재정적 뒷 받침으로서 활발한 연구와 교육훈련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예로서 통일문제 연구는 자료의 획득부터가 용이하지 않으며 연구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상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등이므로 이에 특별한 지원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더욱이 사기진작책으로서도 연구비등의 충분한 계상(計上)이 절대 요청되는 것이다.

(6) 전문가 훈련 기구설치

국민교육의 종합계획과 전문가 훈련 계획에 의해서 훈련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즉 전문가 훈련의 본산이 될 수 있는 훈련원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적인 훈련기구는 각 원·부·처 또는 각 교육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교육 기관과는 여건이 상이한 점에서 우선 연구기관의 형태로서 기성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진지한 연구를 통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훈련을 담당케 하여 점차적으로 훈련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2. 구체적 방안

(1) 전문가 훈련의 기본 계획수립

국민교육의 목표는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국토방위를 위한 무기를 생산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즉 사회에 여러가지 실용적인 수요에 응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교육의 목표나 계획은 먼 장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전문가 훈련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국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국가종합 개발계획과 장기종합 교육계획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정세전망, 군사력등의 국력대비 분석등을 통해서 설정된 국토통일의 과정에 의하여 거기에 적응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의 소백상식(素白常識)으로 국토통일의 과정을 전문가 훈련

계획을 모색하기에 앞서 몇 단계로 설정하여 보았다. 물론 단계구분에 있어서는 각기 다를 수도 있겠고 이의 고려요소인 정세전망이나 국내외적 제 여건의 관점 자체도 다를 수 있는 것이다.

“8·15선언”이 있는 직후 아시아문제 연구소에서 주관한 한국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콜럼비아대학 교수「Brzezinski」는 한국통일 논의에 ‘통일 4단계’¹¹⁾을 적용했다고 한다.

즉 초기의 제 1 단계는 상호 충돌 과정이고, 제 2 단계는 충돌과 경쟁이 혼합된 단계이며, 제 3 단계는 제한된 협조의 시작이 추진될 단계이고, 마지막 제 4 단계는 통일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하였고 한국의 오늘의 상황을 제 2 단계에 속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본단의 쓰라림과 복피의 잔악상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의 감정을 십분 이해한데서 구상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A Etzioni」 교수의 정치통일론(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과정상의 17개의 단계적 단절¹²⁾도 비록 타국의 경우를 상정(想定)하여 이론모형(理論模型)을 만든 것이지만 우리의 통일과정 설정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전 최종단계에서 복피와 타협의 기운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

(표 18) 국토통일의 과정

구 분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제 5 단계
북 비	준비확장 간접침략 전국요새화	경제성장의 둔화 주민생활의 불안정 간접침략에 대한 회의	자유화 운동의 대두	무력적화통일의 좌절감	수세적인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제의수락
대한민국	경제발전 사회안정 국방력강화	경제의 균형발전 국방력강화	국제적지위향상 국민소득증대	국위선양 계속국민소득증대	공세적인위치 국토통일안제의
자유진영	경제발전				
공산권	경제발전의 둔화 정치적 분열	자유화운동의 대두	공산이론의 수정		
중립국	경제발전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	공산세력 침투감퇴	자유진영과의 유대강화		

11. 신동아 70년 10월호 p. 75

12. " pp. 76~78

이 곧 통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응 국토통일의 과정이 설정되면 이에 적응한 단계별 국민교육 계획이 구상되어야 하며 국민교육의 대상이 전체 국민이라는 점에서 계획은 단계별 대상별로 세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전문가 훈련계획을 구상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이므로 개괄적인 안(案)만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전문가 훈련 기본 계획안을 구상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가장 유의되어야 할 점은 국민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총칭으로 타계획 및 관계 기관과의 연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도면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제시한 국민교육 계획과 전문가 훈련 계획은 단편적이며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

(표 19)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계획

연 도	단 계	기 본 목 표	교 육 계 획 및 행 정 사 항
1970	1	기본확립	1. 지도층의 통일이념교육 2. 연구기관 정비 및 지원 3. 전문가 훈련원 설치준비
1970 1972	2	체제정비	1. 전문가 훈련원 설치 2. 국민조직 및 교육체제 개선 3. 국민교육의 강화
1972 1973	3	대비태세완비	1. 국민교육의 강화 2. 대북피·사상공세준비
1973 1975 1975	4 5	통일공세에 대비 본격적인 통일공세대비	1. 대북피 사상공세 2. 범국민운동 전개 1. 대북피 사상공세의 본격화

(표 20) 연차별 전문가 훈련 계획

연 도	단 계	국 민 교 육 의 기 본 목 표	행 정 사 항	전 문 가 훈 령 계 획
1970	1	기초확립	1. 전문가의 발굴 2. 전문가의 분류 3. 훈련계획에 따른 지원 4. 훈련기구 설치준비	1. 연구의욕 고취방안 강구 2.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의 개최 3.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연구과제 부여 4. 바람직한 훈련안 수립
1970 1972	2	체제정비	1. 훈련기구 설치 2. 전문가 지원 3. 전문가 단체 구성	1. 중견전문가 훈련 실시 2. 교직전문가 훈련 실시(문교부) 3. 사회지도원의 훈련 실시
1972 1973	3	대비태세완비	1. 훈련기구의 확장 2. 각급교육원의 전문가 배치	1. 전문가의 단체 활동을 통한 훈련 2. 전문가의 분류에 따라 재훈련 실시 3. 관계 공무원의 훈련 실시
1973 1975	4	통일공세대비	1. 행정지역별 지도 요원 배치	1. 공무원의 훈련 실시 2. 각급교육원을 통한 국민지도원 훈련 실시
1975	5	본격적인 통일공세준비	1. "	1. 지역조직을 통한 범국민운동지도요원의 훈련 실시

(2) 훈련대상자(전문가)의 발굴

국민교육 계획과 전문가 훈련계획이 확정되며는 이에 따라서 훈련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서 먼저 훈련대상자 즉 전문가의 선정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타 분야의 전문가와는 달라서 전 국민에게 호소력을 갖는 사상체제의 확립과 연구발전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의 훈련대상이므로 다각도로 그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계획의 적중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자원조사의 방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자원조사 즉 훈련대상자의 발굴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신고의 방법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 등 여러방안이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신고의 방법에 의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이차적으로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해서 파악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다. 신고의 방법의 장점으로서는 대상자의 의욕의 도(度)까지도 측정할 수 있으며 부담이 적은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의 조사작업은 다음 (표 21)과 같은 분류방식에 의해서 대상자를 구분 선정하는 것이 훈련실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 훈련대상자(전문가)의 분류

1	공산권문제 및 국토통일문제의 사계권위자와 연구가 또는 교육전문가. (기성전문가)
2	국토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직책에 있는 자로서 전문가의 자질을 갖춘자. (반공단체요원포함)
3	지역내에서 그 주민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사로서 국토통일문제 및 이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자(지방유지) 중중대표등.
4	사회단체 청년단체의 간부로서 전문가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자.
5	공산권 문제 및 국토통일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 교직자.
6	종교단체의 간부로서 전문가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자.

이상의 분류에 있어서는 전문가 훈련방침이나 훈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제시한 분류방식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나 이러한 방향에서 훈련대상자의 분류방침이 확정되어 전문가의 발굴을 착수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적성여부가 개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현 단계로서는 이상에 불과하며 어떠한 부작용마저 생(生)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기실 그렇게만 생각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전문가는 본래부터 뛰어난 지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에 임할 전문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교직전문가를 “전문가의 어머니”(mother of protessin)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서이다.

물론 높은 지능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전문직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교직전문가나, 연구가의 경우는 이 점이 절대적인 것이다. 한 예로서 교직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설적인 지능의 범위를 다음 (표 22)에서와 같이 표시하고 있다.

(표 22)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지능

I. Q	성공적으로 수행할 %
140	96
135	93
130	83
125	70
120	50
115	27
110	13
105	2
100	0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I.Q는 130 이상이어야 한다¹³⁾는 것이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이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문가 훈련의 대상자 선정은 여기까지도 유의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가 훈련 대상자 분류에 의한 시행계획

전항에서 전문가를 6개 훈련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의 분류에 있어서는 여러각도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함은 전술한 바와 같거니와 여기에서는 다만 6개 분류에 쫓아서 대상별로 각기 전문가 훈련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① 전문가 훈련의 대상자 I의 경우(기성전문가)

지난날 기성전문가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원이 너무나 미온적이었음은 기술한 바와 같다. 금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연구자료의 제공과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응분의 조치등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이들을 국토통일문제 연구의 본산인 국토통일원과 더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지급하다. 그리하여 국가 목표달성에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정신의 원천체가 되도록 뒷받침 하여야 한다.

이 대상은 모두 일가견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사교의 단합을 위하여는 연구 과정을 통한 훈련으로서 「세미나」 또는 연구발표회 등을 통해서 그들의 연구무드를 조성하여 주요 시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기

13. Lieberman Loccit pp.225~226

대할 수 있다. 이들은 다음 단계에 가서는 전문가 훈련에 중핵(中核)의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법으로는 국토통일원이 중심이 되어 과제를 개별로 부여하여 연구개발케 하므로써 자질을 높이는 방안등도 있겠다.

② 전문가 훈련의 대상자 2의 경우

국토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직책이나 홍보 및 국민제도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대한 전문가이거나 훈련에 따라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들의 훈련 및 활용에 있어서는 그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기관원이므로 본연의 임무외에 추가기능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국토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중앙부서에서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중앙정보부·외무부등 허다한 각 원·부·처에 동일직종, 동일직급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비상계획관과 공보관을 들 수 있겠고 자기 부처의 직능에 따라 많은 대상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각 원·부·처에 동질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비상 계획관과 공보관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비상계획관의 직능을 직제에서 찾아보면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과 정부비상훈련 그리고 예비관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와같이 비상계획관의 업무의 질이 승공이나 국토통일문제와 가장 밀접한 것이다. 또한 공보관은 국민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직책에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들로 하여금 (별표 23)에서와 같이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직능면에서 추가적으로 직제개정을 통해서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여 지원하는 일방, 예방 부처로서의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 계획을 수립케 하고 이를 국토통일원에서 종합 조정하여 확정 시행하는 방안도 있겠다.

여기에서는 현재 국토통일원과 각 원·부·처간에 업무의 연결성이 결하고 있는 마당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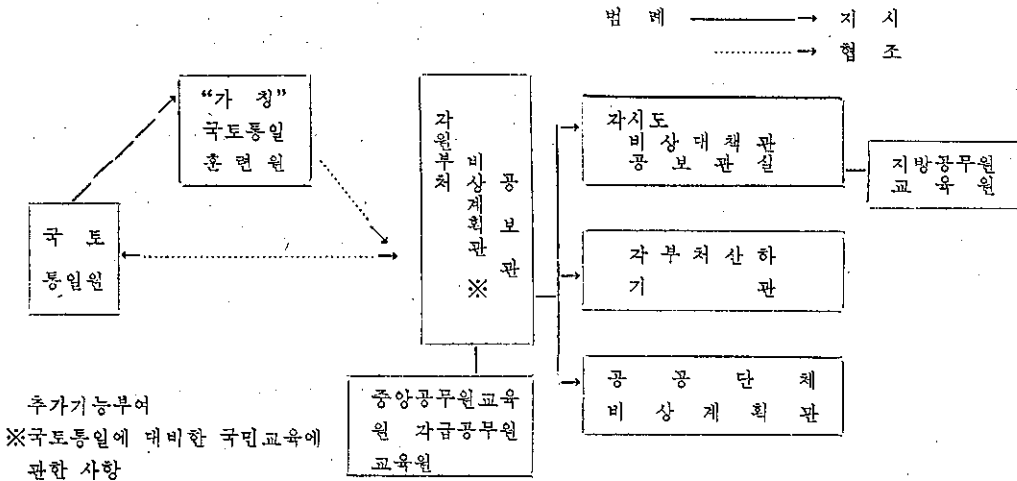
각 부처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드시 자기 부처마다 교육계획과 지도요원 훈련계획도 상이한 것이다. 즉 농림부의 경우는 농림부 및 산하기관 그리고 단체의 조직과 기능 또한 구성원의 질등에 의해서 자체에 맞는 교육계획과 이에 대한 전문가 훈련계획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 원·부·처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국토통일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장

하는 보조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 훈련실천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언급한 바 있는 관련직책의 종사자를 우선해서 일정한 기간 훈련시켜 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인 훈련방법으로서는 이들에게 국토통일에 관련된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외부부의 관련직책에 있는 자에게는 국토통일과 국제정세에 관한 연구 또는 내부부의 경우는 국토통일과 국내안정 문제 등등의 과제를 주어 연구케 하고 이를 기한별로 국토통일원에서 종합하여 평가하는 등의 방안이다.

여기에서 노력의 흔적이 현저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는 연구비를 제공하는 등 응분의 처우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23) 국토통일원 대 각원 부처간의 업무 연결도



③ 전문가 훈련의 대상자 3의 경우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인사, 즉 종중대표 또는 지방유지 등에서 국토통일문제와 이에 대한 교육문제에 관심과 자질을 갖춘자를 발굴해서 국민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가로 훈련하는 방안모색이다.

우리 사회는 구미지향적인 사회풍조와 더불어 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유교적인 사고가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족주의적 사회구조인 상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발굴해서 전문가로 육성하여 국민교육에 임하게 함은 교육 효과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지방일 경우 학교교사나 관계공무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성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의 입증은 다음(표 24)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4)

한 국 인 의 신 령 대 상

대 상 자	농민의 경우	도시민의 경우
친 척	63.7	48.5
인(隣) 인	14.2	16.4
친 지	12.6	11.8
불 신 령	10.4	16.4
개인 자 령 과	1.0	
성 격		
기 타	7.0	2.8
P . K	1.0	1.0
직 업 인		1.7
방 계 척 척		1.4

※ 국방학보 제 3집 P. 113

이의 훈련에 있어서의 난점은 거의 장년층에 속하며 지방에 분산 거주하고 있어 훈련실시에 더한 노력을 요하게 될 것이며 재정적 부담도 타 대상자에 비하여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의 훈련대상자를 지역별로 엄선하여 일정한 기간 훈련시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일방 국토통일원 당국과 지속성있는 연결을 맺어 간접적인 훈련으로 보다 향상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 국민적 국민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역할이 보다 큰 것이다.

④ 전문가 훈련의 대상자 4의 경우(교직자)

공산당과 대결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 하여야 할 다음의 주인공은 오늘의 학생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직전문가의 훈련문제는 지극히 심각한 문제로서 관계당국에서도 상당히 부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그 대상이 원래 많으며 장기훈련을 요하며 따라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장에서 북괴의 사상교육 실태나 우리의 젊은 층 즉 공산치하의 생활을 체험 못한 세대의 의식구조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교육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직전문가의 훈련이 어느분야 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문교당국은 춘각을 다투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국민교육의 일환으로서 국토통일원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획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선은 이에 대한 체제부터 정비하여야 하며 그 방안으로서 문교부와 각 시·도교육 위원회에 통일교육과를 설치하고 각급 교직자 훈련기관에 필요 과정으로서 국토통일과정을 신설하는 일방 초기에는 전문반을 설치하여 중견전문가 훈련에 주력하

여야 한다.

이상에서 훈련대상자 별로 몇개의 개별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관계기관과의 연결성유지, 개별계획의 실현성확보, 체제정비의 우선, 재정적 지원 및 여건조성 등 많은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4) 전문가 훈련기구 설치운영

전향에서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훈련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관장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으나 오늘의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국토통일문제를 주관하는 국토통일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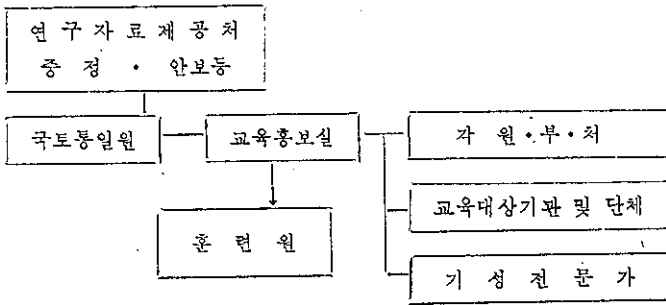
그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안이 있겠으나 다만 출견으로서는 다음(표 25)에서와 같이 국토통일원의 부설기관으로서 가칭 국토통일문제 전문 훈련원을 설치하고 교과내용 교육기한 등 시책적인 방침은 국토통일 교육홍보실의 주관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이 방침에 의거 훈련원에서 교육의 실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과정편성이 중요한 것으로 이는 전향에서의 대상별 계획을 감안하여 편성되어야 하며 현재 자유센터교육원의 과정편성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초창기에는 연구반으로 발족하여 여기에서 전문가를 규합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이 차기 전문가 훈련에는 중추적인 위치에서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훈련원이라기 보다는 연구기관의 성격을 띄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국민적 단합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연구, 국민사상 선도문제, 국토통일의 대책, 북한지역에 민주화 문제 등 까지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과업이 완료되면 그 후부터 본래의 훈련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관계당국에 재삼 요망되는 것은 훈련원의 설치목적이 승공통일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취하고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촉진하여 학술과 실사회에 걸쳐 공산주의자를 능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훈련하고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광범위한 연구자료의 제공문제를 비롯하여 이들 전문가의 처우방안이 깊이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표 25) 국토통일문제 전문가 훈련원(가칭)업무체계 및 편성도



※ 과정편성

1. 연구반
2. 교직원반
3. 공무원반
4. 군인반
5. 요원반
6. 일반반

※ 편제. 교수부, 연구실, 도서실, 행정반, 자료조사부

(5) 법 제 문제

이상의 계획실천과 훈련을 실천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법적조치이다. 모든 국가행위나 계획실천은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법적 조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것이어야 하고 훈련계획 실천에 차질을 피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하겠다.

전문가 훈련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을 열거하면,

첫째, 국토통일원에 추가기능을 부여하여 연구기능과 직원·부·처의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 계획등의 조정기능을 유지하며 각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 뒷 받침을 이루고 부설기관으로서 전문가 훈련원 설치를 규제하여야 한다.

둘째, 직원·부·처의 국토통일문제와 관련된 직책에 있는 자에게 추가 기능을 부여하여 국토통일문제 연구발전 및 이의 국민교육 실천에 기여토록 한다. 즉 직제개정에 의하여 비상계획관이나 홍보관에게 “국토통일에 관한 사항”의 직책을 추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셋째, 문교부 및 시·도교육위원회에 통일교육의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결 론

우리는 지난 25년간의 처절한 체험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닥아올 거센 세계사의 물결을 헤치고 방향과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토통일의 길을 거국 일치 매진하여야만 할 중대한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군사적 노력에 못지 않게 중대한 문제는 정신적 요소로서 공

산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위에서 사상적 무장을 기하고 국민단합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교육 시책이 절감되는 바이다. 오늘날 가중되는 공산당에 의한 시련과 도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이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과제는 오로지 범 국민적인 국민교육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교육은 능력있는 전문가의 확보 여부에서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란 용이한 것이 아니다.

국토통일 문제는 민족적 과업으로서 전체국민의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국민교육 역시 전 국민이 대상이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승공 이론의 확립은 교도의 지능수준을 요하므로 이의 전문가는 장기훈련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허다한 문제점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거시적이며 합리적이고 주도 면밀한 계획수립의 선행에서부터 착실한 실천으로만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승공사상 지도이념의 확립, 국가교육의 종합적 국가계획의 수립, 전문가 발굴과 훈련대책, 이에 따른 훈련기구 설치등의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 전문가 훈련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점에 대하여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전문가 훈련 계획은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국민교육 수립은 정세전망 등에 입각하여 수립된 국토통일과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전문가 훈련 초기는 과학적인 연구사업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가 완벽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전문가에 대한 충분한 처우책과 재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합리적인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는 문제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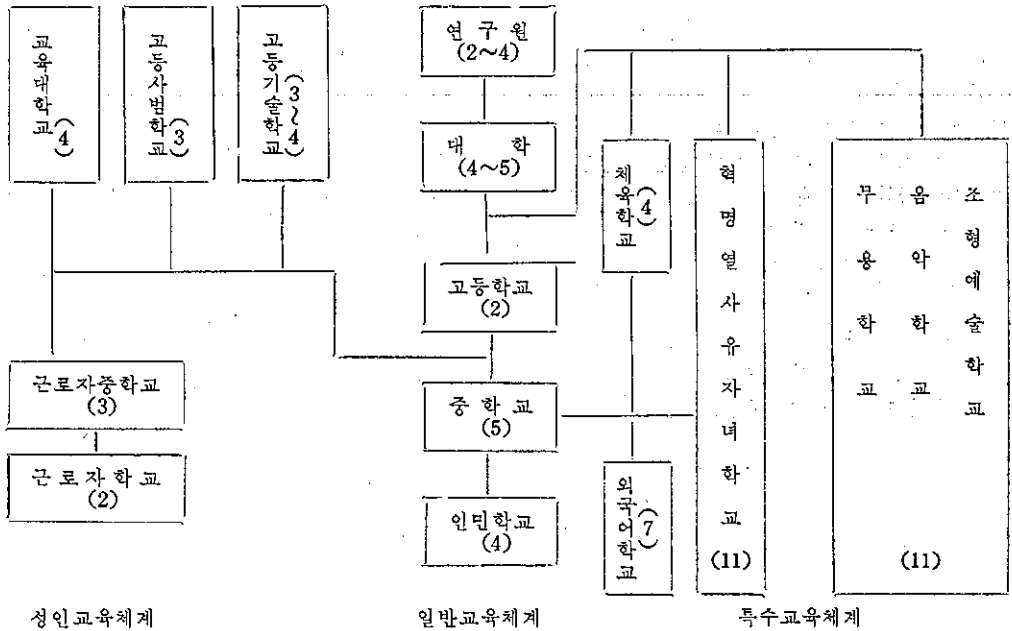
부 록

1. 북괴의 교육체제도
2. 각급학교 현황
3. 「바른 생활」교과에서의 반공비중
4. 중학교 승공교과서 목차
5. 고등학교 승공교과서 목차
6.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맑은 사회만들기 연찬계획」
7. 현지 학교교사 교육현황
8. 국토통일문제 연구 및 관장기관 일람

(부록 1)

북 피 의 교 육 체 계

(1966. 11. 25 공고)
(1967. 4. 1 실시)



※ 자료 북한 991

(부록 2)

각 급 학 교 현 황

70. 4. 1 현재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학 급 수	교 원 수
유 치 원	484	22, 271	653	1, 660
국민 학교	5, 961	5, 749, 301	92, 596	101, 095
중 학교	1, 608	1, 318, 808	21, 253	31, 207
인문계 고등 학교	408	315, 367	5, 251	9, 845
실업계 고등 학교	481	275, 015	4, 899	10, 009
실업 고등 전문학교	26	23, 440	637	1, 170
초 급 대 학	14	4, 907		228
교 육 대 학	16	12, 190	289	660
대 학 (교)	71	146, 414		7, 779
대 학 원	64	6, 640		165
총 계	9, 792	8, 008, 147	128, 603	169, 429

(부록 3)

국민학교 「바른생활」에서의 반공비중

교과서명	학 년						평 균
	1	2	3	4	5	6	
바 른 생 활	11	29	31	17	20	51	26%

국민학교의 경우 반공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바른생활」에서의 반공내용은 위에서와 같이 26%정도이며 그 내용은 그의 북피의 단행이나 간첩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학교 6학년 「바른생활」의 내용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느 반공포로의 이야기
2. 북한의 정치와 생활
3. 신의주 학생 의거
4. 자유와 노래
5.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6. 공산 피수에게 보내는 공개장
7. 항가리의 반공투쟁
8. 자유를 찾은 비행사

(부록 4)

중 학교 승공 교과서 목차

교과서명	장	절
승 공 통 일 의 길	1. 국토분단과 민족의 비극	1. 국토분단과 북피의 매국행위 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북피의 불법남침 음모 3. 6. 25사변과 그 교훈 4. 공산 격멸을 위한 고귀한 투쟁
	2. 북한의 실정	1. 공산독제정치 2. 경제생활 3. 사회생활 4. 교육과 문화
	3. 반공투쟁	1. 북한에서의 반공의거 2. 다른 나라에서의 반공의거
	4. 북한피뢰의 재남침 채동	1. 북피의 적화통일 흉계 2. 북피의 전쟁준비 3. 70년대의 정세
	5. 승공통일의 길	1. 통일의 필요성 2. 북한피뢰의 주장과 흉계 3. 승공의 민주통일의 길

(부록 5)

고등학교 승공교과서 목차

교과서명	장	절
자유수호의길	1. 전후의 세계정세와 공산주의 2. 공산세계의 현실 3. 공산주의 세계침략책동 4. 우리의 나아갈 길	1. 냉전의 개시 및 격화 2. 공산진영의 성립 3. 동서간 긴장의 완화와 그 본질 4. 평화에 대한 위협 1. 공산국가의 정치 2. 공산국가의 경제 3. 공산국가의 교육과 문화 4. 공산진영의 내분과 다원화 1.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침략계획 2. 소련의 침략책동 3. 중공의 침략책동 4. 북피집단의 침략책동 1. 반공의 필요성 2. 공산통일 총계의 사정과 정책 3. 세계적 시야에서의 승공의 길

71년도 밝은 사회만들기 연간 계획

(부록 6)

월 별	운동 내용	운동 방법	비 고
1월 설제의 달	①연간활동 계획수립(지침시달) ②가계부 반드시 적기	①계획 수립 협조 ②밝은 사회관계자회의 강연회(매월 정기 행사)	①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매월 8회) ②신정 바로식기운동(연말 연시 바로 지내기 운동계속) ③현수막 매월 게시
2월 친절의 달	①교통 및 서비스업체 중 사원의 친절운동 ②전화응답에서의 친절 ③“고맙습니다”인사의 습관화	①“고맙습니다” 리본달기 ②각종 서비스업체의 참여 권장 방문	①메스콤을 통한 홍보 및 표어 포스타(10만매) 전달(30만매)메포
3월 민족일 되찾기의 달	①국기 바로달기, 정중한 보편하기 ②민족적 긍지갖기 ③미풍양속 피살리기 ④조상숭배, 노인잘모시기	①바른 국기 보내기(해외 동포 포함)및 국기배례의 습관화하기(주장자 중행사) ②미풍장려 (모임 갖기)	①대한 뉴스 제작 ② 3. 1절 정중 계몽
4월 애향의 달	①마을정소(내앞길 내가 쓸기) ②푸른산 가꾸기 ③향교돌기 ④마을금고의 생활화	①애향인의 조직활동 ②식목행사(한사람 열그루 나무심기) ③마을금고 활용계몽	①식목일을 통한 활동(4월 5일) ② 4. 19기념일 바로 지내기
5월 보호와 선도의 달	①어린이 돌보기, 청소년 바로 이끌기 ②가정, 사회, 학교간의 유대강화 ③재건학교 운영의 합리화	①관계작품 모집(영화 제작용경) ②가정 학교, 사회관계자 회의 ③재건학교 책보내기, 교실 신속 기금 모으기	①노동절(1일), 법의날(2일), 어린이날(5일), 어머니날(8일), 혁명기념일(5.16) 잘지내기 ②작품응모의 활발화

6 월 도의 재건의 달	①공중도의 ②상업도의 ③승공운동의 생활화	①공중 예절 바로 알리기 ②소리자를 위한 캠페인 발이기 ③승공정신의 재무장강화 응변대회등 개최	①현충일(6월) 6.25동란일(6.25) 국기바로 달기 ②권농일을 중심한 증산운동 ③대한뉴스 제작
7 월 환경정화의 달	①깨끗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②여름철 위생지키기 ③공공시설 아껴 쓰기 ④교육적사회 환경 만들기	①조기청소 ②영화제작 착수 ③가두 계몽 ④주기적인 정화반 활동	제헌절(17일) 국기 바로 달기
8 월 명랑사회 확립 의 달	①바른말, 고운말, 쉬운말 쓰기 ②교통질서확립 ③시간, 약속 바로 지키기 ④밝은 노래 부르기 ⑤바른 오락 가려하기	①강조의 달 설정 ②피서지, 유원지의 명랑 화 ③요원 1일 교통순경	①광복절(8. 15)국기 바로 달기 ②영화 제작 완료
9 월 식생활 합리화 의 달	①가정식사의 생활화(저 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②부정, 불량식품, 불패 운동 ③요식업체의 솔선수범 견 장	①강습회 개최(영양식 식 탁개선) ②관계인사 초청 좌담회	①포스타, 표어(10만장)배포 ②영화배포 ③대한뉴스 제작
10월 문화의 달	①문화재 발굴에 호정신갖기 ②문화재 주변의 상행위 금지(애호반 편성) ③한집 한 스포츠 갖기 ④독서운동	①소풍도덕 지키기 ②가정 운동회 갖기	①현상 작품 시상식 ②국군의 날(1일) 개천절 추석(3일) 바로 지내기 한글날(9일) 유엔데 이(24일) 국기바로달기
11월 허례허식일소의 달	①의례준칙 지키기(혼·상 ·제례 간소화) ②검소생활하기(사치 풍조 배격) ③근면 저축(무분통장 갖 기, 마을금고)	①의례준칙 교육(어린이 부터 가르치기) ②사치풍조 배격 대회개최 ③마을금고 경진대회 개최	①학생의 날(3일) 반공의 날(24일) 기념행사 참여
12월 연말연시 바로 지내기의 달	①연말을 가족과 함께 조 용히 지내기 ②실맞이는 양력으로 분수 에 맞게 지내기 ③선물 안하기 운동 ④불우 이웃돕기, 장병 위문	①밝은 사회 유공자포상 ②중요거리 가두계몽 ③장병에게 위문품 보내기 ④불우동포에게 따뜻한 저울 마련해주기 ⑤교아원 양노원 위문방문	①대한뉴스 제작 ②포스타, 표어(10만매 배포) ③분석 평가(연간운동)

(부록 7)

헌직교사 교육현황

교육기관	과 정	대 상	이수학점시간	교 육 과 정	기관수
1. 교원교육원	교내과정	초등교원	80학점	교내에 준함	7
	사대과정	초중등교원	160학점	사대에 준함	1
	교육대학원과정	초중등교원	32학점이상	교육대학원에 준함	1
2. 초등교원 연수원	정 규 반 행 정 반	1. 유치원·국민교 공민교의 교원 2. 교육장, 장학사, 교감, 교육연구관	240시간 15학점상당	교육대학 이수정도 의 교육기초 과정 평가, 행정, 생활지 도, 각과지도	14
3. 중등 교원 연수원	정 규 반 행 정 반	1. 중등교원 2. 장학관 연구관 교감, 교장	240시간 15학점상당	사범대학이수정도 의 상과과목	4
4. 교육행정 연수원	정 규 반 행 정 반	1. 자급학교장 2. 교육장, 장학관, 연구관(사)	500시간	교육기초, 행정, 재정법규, 제도, 지도, 연구교양 및 특수활동이론실제	1
5. 중앙교육 행정연수원	정 규 반 특 별 반	초중등교원	30시간	교육행정의 이념과 실제	1
6. 기 타 재교육강습	각과교사강습	초중등교원	120~240시간	자교과의 보습	10개 과정

※ 대한교육연합회, "당면 문교정책에 관한 우리의 주장" 교원정책 자료 제 5 집

(부록 8)

국토통일문제 연구 및 관리기관 일람

1. 국토통일원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방안과 통일후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20조 3)

2. 외무부 국제연합과

국토통일문제의 연구와 이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문화공보부 조사국

- ① 공산진영정세의 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반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 ③ 민간반공활동에 관한 사항

4.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대공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이북 5도청

(조사업무연구업무)

- ① 이북 5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등 각 분야에 걸쳐 정보분석
- ② 이북 5도의 수북의 경우에 실시할 제반정책연구

(계몽선전업무)

- ① 반공의식교취
- ②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 ③ 남하피난단에 대한 사상선도

6. 중앙정보부

국내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자료수집작성 및 배포

7.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제반정책목표의 판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② 국가보안에 관련된 제반정책의 기획수립 및 정리에 관한 사항.

8. 한국반공연맹

- ① 반공활동에 대한 지도와 협조
- ② 아시아민족반공연맹과의 연락과 정보교환
- ③ 반공자료의 조사연구
- ④ 반공요원의 교육훈련
- ⑤ 반공사상의 계몽
- ⑥ 기타 각종반공사업

◇참 고 문 헌◇

1. 한국통일문제에 대한 모색 최 석 지 신 문 화 사

2. 교 육 행 정 강 길 수 저

3. 교 육 원 리 한 기 언 저

4.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아시아문제연구소 김 준 업 저

5. 한국교육20년 한국교육학회 전문직으로서의 한국 교원 황 종 건 저

6. 교직과 교사 정 태 서 저 현대교육총서(13)

7. 한국사회과학논집(제3.6집) 한국사회과학연구원

8. 양단된 국가의 통일문제 백 행 찬 저 대한공론사 간

9. 북 한 20년 유 현 지 대한반공교육원

10. 국방대학원연구논문집(1968년도 1970년도)

11. 한국안전보장논총 국가안보사무국

12. 안보관계자료집 국가안보사무국

13. 북 한 국제홍보사

14.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재문제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15. John S. Brubacher, A History of the Problem of Education 교육에 관한 역사
교직과 교사 p. 33

16. Robert Vlich., The Human Career, Harper Brothers, New York: 유형진역(인간과 교육)
교직과 교사 p. 226 민중서관 간

17. 한국신교육사 오 천 석 저

18. 교육정책연구 백 현 기 저 교육자료사

19. 통 일 논 총 제 1권 2호 국토통일원

20. 정 경 연 구 1966. 12월호(70년대의 남과 북) p. 153 박 준 규

21. 신 동 아 1970. 10월호 신 동 아 사

22. 국방학보 제 3집 1970 한국국방학회

23. 새 교 육 193호 1970년 11월호
교원양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김 중 철 저

24. 중 앙 70년 10월호

- | | | |
|------------------|-------|--------------|
| 영토의 통일과 정치적 리더쉽 | 착 기 벽 | p.p. 67~76 |
| 중앙핵우산과 한국통일 | 강 영 훈 | p.p. 78~83 |
| 남북한의 과학기술비교 | 김 윤 환 | p.p. 91~103 |
| 수단, 회의, 단계로 본 통일 | 김 정 진 | p.p. 104~112 |
25. 세 대 1964년 8월호
- | | | |
|-----------------|-------|------------|
| 중립화통한은 왜 위협인가 | 주 요 환 | p.p. 44~51 |
| 통일과 민족주의 세력의 형성 | 박 찬 세 | p.p. 60~67 |
| 한국통일방안 노트 | 박 동 운 | p.p. 68~97 |
26. 안전보장(창간호) 시사통신사
27.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한국반공연맹
28. 공산주의문제연구 제4·6권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29. 통일문제연구(제2집부록) 외교연구원
30. 사회개발(제1집) 보진사회부
31. 교원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1970. 12 대한교육연합회
32. 대학교육과 국방의 문제 한국교육학회
새 교 육 1970년 8월호
33. 국가안보와 교육의 역할 이 중 학
34. 안보문제(Series 1권·2권) 국방대학원
35. 사회사업훈련연보(1968)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36. 교도관, 신규채용자반 교재 교도관학교(공산주의 이론비판)
37. 국방연구 (제18호(1965)
제21호(1966)
제22호(1967)) 국방대학원
38. 시 사 1970. 9호 p. 20
39. 세 대 1970. 9월호 p. 136 세 대 사
40. 국토통일 { 1970. 7창간호 } 국토통일원
 { 1970. 8 2호 }
 { 1970. 9 3호 }
 { 1970. 10 4호 }
 { 1970. 11 5호 }
 { 1970. 12 6호 }
41. Current History(1970. 4) p.p 209~216
42. 대전략 제12권 제 8호 p. 89 국방대학원
43. 대학에서의 빈주시민교육 1964. 7 중앙교육연구소
4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New York AHred Knopf. 1956)
45. Howard Wriggins, National Integration; in Weiner, OP. Cit.
46. Guy, Wint What Happened in, Korea London: Oxford Univ Press.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대조동 38의 65

정간위십의필 : 26-6-114

민주통일의 길 ③ (논문집)

인쇄 1971년 9월 25일

발행 1971년 9월 28일

발행국토통일원

인쇄대한공론사

※ 이 책의 내용은 당원의 의사가
아니고 필자 본인의 의견임